

북한이해

www.uniedu.go.kr 2004

2004

북한이해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원에서 「통일문제 이해와
자매편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및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 01_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03_ 제1절 ■■■ 북한 이해의 관점
07_ 제2절 ■■■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12_ 제3절 ■■■ 북한의 변화전망

2

- 19_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구조
21_ 제1절 ■■■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21_ 1. 주체사상의 변화과정과 시대별 특징
24_ 2. 주체사상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26_ 3.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
28_ 제2절 ■■■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28_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36_ 2. 정권기관
51_ 3.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53_ 제3절 ■■■ 김정일 통치체제
53_ 1. 김정일 통치체제의 구축과정
56_ 2.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60_ 3. 김정일시대의 권력엘리트

3

- 65_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67_ 제1절 ■■■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70_ 제2절 ■■■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72_ 제3절 ■■■ 북한의 외교실태
72_ 1. 북한과 미국 관계



CONTENTS

77_	2. 북한과 일본 관계
80_	3. 북한과 중국 관계
83_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86_	5. 북한과 EU 관계
90_	제4절 ■■■ 대남관계의 변화

4

95_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97_	제1절 ■■■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97_	1. 북한군의 성격
98_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101_	제2절 ■■■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01_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104_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106_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109_	제3절 ■■■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109_	1. 군사전략
112_	2. 상비전력 및 장비
116_	3. 예비전력
117_	4. 전략무기
121_	제4절 ■■■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5

127_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 전망
129_	제1절 ■■■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구조
129_	1.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



134_		2.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138_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38_		1. 거시경제 현황
150_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160_	제3절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60_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162_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69_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173_	제4절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173_		1.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
178_		2.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87_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6

191_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193_	제1절	북한의 교육
193_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201_		2. 교육내용과 방법
207_		3. 학교생활
212_	제2절	북한의 문학과 예술
212_		1. 문학·예술정책
219_		2. 문학·예술 분야별 활동실태
228_		3. 문학·예술정책의 특징
230_	제3절	북한 교육과 문학·예술의 과제와 전망



CONTENTS

7

- 237_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 239_ **제1절** ■■■ 북한주민의 가치관
- 240_ 1. 북한식 가치관의 특징적 요소
- 247_ 2. 북한식 가치관의 형성과정
- 257_ **제2절** ■■■ 일상화된 조직생활
- 258_ 1. 조선소년단 입단과 청년동맹 가입
- 260_ 2. 노동당과 근로단체 조직
- 262_ 3. 인민반의 가두조직
- 264_ 4. 조직생활과 평정서 및 신원문건
- 266_ **제3절** ■■■ 명절과 세시풍속의 변화
- 267_ 1. 북한의 명절 개념
- 269_ 2. 북한의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
- 271_ 3. 김일성·김정일 생일 : '민족 최대의 명절'
- 272_ 4. 민속명절과 세시풍속의 변화
- 274_ **제4절** ■■■ 의식주 생활과 배급제도의 변화
- 275_ 1.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 277_ 2. 배급제도 하의 의식주 생활
- 286_ 3.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에 따른 변화



1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양재성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제3절 북한의 변화전망



요점

-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정치적 실체이다.
- 북한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력갱생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 속에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2002년 7월 대내 경제개혁 조치로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데 이어 대외 개방조치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개성공단특구 지정 등을 통해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제1 절 ||||

북한 이해의 관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통한 공존의 질서를 모색하며 함께 변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또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차원의 연구방법론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외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론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 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북한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방법론이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기여한 바 크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관점으로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해 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채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양태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을 완성하려면 통일의 상대자인 북한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 대북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북한관은 북한체제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이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소위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 그리고 세대간, 집

단간 이해관계 및 접근방법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이른바 '남남갈등'이라는 사회적 현상도 등장하고, 각 집단에 따라 인식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통일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북한사회를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적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사회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 이론잡지 「근로자」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인데, 이들은 북한의 선전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성·주관성·개인적 정서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줄 기본적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적인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에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있어 북한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 당국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직 남북간에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문제를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 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 또는 ‘북한적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매사에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 그동안 우리는 통일문제에서 이러한 상식을 등한시해 온 측면이 있었다.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사회주의국가와는 별개의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셋째, 북한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제2절 ||||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로서 나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 체제의 특징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혁명의 전위대인 공산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1956년 이전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이었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가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만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의 당규약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8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¹⁾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의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p. 43-45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10.2), 『월간 북한동향』, 1995.10, pp.173-174. 그러나 2년 후 북한은 1997년 10월 10일 노동신문 기념사실을 통해 종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라고 지칭하던 것을 ‘김정일의 당’으로 호칭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²⁾

그러나 북한의 수령은 현재까지 김일성 주석 개인에만 한정된 호칭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시점에서도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³⁾ 그러나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령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령으로서의 역할을 계승·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당과 군과 정권의 유일 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계획기구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⁴⁾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2) 김정일 논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ㄷ,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982.10.17) 참조

3)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서도 간혹 수령이라는 호칭을 붙인 바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지속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김일성의 경우와 같이 '위대한 수령...'과 같은 용례로는 쓰여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수령 호칭을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백과전서』, 제3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530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⁵⁾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북한은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아주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실례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탄광의 지배인이 생산된 석탄을 국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화력발전소에 보내지 않고 부득이하게 탄광노동자들의 식량과 탄광에 필요한 운반기계를 해결하는 데 소비하여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더라도 탄광지배인은 본인이 부정축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탄광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국가계획을 어겼으므로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은 예가 있었다.



5) 『경제사전』, 제2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0, p.118

그러나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급제도가 사실상 중단되고, 식량외에는 종합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도로 바뀜으로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해 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이며,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라는데 있다.

북한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헌법 제63조),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같은 불만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당·수령·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은 경제난 등으로 점차로 느슨해져 가고 있다.

제3절 |||| 북한의 변화전망

북한의 변화에는 대외적으로 개방과 평화공존의 길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다. 이 두가지 개념은 분리되기도 하고 또 연결되어서 이해되기도 한다.

북한은 아직 정치분야에서는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특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어느 나라든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면 대외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사망하기 직전의 '유훈교시'에서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방과 경제관계 확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과 자본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각 지방에는 종합시장이라는 상설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 상업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리주의 원칙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며 대남관계에서 점진적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

행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 공사와 개성공단 추진, 각종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표 등은 북한의 변화가 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면에서도 전방위 외교를 통해 대결보다는 관계개선을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바꾸었다.

2002년 들어 북한당국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위한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7.25),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9.12), 북·일정상회담 개최(9.17),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11.13), 「개성공업지구법」 제정(11.20) 등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교조적이고 완고하기만 하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의 변화 방향은 체제개혁보다는 경제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점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는 이른바 ‘신사고론’ 이나 상하이를 방문한 점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 소비재의 절대적 부족과 외화난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정

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과 개방화의 주변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도 북한체제 내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군사위주의 선군정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군이 중심이 되어 주민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군은 주민들의 사상해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주의와 외래사조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총대철학'을 강조하고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통한 경제건설을 다짐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령의 유일영도체제에 입각한 북한의 각종 사회통제, 주민통제정책은 변화의 억제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을 통한 주민통제 감시장치가 작동하는 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신사고'를 주장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인데 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향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1년 초 '신사고'를 주창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와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들이 "최단 시간 내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들어서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외자유치와 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첫째, 북·미 적대관계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미간 '교전관계'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붕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⁶⁾

둘째,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냉전시대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체제경쟁을 해왔다. 제로섬(zero sum)적인 분단체제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곧 체제의 붕괴나 남한으로 흡수통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동안 북한당국은 정책변화를 주저해 왔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는 했지만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새 정부와 남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하고 남북한 공존을 제도화하여야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체제에 따른 태생적 한계란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지도자의 교체기 때 새로운 지도부가 전임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공산당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책노선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일정권이 부자승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사상해방'이 필요하며, 그 '사상해방'의 핵심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하지 않고는 북한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6) 「연합뉴스」, 2002.12.26

2004년 북한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개발 의혹 파문을 수습하고 계획경제 개선노력을 가속화하느냐, 아니면 제2의 한반도 핵위기가 재연되면서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이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경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핵위기가 재연될 경우 생존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핵문제로 북·미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은 2002년 10월 이후 조성된 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내부의 정책변화 여부는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경북대학교 출판부, 『새로운 북한이해』, 2003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 1999
- 김경오,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 김구섭,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0
- 김동규,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2000
-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백학순 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 북한연구학회,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 2000년도 동계학술회의 자료, 2000.2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9
- 양영식 외,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1999
- 연합뉴스, 『2003년 북한연감』, 2002
- , 『2004년 북한연감』, 2003
-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신지사원, 1999
- 통일부, 『2002년도 통일교육지침서』, 2001.12
- , 『북한개요』, 1999
- , 『북한개요』, 2003
- , 『통일백서』, 2003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3~2004』, 2004
- 한용원, 『북한학』, 오름사, 1998
- 방완주, 『조선개관』, 평양 : 북한백과사전 출판사, 1988



2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구조

》 김용재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제2절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제3절 김정일 통치체제



요점

-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나 김정일 통치체제 등장이후에는 '붉은 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하위 통치이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확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의 정권기관은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 등 권력분립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총비서,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을 총괄하고 있는 유일영도체제이며, 선군정치 노선과 김정일 측근세력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제2기 김정일 통치체제는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2002년 이후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개발,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 등 대외지향적 변화와 더불어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긴장국면을 지속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제1 절 ⅢⅢⅢ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변화과정과 시대별 특징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즉 주체사상은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이며 북한의 지도이념이다.

북한에서 주체·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이었으나, 처음부터 체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북한 당국이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바로 잡자”거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¹⁾ 소위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이 정식화된 것도 196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진행된 일이었다. 김일성 수상은 1965년 4월 반동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1) 노동신문의 기사제목들 기준으로 하면 1965년 9월 30일 김철희가 쓴 「당 창건 20주년을 맞으며: 조 선혁명과 우리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기사가 최초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에 해당한다. ‘주체사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보다 앞선 1962년 12월 19일 노동신문 논설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에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표명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다.²⁾

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지도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³⁾

그후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동시에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정권은 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상의 변화를 겪어 왔다.⁴⁾

1950년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추방논리로서 주체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했다. 나아가 1965년에는 주체사상이 ‘남조선 위정자들의 외세의존 사상’에 대치되는 반명제(안티테제)로 변모한다. 1967년에는 주체사상이 김일성 중심의 지배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자 주체사상은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이론화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 주석의 소년시절이 제



2)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제기했을 때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1956년 1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언급하였고, 1년 뒤인 1957년 12월 5일 정치에서의 자주를 주장했는데, 이때 정치란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2년 1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다시 내세웠다. 그런데 1966년 당시 정치에서의 자주란 북한의 대외관계, 곧 외교에서의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각각 등장하던 정치노선을 주체사상의 4대 원칙으로 정식화한 것은 1967년 이후의 일이었다.

3)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4) 최대석, “주체사상과 북한체제”,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 2000.3, pp.145-193

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이상화 논리를 주체사상의 토대 위에서 전개해 나갔다. 북한 당국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주창하며 주민생활의 각 부문에 주체적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결국 김일성 주석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은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이상화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절대적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당시 북한당국은 주체위업은 대를 이어 지속해 나가야 하며, 주체위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1986년에 김정일이 제기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기존의 '수령론'을 보완하고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도덕과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위험을 느낀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차별성·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대안적 논리를 들고 나온다.⁵⁾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해 버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을 '참다운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참답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⁶⁾ 그러나 1980년대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데다 1990년대 들어 심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우리식 사회주의(1991), '붉은기사상'

5) 강성운,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3, pp.9-23

6)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을유문화사, 1997, pp.181-190



(1995) 등으로 주체사상을 보완한 것은 북한사회가 직면한 내부모순과 외부 압력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8년 9월 김정일 지도체제가 공식적으로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 원리로서 헌법에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 이상화에 동원되었던 주체사상이 김정일시대에 맞추어 점차 김정일주의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컨대 김일성 사후 199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 리론」시리즈는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를 보여주는 저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⁷⁾ 또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김정일 시대에 제시되고 있는 각종 정치구호들인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은 주체사상의 하위 통치이념인 동시에 '김정일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주체사상의 하위 이념들은 북한 지도층이 주체사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과 국가기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구호들은 주체사상의 기존 논리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기존 논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확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이 북한체제의 지도이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시대 이후 정세변화에 의해 하위 통치이념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 주체사상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들⁸⁾



7) 정성장, 「김정일시대의 정치체제 특징연구」,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3.11, pp.17-21

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어 주체사상은 북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서 계속 그 위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조선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⁹⁾고 되어 있으며, 1998년 개정헌법 제3조는 북한정권이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북한 주민들은 교양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일체화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지배층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지 못할 때에 제국주의의 사상과 그 문화적 침투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주체사상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적인 요구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⁰⁾

또한 주체사상이 인민들에 대한 지도지침의 역할을 하며 종국적 승리의 한 길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해석한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리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인민대중을 이념적으로 교양하고 신념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을 지도지침화 하기 위해서는 ① 주체사상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 ② 충실

8) 김정일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등

9)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규약 전문에는 "말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말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10)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진술북스, 2000, pp.38-39

성 교양, ③ 혁명전통 교양, ④ 계급교양, ⑤ 집단주의 교양, ⑥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 일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만이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적 동력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령이 창시한 주체사상은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 무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에는 새로운 정치적 구호들이 등장하면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

주체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심각한 논리적 취약성과 함께 현실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은 1950년대 당시 김일성 수상이 주체 확립의 의미를 설명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 결성과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일이 어떻게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김일성우상화’라는 왜곡된 목적에 동원되면서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이 구조화되었다. 1970년 이후 북한당국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므로 주체성을 갖고 주인다운 태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령론’을 내세워 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되려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인민대중들의 ‘주인다운 태도’를 완전 배척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198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 없이 부자세습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대를 이어 주체위

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 주민들을 부단히 설득했으나, 이 설득 자체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1990년 이후 북한당국의 최대 고민은 그토록 믿었던 ‘형제나라’ 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다. 북한당국이 서둘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북한 당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체사상의 내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 논리적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정치적 의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북한 당국이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 사상체계를 바꾸어 나가느라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 들어 북한당국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붉은기사상’ 등의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체사상의 절대성과 혁명성은 북한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더욱 폐쇄적 체제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¹⁾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신격화된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었고, 주체사상이 북한 존재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원리인 동시에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사상은 사상적인 무오류성을 지닌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처럼 절대성과 혁명성을 기조로 하는 주체사상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면 북한의 대외개방이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에서 기여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1997년 4월 우리나라로 귀순한 이후 여러 차례의 증언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¹²⁾

11) 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p.52

12)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pp.355-359



제2절 ⅢⅢⅢ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조직원칙과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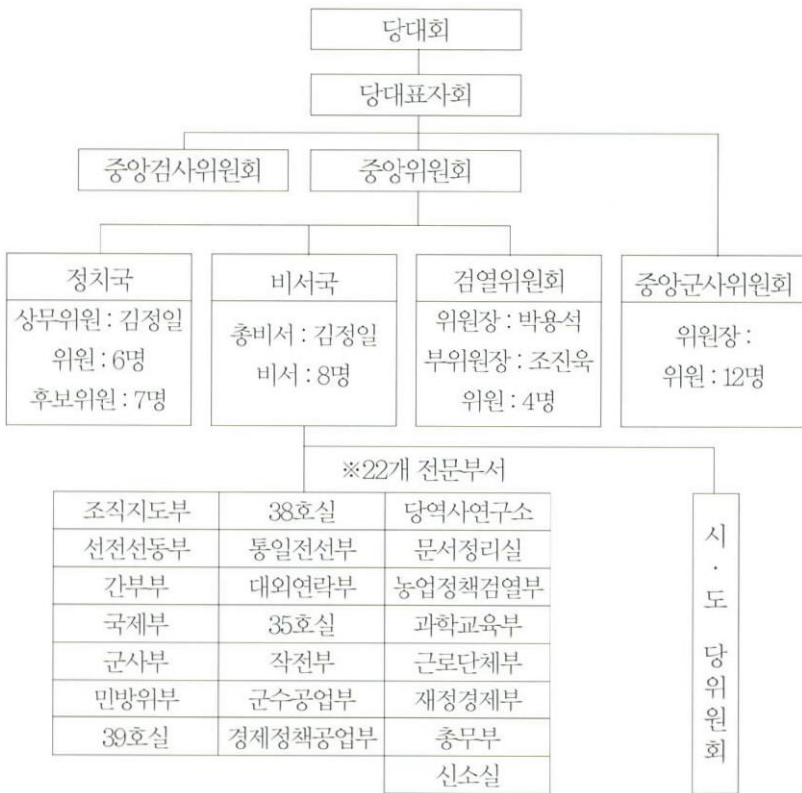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국가의 권력구조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이 당에 집중되며, 당 우위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도 당의 위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있으며, 당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철저히 지도·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규약 전문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 이고 '최고형태의 조직' 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헌법에 의해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¹³⁾,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¹⁴⁾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 2-1〉 조선노동당 조직체계



* 자료: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4.1

13) 『로동신문』, 1998.8.22

14)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정권 건설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정권 건설 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6, p.133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¹⁵⁾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¹⁶⁾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이다. 즉 조선로동당은 북한사회의 전체적 수준에서 보면 인민대중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항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전 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지배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령과의 관계에서 조선로동당은 전체사회를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



15)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p.95

16) 우정, 앞의 책, pp.113-115

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당의 기능과 역할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당 조직들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전체 사회를 지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전문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당 건설 및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의 각급 최고지도기관의 첫째 기능으로 못박고 있다.¹⁷⁾ 결국 수령의 유일체제하에서의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으로서 수령의 사당(私黨)일 뿐이다.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는 레닌이 고안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 조직 원칙은 ① 당원은 조직에 복종하는 '조직우위의 법칙', ②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지배의 원칙', ③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는 '상급 당조직의 원칙', ④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중앙지배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 당 구성에서의 민주집중제는 하부조직 대표가 상급 당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상향식 간접선거체제를 의미하며, 운영에서의 민주집중제는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에서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말한다.

북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당 지도기관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말하며, '중앙집권제'는 모든 권력이 중국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의 발달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묵살되고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중앙집권제 원칙만 남는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

17) 이종석, "북한체제의 성격규명: '유일체제' 론의 관점에서", 이우진·김성주,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6, p.802

18)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나남, 1997, p.75

장은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사업체제와 질서가 될 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¹⁹⁾ 즉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당원이 김정일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일 뿐이다.²⁰⁾

또한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당에 의한 통제는 당의 관료가 행정관료를 겸하는 겸직장치, 행정기관 및 부서에 상응하는 당 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북한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승리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각급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주인으로서 생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당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당적 지도라 함은 당이 주도하는 생활지도와 정책지도를 말하는데, 김정일은 생산현장에서는 정책지도나 생활지도 모두 중요하지만, 행정 및 경제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도보다는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철저히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정권·행정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는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²¹⁾ 과거에는 행정기관 내의 당 조직에 있어서 하급 행정기관에 당원수가 많다 하여 상급 행정기관보다 더 큰 당 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김정일은 이를 시정하여 당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초급당 이상의 당 조직에는 행정간부가 당 간부를 겸임하는 것을



19)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1997』, 1996, pp.45-46

20) 이상우, 앞의 책, p.76

21) 김성철,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42-44

급하고 중앙당에서 파견하는 전문 당 간부가 당사업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북한사회의 전 부문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당 기구와 역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대회이며, 5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 대회는 당규약에 따라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결정사항을 추인해 주는 명목상의 기구일 뿐이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 대회까지 모두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어 그때마다 당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 왔으나, 제6차 대회 이후 지금까지 당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이 당 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인민을 교육시키고, 당의 업적이나 과업을 널리 선전하며, 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²²⁾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위원·후보위원·준위원으로 구성되며, 표결권은 정위원만 갖되 발언권은 후보위원과 준위원에게도 준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 총비서·당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위원을 선거하고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은

22) 전인영 편, "조선노동당 : 북한 사회의 지도 세력",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p.218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후 2003년 말까지 전원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당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당 비서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특히 당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과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핵심부서이다.

지방당 조직은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등 단위뿐만 아니라, 1급과 2급의 공장·기업소와 같은 생산단위에도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당의 기층조직으로는 당세포, 각 기관의 부문당, 초급당, 분초급당 등이 있다.

각급 당조직은 집행기관인 당 위원회를 갖는다. 당 위원회는 군과 국가 기구,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급 정치·사회조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비롯하여 계급, 교양, 당 정책 관철을 위한 고무 추동, 당 간부의 육성 등을 임무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당 위원회는 당의 지도 역할을 기층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보충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에 따라 각급 당 위원회는 당 간부의 자질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간부양성 및 재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컨대 중앙에 김일성고급당학교, 각 도에 공산대학, 각 군에는 군당학교가 설치되어 있다.²⁵⁾ 이 밖에도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보도·출판매체로 '로동신문사'와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있다.



23) 연합뉴스, 「2004 북한연감」, 2003.12. 9, p.164

24)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 비평사, 1998, p.803

25)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12, p.52

26) 정성장, 「북한의 정치변동 :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2002. 2, pp. 35-67

(3) 조선노동당과 군(軍)의 관계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즉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내 각급 단위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있다. 이 조직은 당 조직지도부에서 지도한다.

그러나 김정일 지도체제 출범 이후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선군정치를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당과 군의 관계 및 위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4) 외곽단체

북한의 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연결고리(引傳帶 : belt)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단체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의

종교단체들이 있다.

2.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 하에 사회 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계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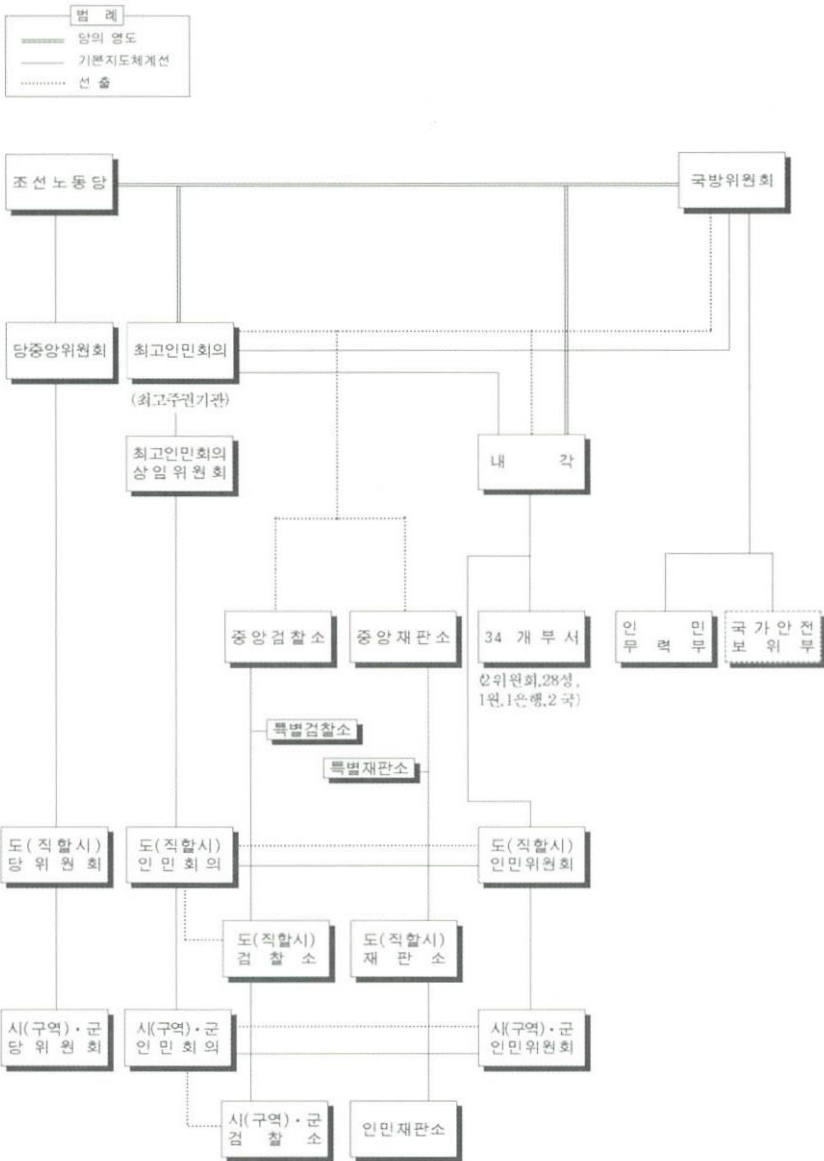
1998년 개정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설치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27)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398호, 1998.9, p.8

〈그림 2-2〉 북한의 권력체계



*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조』, 2004.1

(1)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1992년 7차 헌법)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②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③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④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이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 명당 1명씩 선출되었으나, 1992년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정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를 선거·소환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

원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의 선거·소환,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위원장·상과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선거·소환한다.

그 밖에도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해 심의·승인하며,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 밖에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나 동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체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또는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원로인사 중 약간명을 명예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와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가 있다. 1992년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 ②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③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 수립, ⑤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⑦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⑧ 내각의 위원회·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 ⑨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 ⑩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하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① 조약의 비준·폐지, ②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③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④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의 사업을 조직·지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이 밖에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자체의 정령과 결정·지시를 내리며,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시)·시(구역)·군 단위에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②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③ 해

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④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지시 폐지 등이다. 지방인민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회의의 소집과 회의성립·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와 비슷하다.

(3) 행정기관

1) 내각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사업집행을 위하여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사업에 관해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내각은 ① 국가정책의 집행대책 수립과 국가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수정·보충, ②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폐지 및 사업지도, 국가관리기구 개선대책 수립, ③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실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④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과 그 밖의 여러 부문 사업의 조직·집행, ⑤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⑥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⑦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⑧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⑨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현재 북한의 내각은 2위원회, 28성, 1원, 1은행, 2국 등 34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

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아울러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 밖에 내각 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가지며, 새로 선출된 내각 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하고, 위원회·성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며, 회의에서는 내각결정·지시 집행대책 등을 토의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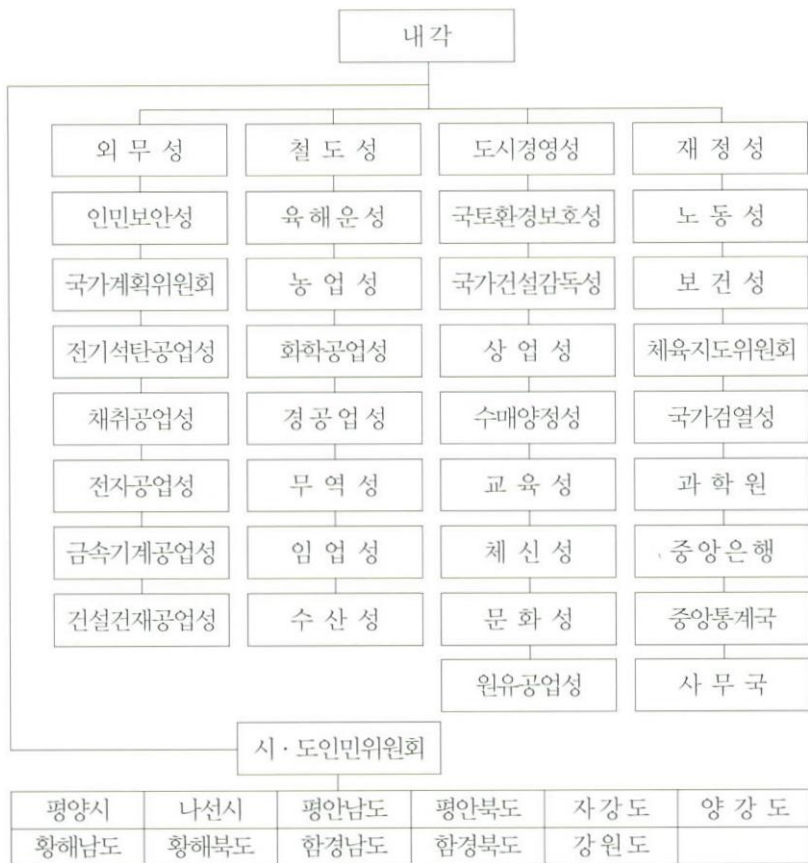
2) 지방인민위원회

도(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998년 헌법개정 전에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지방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지방인민위원회는 ① 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②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 집행, ③ 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집행, ④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 ⑤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⑥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⑦ 해당 지방의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통제사업 실시, ⑧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및 하급 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지시의 폐지 및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민회

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이 밖에도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직은 범법사실이 드러난 행정관료들에 대해 사법처리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⁸⁾

〈그림 2-3〉 행정기관



*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4.1

28)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2001. 12, p.442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기관으로 해당 지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지도·감독도 받는다.

4)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계층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 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표 2-1〉 해방 당시의 남북한 행정구역(1945년)

구분	도	부(시)	군	읍·면	리·동	비고
남한	9	12	134	1,549		
북한	6	9	89	809	10,120	강원도는 중북
계	15	21	223	2,358		

특히 1952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3계층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 때의 개편기준은 군 구역을 축소·조정하고, 리를 병합하여 확대·개편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군은 98개에서 168개로 늘어났으며, 리는 10,120개에서 3,658개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중앙집권화를 통한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은 2시(직할), 9도, 1특급시, 25시(일반), 26구역, 2구, 2지구, 148군 (148읍)과 하부단위로서 3,230리

와 1,136동, 267 노동자구로 되어 있다. 구역은 평양·함흥 등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자구는 노동자가 400명 이상되는 광산, 임산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기업소 등에 설치된 행정구역으로 시·군의 관할 구역에 해당된다.

〈표 2-2〉 북한 지방행정구역 현황(2004년 1월 현재)

구분	시·군·구역·구·지구						리·동·노동자구			도 인민위 소재지
	특급시	시	군	구역	구	지구	리	동	노동자구	
평양시			4	19			118	284	10	-
나선시							12	20	-	-
평안남도	1	5	19		1	1	396	193	31	평성시
평안북도		3	22				484	88	31	신의주시
자강도		3	15				229	68	23	강계시
양강도		1	11				143	25	67	해산시
함경남도		4	15		1	1	465	160	35	함흥시
함경북도		3	12	7			253	134	44	청진시
황해남도		1	19				419	26	11	해주시
황해북도		3	16				332	77	8	사리원시
강원도		2	15				379	61	7	원산시
계	1	25	148	26	2	2	3,230	1,136	267	-

현행 북한의 지방행정계층 구조는 시·도와 시·군·구역으로 이루어지는 2계층제이다. 1948년 9월 최초 인민민주주의 헌법은 도·특별시, 시·군, 읍·면, 리를 행정단위로 하는 4계층 구조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계층 구조로는 6·25 이후 복구계획 등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의 지시나 동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1952년 12월 면을 폐지하고 리를 광역

화시킴으로써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부응하는 행정·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드디어 행정단위로서의 리를 폐지하고, 생산단위로서의 성격만 지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 가계 우상화와 한국을 의식한 행정구역 수의 확대를 고려한 조치였다면, 개성직할시의 일반시로의 격하(2003. 9), 남포특급시, 나선시,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최근 행정구역 개편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²⁹⁾

(4) 사법·검찰기관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측되어 있고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시)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는데 이와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재판은 3급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29)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12, p.15

①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91조, 제110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헌법 제161조). 중앙재판소의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시)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2조).

② 도(시) 재판소

도(시)재판소는 도(시)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³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과 같다.

도(시)재판소는 자기 관할 도(시)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시)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시)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도(시)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상의 지도와 사업정책상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30) 도(시)·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③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 등)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④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나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헌법 제155조).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³¹⁾와 공소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이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전국에 걸쳐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수행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³²⁾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헌법 제91조 11항), 각급 검찰소 검

31) 북한에서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직접 참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등 직접 수사를 행하는 수사참여적인 역할보다는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1992, pp.85-86

32) 북한의 각급 검찰소는 '초급당' 조직을 갖고 있는데 초급당을 통하여 각종 지시, 정책노선을 각급 검찰소에 하달하고 각급 검찰소의 구성원들은 당의 지령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들 구성원은 당적을 가져야 하며, 검사들도 의무적으로 각종 당대회, 학습회, 역사연구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

사의 임명·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49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2조).

도(시)검찰소에는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가 있으며,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와 서기를 둔다.

3) 변호사제도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제도는 실제로 있어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변호사는 개개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변호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변호사도 월급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북한은 1948년 제정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제도를 규율해 왔으나,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³³⁾을 채택하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에 대한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 보수기준 결정 등 중요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분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선변호사회는 각급 변호사 위원회



33) 북한의 변호사법은 5장 3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변호사 자격, 제4장 변호사 보수, 제5장 변호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의 연락을 긴밀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북한에서는 폐쇄체제의 특징과 역할 분화의 미비성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³⁴⁾

첫째, 북한은 역할의 분화가 미흡하며 소수집단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모든 역할을 담당하여 다원적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투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수용기관이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인식 단계에서부터 김정일 등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에서는 정책결정의 범위가 총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토론과정, 검토, 건의가 미흡한 편이며, 최고결정자만 정책을 결정하는 독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정책참여문제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최고결정자의 개인이익이나 당이익이 우선시 된다. 즉 정책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가 아니라 김정일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시하고 있는가에 있다.

결국 북한에서 거의 모든 정책결정은 당비서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개인의 의사와 주관에 의해 결정되며, 당비서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화되며,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 등의 형식적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상적인 정책결정상태를 농업위원회의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34) 심익섭 외,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2002.5, pp.162-171

35) 고영환, "북한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8, pp.21-24



농업위원회 산하 농업과학원에서 냉해에 견디는 새로운 벼 품종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농업과학원은 이 사실을 농업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농업위원회에서는 벼품종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처 또는 국)에서 이 새 품종을 양강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등 냉해를 많이 받는 지역에 심기로 하고 정책초안을 작성한다. 일단 초안이 작성되면 담당자→처장(혹은 국장)→부위원장→위원장을 거치며 재가를 받는다.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관련문건을 당 중앙위원회 농업정책검열부에 넘기면 농업정책검열부는 문건을 접수하는 즉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당 농업정책검열부는 새 품종이 김일성부자의 교시나 지시, 조선노동당의 정책이나 노선과 부합되는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일단 검토작업에서 통과되면 당중앙위원회 농업정책검열부의 이름으로 김정일 총비서에게 제의서(提議書)가 올라간다. 김정일이 해당문건을 보고 동의하면 문건에 사인을 하여 당 농업정책검열부로 내려보낸다. 농업정책검열부는 김정일이 사인한 문건에서 해당부문 문장만을 골라 해당부서(농업위원회, 농업과학원 등)에 전달하며, 이때부터 해당부서들은 절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정책결정체계는 개방적·공개적이라기 보다는 폐쇄적,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공식적 정책기구인 당정치국,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며, 김정일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통과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실리사회주의'의 강조에 의해 40~50대의 테크노크라트의 등용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의 독단형·독점적 정책결정체계에 일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제3절 ⅢⅢ 김정일 통치체제

1. 김정일 통치체제의 구축과정

1970년대 들어 유일체제를 더욱 강화한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당 비서처와 내각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66년 24세의 나이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1969년 27세에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다.³⁶⁾

또한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장이던 1973년부터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2월 당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군 관련 고위 직책을 갖게 됨과 동시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36)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p.282; 『북한인명사전』, 대한매일신보사, 2000, p.385



대부분의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군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1984) 등을 주도하였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86)과 '우리식 사회주의' (1991)의 주장 등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³⁷⁾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 군사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당·정·군 등 주요 분야에 걸쳐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영생탑'을 건설하고 '주체'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1997.7)하였으며,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1997.10)되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김일성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서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일성 사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강화한 김정일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기 김정일 지도체제의 진영을 구축하게 되었다.



37)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기», 지식공작소, 2000, pp.42-56

2.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이다. 즉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당·군을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군·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³⁸⁾ 따라서 북한의 모든 정치조직과 기구, 인민들은 수령의 통일적 지휘 아래 하나같이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관찰해야 한다.

둘째, 김정일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강성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는 1998년 2월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데 이어, 1998년 8월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구체화되었다.³⁹⁾ 이 정론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수령중심의 강성대국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걸출한 수령, 위대한 애국자, 강철의 영장을 영원한 국가수반으로 모시는 것은 사회주의 자주강국 건설의 생명이며 최고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⁴⁰⁾

3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39) 「로동신문」, 1998.8.22

40)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6. p.248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주체사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이 강성대국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으며, 김정일이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것은 김정일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이 정론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의 강국, 군사적 강국, 경제의 강국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는데, 북한은 이미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강국’의 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의 강국’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룩된 나라”를 말하며, ‘군사의 강국’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되어 그 어떤 원수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보루”를 뜻하고, ‘경제의 강국’이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⁴¹⁾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의 나라”라고 지적하는 등 전례 없이 김정일사상을 강조하였다.⁴²⁾

이 같은 강성대국 건설에 관한 북한의 구상은 2000년에 발간된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사상」이라는 두권의 책자를 통



41)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9.9

42)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지”(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1999.1.1

해 더욱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더라도 총체적인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에게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군사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농민이 아닌 군대로 삼고 있다. 북한 군부의 영향력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조선노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등 군 관련 기념일이 공휴일이자 국가적 명절로 지정되었다. 특히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권력 서열이 2~15위까지 부상하였다.⁴³⁾

이처럼 군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가리켜 북한에서는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데, 북한 핵위기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만승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등 군사우선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였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정립된 것으로 주체사상은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국가의 자주성을 수호하는 것은 선군정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여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

43) 유석렬, 『혁명에서 생존으로』, 대영정판, 2001.10, P.341~343

44)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 2003.3.21

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⁴⁵⁾로 규정된다. 북한은 이러한 군 중시정치를 “김정일동지의 기상이자 우리당의 기질이고 김정일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⁴⁶⁾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데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군사중시사상을 반영한 국방위주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선군정치론은 오늘날 김정일체제 유지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은 선군정치론은 군사지도자들의 권력핵심의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자신이 1998년 9월에 이어 2003년 9월에도 국가최고의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또한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혁명1세대인 이을설, 백학림 등 군부 원로들은 일선에서 퇴진하였지만 군 부실세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용무 등 핵심계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선군정치의 표방으로 군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2003년 3월 노동신문은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동굴, 금강산발전소, 문화유적지 건설 등 대부분의 중요 경제건설 사업과 각종 우상화 선전물을 군인력으로 건설했다.

더욱이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한편, ‘군민일치 모범군쟁취 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운동’을 벌여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하고, 2002년부터는 ‘군민일치’⁴⁷⁾·관병일치⁴⁸⁾·군정배합⁴⁹⁾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최근에 들어서는 ‘선군후로’ (先軍後勞), ‘총대가정론’을 주장하면서 혁



45) 「로동신문」, 2003.4.3

46) 「로동신문」, 1998.10.10

47) 군민일치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 같은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 p.338

48) 관병일치란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 p.514

49) 군정배합이란 “군사일군들과 정치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의도대로 군사사업과 정치사업을 벌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 2002.8.3

50) 북한이 2003.5.14 개최한 ‘김정일의 선군혁명로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을 다시 강조하였다.

명의 주력군이 노동자·농민이 아닌 군대임을 표방하고 있다.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1월의 당보·군보·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북한당국이 모든 부문·분야에서 '종자론'⁵²⁾을 관철하는 것을 '노동당의 방침'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북한변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북한이 2002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령·사상·군대·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도 대내외 정세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인식하에 체제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⁵³⁾

또한 2003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위해 주민을 독려하였다.

이어 2004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등을 '3대전선'으로 설정하고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⁵⁴⁾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2002년에 들어서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지구 확대,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을 추진한 사실을 감안할 때, 대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51) 「로동신문」, 2001. 1. 4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지난 시기 성과에 만족하거나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선이 겪고 있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52)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비서가 논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소재를 잡고 주제를 설정하며 사상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 중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53)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572호, 2002.1.4.

54)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675호, 2004.1.1

55)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정치사」, 한국방송출판, 2002.3, pp.363-378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⁵⁾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⁵⁶⁾

3. 김정일시대의 권력엘리트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성공과 신분이동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당원이 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생래적 성분이 좋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군대 등 소속단체의 추천과 소속단체 간부의 입당보증서를 받아야 한다.⁵⁷⁾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노년층(항일빨치산세대), 장년층(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청년층(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세대)의 3합(三合)구조로 되어 있으며, 권력핵심은 대부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김정일 비서의 등장 이후에는 생래적 성분과 함께 일정 범위내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1998년 9월 김정일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전문성을 갖춘 40~50대 기술관료 내지 경제전문가들이 당·정 요직에 전면 배치되는 대신에 50~70대 노년층은 퇴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7년 각 시·도의 농정 책임자인 농촌경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면서부터이다. 곧이어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도·군당 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이 곳곳에서 교체되었다. 11개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



56)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지식비평사, 2001.9, pp.412-414

57) 연합뉴스, 『2004 북한연감』, 2003.12, pp.170-171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80%를 넘어섰다.

또한 1998년 7월 26일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선거에서는 대의원 687명의 64%에 해당하는 449명이 교체되었는데, 9기 대의원선거 때의 교체폭 31.4% (214명)에 비하면 2배가 넘는데, 이는 각 공장·기업소의 직장장·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경제기관 실무간부 등이 대의원에 대거 발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가운데 국가지도기관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젊은 층으로의 세대교체와 함께 실무분야에 밝은 신진 테크노크라트의 등용이 특징적이었다.

새로 발탁된 박봉주 내각 총리는 2002년 4월 장성택, 박남기 등과 함께 북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인물이어서 향후 남북경제협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 선임부위원장으로 승격된 연형묵 전총리도 경제전문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최근에 새로 부상된 인물들의 대부분은 1960년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대학을 다녔거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그와 인연을 맺었던 자들이다. 이러한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 흐름을 가늠해 보는 척도는 바로 주석단의 서열변화라 할 수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국방위원 등 북한군부가 권력핵심에 확고히 자리잡은 데 비해, 조선노동당 간부의 서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이 과거와 같이 권력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3〉주석단 서열의 변화

서열	김일성 장의위원회 (1994.7.8)	정권수립 50주년 기념 열병식 (1998.9.9)	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2000.10.10)	조선인민군 창건70돌기념 열병식 (2002.4.24)	정권수립 55주년 기념 열병식 (2003. 9. 9)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사망)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강성산	이종옥(사망)	박성철	조명록	조명록
4	이종옥(사망)	박성철	김영주	박성철	박성철
5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주	김영주
6	김영주	전문섭	김영춘	홍성남	박봉주
7	김병식(사망)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김영춘
8	김영남	김영춘	이을설	김일철	김일철
9	최광(사망)	김일철	백하림	이을설	연형묵
10	계응태	이을설	연형묵	전병호	이용무
11	전병호	홍성남	한성룡	연형묵	전병호
12	한성룡	전병호	계응태	한성룡	한성룡
13	서운석	연형묵	김철만	계응태	계응태
14	김철만	이용무	최태복	김철만	김철만
15	최태복	계응태	양형섭	최태복	최태복
16	최영립	한성룡	최영립	양형섭	양형섭
17	홍성남	양형섭	김국태	최영립	김국태
18	강희원(사망)	최태복	김중린	김국태	정하철
19	양형섭	김철만	김용순	정하철	김중린
20	홍석형	최영립	이용무	김중린	장성우
21	연형묵	김국태	김익현	김기남	곽범기
22	이선실	김기남	조창덕	김용순	노두철
23	김철수	김용순	곽범기	이용무	전승훈
24	김기남	김중린	김운혁	김익현	김운혁
25	김국태	홍석형	이하일	이하일	이을설
26	황장엽(광명)	백하림	전재신	조창덕	백하림
27	김중린	김익현	박기서	곽범기	김익현
28	서관희(차형)	전재신	이종산	김운혁	이종산
29	김용순	박기서	김용연	전재신	김용연
30	김환	이종산	김영대	장성우	이하일
31		김용연	유미영	박기서	박기서
32		이하일		이종산	전재신
33		조창덕		김용연	김영애
34		곽범기		김영대	유미영
35		김운혁		유미영	
36		김영대			
37		유미영			

* 출처 : 통일부 자료 종합 「주간 북한동향」 등

참 고 문 헌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3
- 고영환, "북한의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8, pp.21-24
- 김성철, 『북한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9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1126호, 1998.9.10
- 대한매일신보사, 『북한인명사전』, 2000
- 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 _____,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1992
-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일시대의 북한』, 1983
-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서재진, 『식량난에서 IT 산업으로』, 미래인력연구원, 2001.7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심익섭 외,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2002.5
-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_____, 『주체사상의 종언』, 을유문화사, 1997
- 연합뉴스, 『2002년 북한연감』, 2001.12
- _____, 『2004년 북한연감』, 2003.12
-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을유문화사, 2000.3
-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2000
-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진술박스, 2000.8
- 유석렬, 『혁명에서 생존으로』, 대영정판, 2001.10

참 고 문 헌

- 이상우, 『북한정치 입문』, 나남, 2000
-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2000
- _____, 『현대 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역사비평사, 1998
-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 읽기』, 지식공작소, 2000
-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 이우진·김성주 외,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 정성창, 『김정일시대의 정치체제 특징연구』,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3.11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1997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 _____, 『2004 북한개요』, 2003.12
- _____, 『북한권력기구도』, 2003.1
- 최 성, 『김정일과 현대 북한정치사』, 한국방송출판, 2002.3
- _____,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방송출판, 2002.3
- 황장영,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터넷과 북한』, 2002.12
-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6
- 이종희 외,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생각의 나무, 2003.9



3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 양재성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제2절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요점

- 북한은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속에서 대외적인 고립탈피 및 경제적 자원획득을 위해 전방위 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 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서방 19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03년 말 현재 153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 2003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2002년도 10월 이후에 제기된 핵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해 군사적 압력소동 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국제적 정세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실리외교를 추진했다.
- 2004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미국의 ‘힘의 논리’를 비난하고 이에 대한 대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고립 극복과 체제생존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제1 절 ⅢⅢⅢ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북한이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인민은 유례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고 밝힌 바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직면하였던 심각한 체제위기는 ‘탈냉전’으로 표현되는 국제질서의 혁명적인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권의 소멸과 동서 냉전의 종식은 북한 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북 분단과 6·25 전쟁, 그리고 남북간의 오랜 단절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은 미·소간, 미·중간의 경쟁과 대결 및 동서 냉전이 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국제정세가 ‘지각변동’으로 표현될 만큼 큰 변화를 보임으로써 남북 분단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소멸되었다.

특히 북한의 제1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소멸과 그에 따른 공산권과 북한간의 각종 교류협력 관계의 중단은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공산권의 붕괴에 가장 크게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세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북한의 관계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12월과 1999년 11월 유럽연합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 개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무대를 활용하여 경제지원 확보 등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¹⁾

1998년 9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²⁾

먼저 북한은 체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핵·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관계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양측 관계는 후퇴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 대미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1)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p.197

2)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pp.137-138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동년 9월에는 제3차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어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회담과 국장급 회담을 거쳐 같은 해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북·일 관계 개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 EU외교활동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03년 현재는 총 15개 회원국 중 프랑스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으며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험추진 활동도 강화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과는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방중(2000.5, 2001.1) 및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북(2001.9)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응하면서 다방면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 중국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도 정상간 상호방문(2000년 7월 푸틴 대통령 방북, 2001년 7~8월 김정일 방러)을 통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고, 특히 2002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시에는 TKR/TSR 연결 사업 및 북한과 러시아 극동 지역간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제2절 ⅢⅢⅢ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³⁾

1998년 9월 개정헌법은 '자주·평화·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⁴⁾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종전에 내세웠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여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과거 북한의 외교활동은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국기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



3) 통일부, 앞의 책, p.187

4) 1980.10. 제6차 당대회총화보고와 1997.6. 김정일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도 자주·평화·친선을 외교의 기본이념으로 제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1998년 개정헌법 제17조

념적 요인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하였다.⁶⁾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⁷⁾을 내세우면서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에 따른 소연방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종래 사회주의권내 국가들을 지향한 진영외교 및 비동맹에 주력하던 외교활동은 변화를 맞고 있다. 경직된 통치이데올로기와 계획경제의 한계 및 내부자원 고갈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오늘날 지역별·대상별 외교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⁸⁾
- ② 중국, 러시아 등과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 동지적 유대라는 성격과 달리 전통적 우호·친선관계로서 유지·발전시킨다.
- ③ 전반적으로 비동맹 외교의 퇴조 속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 ④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 강화를 도모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방향은 이념과 정치 위주에서 실리와 경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6) 통일부, 앞의 책, p.131

7) 이는 이른바 '제국주의 침탈'을 받고 있는 공동의 처지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 이러한 노선은 이미 1970년대에 표명된 바 있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1972.12.10)에서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던 것이다.

제3절 ⅢⅢⅢ 북한의 외교실태

1. 북한과 미국 관계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⁹⁾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또한 1994년 4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한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9)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p.933-934

이후 미국의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차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들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1998년 8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핵 의혹시설에 관한 협상을 4차례 개최, 1999년 3월 북한이 미국 측의 복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60만 톤의 식량을 제공받았다.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2차례 조사함으로써 지하핵 의혹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 합의'가 이뤄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본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한국·일본과의 공조하에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였다.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의 미국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미군 신원 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북·미간의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나,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실천을 보지 못했다.

즉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2001년 1월 출범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북한의 핵변화 여부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1년 2월 말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양국간 합의사항 준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대결

적 자세보다는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북강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6월 6일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완료를 공식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와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간의 뉴욕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재개를 제의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 대참사와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은 대외정책의 기초를 반테러 협력에 둘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 및 지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¹⁰⁾ 북한이 테러 자체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테러 근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테러에 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실무차원의 물밑 대화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소강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드러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는, 2002년 11월 미국의 중유제공 중단,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KEDO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12월부터 중유 지원을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IAEA의 감시하에 있던 핵관련 시설의 동결을 해제(2002.12)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10) 통일연구원,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변화』, 2001.11.5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¹¹⁾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제네바합의,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쌍무적 약속 뿐 아니라 NPT, IAEA 핵안전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고, 핵 포기는 합의 위반 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핵문제는 WMD를 생산·확산시키려는 '불량국가'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고 북·미 양자가 아닌 다자간 문제라며 다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정권교체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로 북·미간 직접협상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중국 등의 중재노력 또한 집중되었다. 그 결과 2003년 4월23~25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 이후 5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선(先) 북·미회담, 후(後) 다자회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아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확산안보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11)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p.146-148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이 북·미간 직접회담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 관련 국가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회담 개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하였다.¹²⁾

북한은 6자회담 종료일인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자회담 참여국의 기초발언문 요지를 공개하였다.¹³⁾ 이에 따르면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자신들의 ‘총적 목표’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필요한 조치들을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3자회담시 제시하였던 단계별 해결방식을 재차 제기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보장 및 정치·경제적 혜택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의 문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한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대책과 상호간 조치를



12) 북한은 8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의지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요구하고 ② 동시행동원칙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식 수용을 촉구하며 ③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전 조기사찰 불가 입장을 밝혔다.

13) 「조선중앙통신」, 2003.8.29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일본은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대표단 단장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 요약문’ 형식으로 회담 참여국들이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내 차기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¹⁴⁾ 설명하였다.

2. 북한과 일본 관계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간에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간 데탕트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80년대까지 잠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평양에서 북·일간 수교 교섭 1차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8차 회담까지 계속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합방조약의 효력과 한·일 기본조약의 적법성문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북한의 핵사찰문제,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북송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문제, 그리고 이은혜 문제 등에서 현저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냈다. 1992년 6월 일본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수교 교섭의 진전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고,

14) 「조선중앙통신」, 2003.8.29

1993년 11월 북한이 공식적으로 교섭을 중단시켰다.¹⁵⁾

1994년 10월 북·미간 핵합의문이 서명된 이후 1995년 3월 30일 북한과 일본이 수교 교섭 재개에 합의하여 일본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북한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교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1997년 8월 북경에서 교섭이 재개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일 관계는 한때 급격히 경색되었으나 1999년 들어 화해 분위기로 다시 반전되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적극적인 경제원조와 외교관계 개선을 약속한 페리의 정책권고안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하고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한 데 편승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해 취했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식량 지원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1999년 8월 정부성명을 통해 비록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92년 이후 중단됐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의 재개로 이어졌다. 무라야마 도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일본 초당파 의원대표단이 1999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 4월 7년 반 만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9차 본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으며, 5월로 예정됐던 10차 본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연기되어 2000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11차 본회담은 2000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되었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과거청산 요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과 일본은 제11차 북·일 수교회담(2000.11) 이후 일본경찰의 조총련계 은행 수색, 피선박사건 등으로 북·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기회담 개최가 지



15) 전정환, “북한외교의 변화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2000.7, pp.15-16

연되다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002.7.31~8.1)을 계기로 개최된 북·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조기 실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북·일 국장급회담(2002.8.25~26, 평양)에서 미해결 현안문제 협의 등 정상회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4개 항의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¹⁶⁾

이후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에 합의한 대로 2년만에 수교회담을 개최(2002.10.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개발 포기요구 및 납치 문제와 관련 입장 차이 등으로 차기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종료하였다.

북한이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 대해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여 방일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 개최키로 하였던 핵문제 관련 '안보협의회'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고 일본의 대북여론 악화 등으로 대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월에는 만경봉 - 92호 등 일본에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사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만경봉 - 92호의 운항 일정이 조정되기도 하였다.¹⁷⁾ 북한은 일본 당국의 선박 검사활동 강화와 2003년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유사법제 등을 '대북 제재', '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이라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북·일관계 진전없이 '평양선언' 1주년(9.17)이 경과하고, 일본이 북



16) 4개항의 평양선언은 ① 2002년 10월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② 과거 청산문제 관련, 일본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수교과정에서 경험문제를 협의, ③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 ④ 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문제 관련, 북한이 협력하겠다는 의향 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7) 만경봉 - 92호는 여러차례에 걸쳐 일본입항을 취하한 이후, 7개월 여만인 2003년 8월 25일 니카다항에 입항하였다.

핵문제 관련 6자회담(8.27~29, 베이징) 등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언급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일본이 앞으로 북핵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10.7 외무성 담화)고 주장하였다.

3. 북한과 중국 관계

북한정권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때로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唇齒), 혈맹으로 표현될 만큼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적 토대 위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이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남은 사회주의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의 상황에서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¹⁸⁾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 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이 있기까지 8년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온 양국 최고수뇌간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로 볼 때 이 기간 중 북·중 관계의 실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8)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p.957-958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쩌민 주석의 초청 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양국간의 관계와 개혁·개방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양국간 친선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였고,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 석탄 등 물자를 추가로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의 초청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2001.1.15~20)하고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발전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하이 푸동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천지개벽’, ‘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북한이 2001년 1월 4일 노동신문 정론에서 주장하는 ‘신사조’ 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공식 친선방문(2001.9.3~5)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관계 강화와 쌀, 석유, 비료 등 지원과 대북협력을 약속하고, 북한에게 남북한 대화와 남·북, 북·미, 북·유럽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권유함으로써 양국의 당적 유대 강화를 통한 정치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²⁰⁾

1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22호, 2001.1.13~20

20)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55호, 2001.9.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중국은 그들의 핵심적 국가전략인 지속적인 경제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 강화를 피하는 등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과 중국은 현실적 한계를 인식,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각자의 국가이익에 맞춰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주변 4국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정세의 안정을 통해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려는 중국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와 범위, 그리고 한·중 관계의 발전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중국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배경과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구소련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²¹⁾

셋째, 중국은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인 외교적 지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넷째, 한·미·일 3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불신과 공동 안보의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기존관계의 유지가 안보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현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초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실리외교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다.²²⁾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3자회담 중재에 이어 6자회담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함으로써 옛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했다.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러·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21) 중국의 대외경제원조 총액의 1/30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 「연합뉴스」, 1999.10.14

22)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변화와 중·러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7, p.56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양국은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외무, 대외경제, 농업, 철도, 경공업, 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법을 논의하고, 이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적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리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그레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1998년 12월까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4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폐지하고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에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했다.

새 조약 체결로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재조정은 1996년 11월 「투자 장려 및 호상보호협정」 체결,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의정서」, 11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과 함께 농업·어업·과학기술 협조에서 나타나듯이 경제협력 강화추세로 연결되어 나갔다.²³⁾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2000.2.9) 체결에 이어 옛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틀을 마련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23) 김승채, 같은 글, p.57

내용으로 하는 11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우선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양국 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상호 신뢰,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와 국제 무대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염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이어 양국이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안정 및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향을 표명했으며 특히 “각자 양국에 침략 위협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²⁴⁾

2000년 7월의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공식방문(2001.7.26~8.18)은 한·소 수교 이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간의 협력관계 복원, TKR(한반도 중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²⁵⁾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2000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와 횡단철도(TSR)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북·러간의 이러한 관계조정 및 협력관계는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안전보장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표명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존 관계 회복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는

24)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927

2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53호, 2001.8.18~24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제, 자원,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안보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있고, 무기 수출을 비롯한 상품시장으로서의 북한의 가치이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의 부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관계가 군사동맹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음은 물론, 이전과 같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의 회복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체제를 고수하는 한, 러시아와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고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²⁶⁾ 또한 경제 이익을 비롯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북한과 EU 관계

북한은 유럽국가들과의 교류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EU회원국들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 속도를 높였다.



26) 러시아에서 좌파세력이 강화되었으나 공산정권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러시아의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북한은 2000년 1월 4일 EU 회원국이자 서방 선진7개국(G7)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접근의 발판을 확고히 하고, 같은 해 9월 EU 15개 회원국 중 국교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했다.

EU도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기 시작,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 대북 수교방침을 천명하면서 양자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제3차 ASEM회의시 여러 EU 개별국가가 대북 수교방침을 표명하고 곧이어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식 참석자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페르손 총리에게 방북을 요청하면서 EU차원의 대북 수교분위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드디어 2001년 5월 2일 당시 EU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대표단이 방북, 서방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실현,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등을 확인 받고 북한·EU간 인권문제 논의, 북한측 경제조사단 유럽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대북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EU 개별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00년 이후 8개 국가와 수교하여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EU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 11월 당시 EU 의장국이었던 덴마크의 뮐러 외무장관은 “북한이 즉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03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면에서 EU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 유럽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방문,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찰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수시로 단기 연수생들을 EU국가에 파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토대를 닦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북한이 EU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경제적 측면의 동기가 두드러진다. 먼저 EU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 2억 5천만 유로(약 2억 7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도 EU가 대북지원에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견제의도가 북한의 대 EU 관계개선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여 장기간 대북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동안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나 2003년까지 미사일 유예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속내를 드러내 보인 바 있다.

한편 EU의 대북접근 요인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북한측의 인도주의적 지원요청 등 접근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95년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명의로 EU를 비롯, 세계 여러나라에 간곡히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자력갱생을 표어로 살아온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EU측으로서는 그간 잊혀져 온 북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이 EU로 하여금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요인이 되었다. 즉 당초 EU는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로서 인권 개선, 남북대화 진전 및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엄격히 요구하



27)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158

28)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2002년 12월 2일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구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내 모든 은행들은 달러 구좌를 유로 구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29) 김학성, 「통일정책분석 2001-07: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P.6.

30) 최진욱, 「EU의 대북한관계 역할 및 전망」, 통일연구원, 2002, P.85

고 있었던 바,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정부의 설득으로 EU가 먼저 수교를 한 후 기타 현안문제를 처리하려는 입장으로 선화하였기 때문이다.

제4절 ⅢⅢⅢ 대남관계의 변화

북한은 1999년부터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시도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해 왔다.

북한의 대남노선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대남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남전략을 공산화 혁명전략의 틀 속에서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내부자원 고갈,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면서 대남전략면에서 과거와 같은 강경일변도의 혁명전략적 성격은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받는 이중적 접근을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하는 생존전략적 측면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을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구사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대남전략 구도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³¹⁾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정책 기초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실리보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³²⁾을 비롯하여 경제·군사·적십자·체육 등 여러 분야 회담에 적극 나오고 있다.

특히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하였다.

북한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적 교류협력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14일 철도궤도 연결식을 가졌으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해로에 이어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2002년 10월 남한지역을 방문, 경제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 등의 합의서가 발효(2003. 8.20) 됨으로써 남북간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31)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p.466-468

32)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분야별 실무접촉 등 여러 분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다. 2000년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8,0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16,672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언론·예술·종교·학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TV뉴스 평양 생방송, 드라마 촬영(2002.1), 남북방송인 토론회 개최(2003.10, 평양) 등 언론·방송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8, 서울), 춘향전 평양공연(2001.1), 고구려 유물전시회(2002.12~2003.3, 서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또한 종교분야에서는 매년 '부활절', '부처님 오신날', '개천절' 등을 맞아 관련 종단·교단별로 공동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학술분야에서는 일제 식민지배 관련 남북공동토론회(2001.3, 평양), 국호 영문표기문제 관련 남북학술토론회(2003.8, 평양) 등이 개최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2002.8, 서울) 등이 진행되었으며, 2002년 9월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구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여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남북관계는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나타



33)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2003.8.4):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통일을 위한 길에는 가슴 아픈 희생도 있고 난관도 있을 수 있지만 6·15 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우리의 힘찬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냈다.³³⁾

이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측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경제난 타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 연구』, 1999.11
-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 신지서원, 2002.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9
- 김성철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2001.8
- 김용호, 『대북한외교론』, 오름, 1996.8
- 김중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6
- 박두복,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제20집,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1996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9
- 안진환 외 역, 『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4
- 양영식 외 4인,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1999.11
-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년도
- 윤해수, 『북한국예외교론』, 한울아카데미, 2000.2
- 이숙자, 『21세기 북한』, 나남, 2000.3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6
- 김승재,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 관계”, 『계간 외교』, 제 54호, 2000.7.1
- 전정환, “북한외교의 변화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2000.7.1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9.3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 _____, 『2004 북한개요』, 2003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전망 : 2003~2004』, 2003.12
- _____,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2003.12
- _____,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후 북미관계 전망』, 2003.12
- _____,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 형성방안』, 2003.12
- _____,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2003.12
- 방완주, 『조선개관』, 평양 : 북한백과사전 출판사, 1998



4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박갑수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4절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요점

- 군대를 최우선하는 선군사상은 통치이념으로 변화되고,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보루이며 통치기반으로, 대남면에서는 혁명무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 북한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군병력을 활용하여 발전소 및 교량 건설, 농경지 정리, 관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핵심부대 이외에는 거의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된 경험을 갖고 있다.
-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항시 '동원된 상태'로서 세계 제1위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군은 초전부터 '배합전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중심(縱深) 깊숙히 고속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제1 절 ⅢⅢⅢ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별도의 대남 전쟁포기선언과 평화정책 이행관련 실천이 없는 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남면에서는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해석된다. 김일성 주석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¹⁾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 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²⁾

북한군은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혁명임무 완수가 목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당보, 군보, 청년보)에서는 선군정치방식으로 강성대국으로 지향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갈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군대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대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북한의 보도매체를 참고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 중 군관련 행사 참석 및 시찰이 2002년에는 38%였으나 2003년에는 68%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김정일의 공개활동(2003년)

구 분	군 사	경 제	대 외	기 타	합 계
회수	63	12	7	10	92
비율(%)	68	13	8	11	100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종합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결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³⁾



- 1)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종,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제하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1954.12.23)
- 2) 인민군 창건기념일(1968.2.8)에서의 김일성 연설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초는 4대군사노선으로서, 개정헌법(1998.9.5)은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이 당·혁명·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로서 인민군의 성격은 군간부들의 군창건보고대회시 보고나 각종 간행물 및 방송논설 등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고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동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다.⁴⁾

여기에서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2003년도 말 현재로 추정되는 정규군 117여 만명은 물론 교도대 90여 만명, 노동적위대 540여 만명, 붉은청년근위대 90여 만명 등을 포함한 동원가능한 예비병력 760여 만명을 총 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과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과 수표와의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대를 최우선하고 제일 중시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함으로써 군사력을 통한 외교협상과 체제유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3) 「김일성 저작집」, 제7권, p.447, “전쟁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정착의 연장입니다.”

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동 직책에 재옹립하는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해설하였다.

북한군의 특징은 방어보다는 혁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일관된 공격형 전투 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사상 반복교육, 과도한 지하 요새 건설 및 유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사회통제를 위해 상당수의 군병력을 외화벌이 사업과 대형 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토지정리, 목장 및 양어장 등 각종 경제건설 현장과 치안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제2절 ⅢⅢⅢ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부는 군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총참모부가 실제적인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경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통합군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 총비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게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수정한 제7차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독립, 확대하여 국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석 대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나아가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치나 폐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천황 직속으로

내각을 누르고 전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전쟁 지도기구인大本營(大本營)을 방불케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을 위한 회의체 성격이 짙다.

당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⁵⁾와 각급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자동원체제의 검토, 농농적위대 등 민병조직의 교육, 훈련,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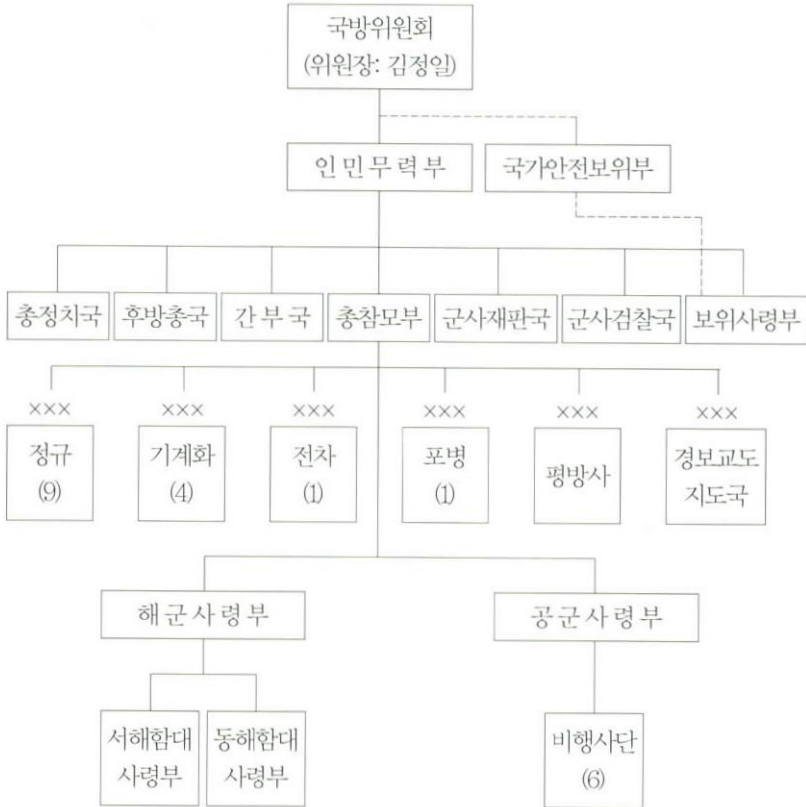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예하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다. 외형적으로는 총정치국, 총참모부를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 집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군정권(軍政權)만 행사한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 계통이며, 총정치국은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 계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보위사령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어 국경검문과 열차경비까지 담당할 정도로 군내의 정치·지도계통은 물론 다른 일반 공안조직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 1982년 11월 이후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 임무를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에서 나아가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106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xxx: 군단(급)



* 자료: 국방부 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p.158 내용 참조

() 내 숫자는 군단/사단 수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를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만 16세가 되면 군 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중학교 졸업 후인 만 17세를 전후하여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 입대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 등은 물론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인민보안성 요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들도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전공자는 입대 후에 조기 제대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148호에 의거,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씩 근무하며, 1993년부터는 10년 근무연한제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 부대, 저격부대 등) 요원은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복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⁶⁾

1996년 10월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사병들은 남자 30세, 여자 26세, 여자군관은 28세로 복무가 연장되었다. 군복무를 마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 되며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1996년부터는 징집대상자들 중에서 6~7년간 탄광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들의 탄광복무기간을 군사복무로 인정해 주는 '탄광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관의 선발은 2~5년 이상 근무한 사병 중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6)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지만 우선한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이 이에 우선한다.

자를 중·대대장의 추천으로 최종 군단 당위원회 심사에서 확정한다. 소위 임관 후 중위 진급에는 4~6년이 걸리지만, 장성은 최저 복무기간 없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진급한다. 연대장 이상의 장령급 인사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심사를 거쳐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친가족 7촌까지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 군관은 소대장 28세, 중대장 35세, 사단장은 52세로 연령정년제를 두고 있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3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군관이나 사병을 불문하고 군기사고자는 제대시에 직장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병역제도는 최근 '전민 군사복무제' 도입과 2003년 3월 개최된 제 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채택함에 따라 병무규정과 법령이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민 군사복무제는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계층과 대학생들에 대해 군복무를 지시한 것으로 적정 병력유지와 계층별 위화감 해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후부터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지휘요원을 비상대기시키고, 지상군 야외전술훈련과 해상전술훈련, 전술기본 숙달훈련 등 동계훈련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⁷⁾

-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7) 「김일성 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518-524



- ⑤ 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 비밀의 엄숙한 유지
-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 ⑦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복무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10~15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긴 휴가는 30일간 받을 수 있는 물자휴가로 고향지역에 가서 특산물을 획득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구매하거나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려지고 있으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원수·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상장·중장·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상좌·중좌·소좌, ④ 하급군관에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 하사관에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 ② 일반병은 상등병·전사로 구분하되, 1998년 4월부터 사기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4등분하였다.

차수 계급을 신설한 이후 북한군 장성 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사망 이후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0일 군창건 기념 60돌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호위사령관 이을설이 '조선인민군 원수' 임에 비해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로 구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부터 2002년에는 최고사령관 명령(4.14)으로 54명, 2003년 역시 최고사령관 명령(7.26)으로 24명의 장성을 진급시키는 등 북한장성 1,400여 명의 대다수를 직접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민군대 내에는 각급 단위에 당 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 당의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았는데, 인민무력부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위원, 중대급 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군지휘관에 이어 정치간부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정치조직과 별개로 당비서국에서 직접 파견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군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당원인 간부의 경우 핵심권력층에 진입하기 어렵다. 또한 인민군대에는 부대단위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조선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⁸⁾

인민군대 내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의 성격이 영토 및 체제보존 임무보다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 달성과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8)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 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제3절 ⅢⅢⅢ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1.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기습 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중심(縱深) 깊숙이 돌진시켜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25 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 삼아 수립된 이 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지만, 우리의 인적·물적 잠재력 및 현재의 대치상황, 한·미 동맹관계와 연합방위태세, 미군의 군사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전략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고속 중심공격능력, 선제 기습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 등 3개월 이상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생화

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1) 기습전략

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잠재력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기습전략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와 비슷하고, 북한 GNP의 수배가 되는 수도권, 경인지역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993년부터 사정거리 50km이상의 170밀리 자주포, 70km이상의 240밀리 방사포를 중서부 전방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70여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배치했을 뿐 아니라 서울까지 6분 비행거리에 있는 최전방지역에 130여 대의 구형 전투기를 전진배치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속전속결전략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 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量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시기간을 오래 끌수 없는 데다 우리의 평시산업구조가 전시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적·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배합전략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완성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대통로’(땅굴) 작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월남패망 사례처럼 땅굴 침투부대와 지하당 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에서 제대로 응전하기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일성 총비서는 제5차 당대회(1970.11.2)에서 행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 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⁹⁾

사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부합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전쟁은 사상교육과 지형만 고려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 지속역량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자의로 도발할 수도 있으나 결코 뜻대로 종결지을 수 없는

9) 「로동신문」, 1972.9.19 ; 「인민군」, 평양: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1987, pp.43-47. 최근 북한은 구 소련군이 전차부대의 신속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하였던 작전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체계를 벗어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예외 주시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상비전력 및 장비

2002년 12월 현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여 명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런 병력수는 한국의 총병력 69만 명의 1.7배 규모이다.(〈표 4-2〉 참조)

북한의 지상군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2개 포병군단과 9개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을 포함하여 19개 군단사령부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된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는 보병 27개 사단, 15개의 전차여단, 21여 개의 포병여단 등 총 170여 개의 사단 및 여단이 있다.

특히 기계화부대와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하여 10개의 군단, 60여 개의 정규사단 및 여단,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포병군단이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부대배치의 조정없이 기습남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인 12만여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한 국	북 한		
병 력	총 계	69만1천여명	117만여명		
	지상군	56만 여명	100만여명		
	해 군	6만8천여명 (해병대 포함)	6만여명		
	공 군	6만3천여명	11만여명		
주 요 전 력	지 상 군	부 대	군 단(급)	13 (항작사, 특전사 포함)	19(포병,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국 포함)
			사 단	49	69
			기동여단	19	67 (교도 50여개 미포함)
	장 비	전 차	2,400여대	3,700여대	
		장 갑 차	2,400여대	2,100여대	
		야 포	5,000여문	10,000여문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4,4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20여기(발사대)	50여기(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전 투 함	130여척	430여척
			상 륙 함	10여척	42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30여척	
지 원 함			20여척	30여척	
잠 수 함(정)			10여척	100여척	
공 군	전 투 기	550여대	830여대		
	특 수 기	70여대 (해군 항공기 포함)	30여대		
	지 원 기	210여대	520여대		
	헬 기	700여대 (육·해·공군 헬기 포함)	330여대		

* 자료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공격시에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수 배되는 위장진지와 모의장비를 설치하고 공격시 이용할 갱도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 전차(T-54/55/59 등) 2,700여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일부 구형인 T-34 전차를 포함하여 총 3,7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400여대의 약 1.5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중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7,900여문(구경 76.2/100/122/132/170밀리 등)의 곡사 및 평사포와 2,500여문(구경 107/122/132/240밀리)의 방사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사포 등 14,0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 가능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총 1,01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480여 척, 잠수함(정)은 100여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분리·운영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소형함정

이 많아 기상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원해작전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미습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40여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정)으로 한반도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은밀한 육상침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 140여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는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능력이 있어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7/19/21, IL-28, SU-7/25 등 47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20여대 및 헬기 330여대를 포함하여 총 1,71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약 40%를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MiG-21/23/29 및 SU-7/25기는 현기지에서 발진하면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구형으로 연습기로 사용하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워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북한 공군은 2개의 공군 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AN-2기를 이용하여 저공·저속 비행을 통해 유사시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MiG-29기 신예전투기를

조립생산하였고, 1999년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기 40여대, 러시아로부터 신형 MI-8 헬기를 도입하는 등 계속 항공전력의 질적 보강을 도모하고 있다.

3.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인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760여만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5일 내지 40일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동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1988년 4월부터 북한은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중앙당에 민방위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90여만 명이다.

노동적위대는 4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위주(여자 17~30세)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위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540여만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

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90여만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인민보안성 및 경비대, 군수물자를 지원, 관리하는 군수동원총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 약 40여만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으로서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¹⁰⁾

4. 전략무기

북한은 연변에 원자력연구소를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연구소인 '두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핵연구단지에 집중배치해 왔다. 현재 북한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연수받고 돌아와 핵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력이 약 3,000명, 그중 고급인력은 약 200여명 정도에 이르고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¹⁾

북한은 196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기술을 자체개발



10) IISS, *Military Balance 2003~2004*에는 지상군 95만, 공군 8만 6천, 해군 4만 6천으로 추정하고 있다. pp.160~161: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p.158 내용참조

11)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p.95

로 성공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주기 완성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5MW 원자로를 본격 가동하여 재처리를 추진함으로써 10~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1994.10.21)를 통하여 대북경수로 제공 및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키로 하고, 그에 상응하여 흑연갑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IAEA사찰 수락 등에 합의하였으며, 그후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 12.15).

그러나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초 켈리 미 특사의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를 명백한 제네바기본합의(Agreement Framework)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5MW 원자로를 가동(2003.2.26)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9일에는 핵 억제력을 갖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4년 1월 초 미국의 민간방북단을 초청하여 연변 핵시설을 공개하고 재처리 완료사실을 재확인하였으나, 2002년 10월 켈리 일행에게 시인한 바 있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이

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리워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생화학무기 또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강계, 용성 등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만포·아오지·청진 등 8곳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생무기 저장시설도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왕재봉을 비롯한 6곳에 있으며 전방연대 급까지 화학소대가 편성되어 있다.

보유 작용제로는 수포·신경·질식·혈액·최루작용제 등이 있으며, 약 2,500~5,000여톤을 보유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출혈열 등 여러 종류의 생물학 작용제가 있으며, 생물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의도를 갖고 미사일 기술 입수에도 주력한 바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적인 생산단계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연간 약 100여기의 스커드 B/C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왔으며, 1993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지대지미사일 노동1호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사정거리 2,000km~6,700km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했는데, 2단계 추진 미사일발사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진입 시도에는 실패하였으나 다단계 탄체 분리, 엔진 연소 등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1월 11일 주중 북한대사는 “미국이 북·미간 모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중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¹²⁾(〈표 4-3〉 참조)

〈표 4-3〉 북한 미사일 성능 및 위협범위¹³⁾

구 분	SCUD		노 동	대포동1호	대포동2호
	B	C			
최대사거리 (km)	300	500	1,300	2,000	6,000 (추정)
위협범위	대전권	남해안	오끼나와	일본/대만	알래스카
탄두중량 (kg)	1,000	770	700	500~700	650~1,000
명중오차 (m)	1,000	1,300	5,000	2,500	2,000~5,300 (추정)



- 12) George Tenet 미 CIA 국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2003.2.12)에서 북한은 미 서부해안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 5월 초 이란이 발사한 "사하브-3"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의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3 북한연감』, p.527
- 13)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p.159

제4절 ⅣⅣⅣ 최근 군사동향과 대외 군사관계

북한은 1990년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한부 전쟁준비를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은 그 후 계속 군사시설의 지하갱도 보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시설(180여 개소)에 대해서도 전시의 지속적인 생산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초급지휘관을 미혼자로 전면 교체하고 고급지휘관을 연소한 자들로 충원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남한 전방과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공격훈련을 강화했고 1996년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군기사고 및 탈영 방지를 위해 정치학습과 군사규율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및 도상 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이착륙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2000년 2월 26일에는 평양체육관에서 5년 만에 다시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 부자의 녹음 교시를 듣고 충성을 다짐하였고, 그 후 3월에는 기존 휴전협정을 무시하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보도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6월에는 극심한 에너지난 가운데에서도 대규모 하계 기계화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¹⁴⁾

2001년을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승리의 해'로 평가하였을 정도로 북한은 군병력을 발전소와 댐 건설, 토지정리 등에 대거 투입하는 등 경제건설의 주력 노동력으로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는 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일부 MiG기와 헬기를 재배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선전역에 대남 비방 방송이 감소된 반면 부대내의 정치사상교육은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전자전·특수부대와 통신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 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였다. 2002년에 들어 군내에서는 '군정배합(軍政配合)'을 강조하면서 군사일꾼과 정치일꾼의 합심과 수령 결사옹위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6월 한국에서 월드컵대회를 개최하는 기간 중임에도 같은 달 29일 서해도발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2003년 1월 10일 NPT탈퇴를 선언하여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14)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비를 총예산의 15.4%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 3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 군사강국",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pp.41-52; 미 중앙정보국(CIA)의 「The World Factbook(2003)」에 의하면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군사비는 33.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의 대외군사관계는 해방 이후 중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며 발전되어 왔다.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의 음모와 스탈린·김일성의 공모, 모택동의 지원 약속하에 대리전 성격의 6·25전쟁을 도발하여 엄청난 인적·물적·자원을 소실하였고, 전후 한동안 피폐한 북한의 산업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는 바,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7월 11일에는 북경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중조약은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조·소조약의 경우 러시아는 소연방 소멸 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공화국 대통령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조항인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그 후 1996년 9월 10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후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베트남과의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으로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 북한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 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발전, 주한미군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82년 11월 카다피 리비아의 원수가 평양을 방북하였을 때 「조선·리비아 우호협력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하였으며, 1986년 3월 쿠바 수상 카스트로의 방북시에도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역시 정치·경제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01년 5월에는 북한 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단 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고위대표단을 구성하여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산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도 있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중미지역과의 군사유대는 무기판매·군사기술지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바,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군사대표단을 상호 교환·방문토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호티엔 국방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으며, 환영식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여 군간부들만 참가하였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대표단(단장: 작전국장 리명수)과 공군대표단(단장: 공군사령관 오금철)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동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센타에 들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참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2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도 평남과 함남 일부 지역에서는 미군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한 바 있어, 미군 유해발굴을 통한 북·미 군사적 접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4월 군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5월은

중국 고위군사대표단(단장: 군총정치부 주임 쉬차이허우 상장)이 방북하여 조·중 군사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5월 30일과 6월 1일 사이에는 미 하원대표단(단장: 커트 웰든 의원)이 방북하여 조·미 사이의 당면 현안문제와 핵문제를 논의하였고, 9월 17일에는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동·서해 지구의 남북관리구역 통행을 위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군사정세는 긴장과 완화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참 고 문 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세계안보정세종합분석(2002~2003)』(상·하), 2003
- _____, 『안보학술논집』, 제14집 1호, 2호, 2003
- _____, 『정신전력학술논집』, 제4집, 제5집, 2003
-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9, 2000
- _____,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
- _____,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 _____, 『화·생·방 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8권 4호, 2002
-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 특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연구소, 2002
-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1, 2002, 2003, 2004
- 육성소 외, 『북한군의 동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 유석렬, 『북한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1997
- 이동욱 외, 『북한의 군사전략』, 평화토론회, 1998
-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세종연구소, 1995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팔복원, 1999
- 조지연, 『통일과 강한 군대』, 행림출판사, 1997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 IJSS, *Military Balance 2003~2004*
-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통일부, 1998
- _____,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인민무력부, 『인민군』, 평양 :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1987



5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 전망

>> 권영경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구조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제3절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제4절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요점

- 북한은 그동안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군사·경제 병진전략 등 3대 발전전략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9년간 장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그 결과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지속적·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중이다.
- 북한 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제개혁·개방이 도입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더불어 신의주·개성·금강산 등을 나진·선봉에 이어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경제 50여 년 역사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경영, 농업경영, 분배제도, 무역제도, 재정·금융, 대외경제 등 전 경제영역에 걸친 획기적인 경제개혁으로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의 해결,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의 추가적 도입, 북·미간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경제환경의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절 ⅢⅢⅢ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과 경제구조

1.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확립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정신이 "사람의 본성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한 혁명·건설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옹계 반영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혁명·건설발전의 근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¹⁾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 따라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삼아왔다. 북한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

1) 「경제사전(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6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의미한다.²⁾ 이는 한 마디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수단들을 국내시장에서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명 및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내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기술에 토대를 둔 산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노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건설노선은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게 하였다. 수출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게 함으로써, 북한경제구조를 국제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 (closed economy)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산업구조를 국제경제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산업구조로 정착시켰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경제발전론적 시각에서 볼 때 ‘대내지향적·수입대체적 발전전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가 사회주의경제건설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10%이내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때, 제3세계 국가들이 과거 채택하였던 ‘대내지향적·수입대체적 발전전략’보다도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한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립적 민족경제발전노선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에 강경하게 맞서는 노선”³⁾이라고 주장하였듯이,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전개된 석유위기와 같은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북한 인민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국제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북한의 자립경제 발전노선은 9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난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지나치게 국내자원에만 의존된 산업기술을 구축하여 세계 기술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경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북한경제가 기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3권, pp.79-80

3) 로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 1998.9.17

본적으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을 갖추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동시에 추진된 중공업 우선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해 북한과 같은 후진경제가 비교적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재공업 부문의 낙후도 가져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 가져온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1991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역대 설치에 이어 최근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 새로운 경제특구 설치를 공포하고 해외자본 및 남한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⁴⁾고 하며 ‘새로운 자력갱생’ 개념도 제시하고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국제분업질서에 적극 편입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도 실현할 수 있다”⁵⁾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의 선차적 발전을 통해 생산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정책 집행과정에서 투자재원을 중공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4) 『로동신문』, 2001.2.8.

5) 『경제사전 제1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5-716



북한이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처음으로 구축한 구소련의 영향이 컸다. 구소련은 많은 내부 논쟁을 통하여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재정투자지출 중 70% 이상을 항상 중공업 부문에 편중 지출해 왔다. 북한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경제성장의 기본 전략으로 선호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산업을 일률적으로 성장시키려 하기보다는,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을 집중 육성시켜 여기서 산출되어 나오는 생산물을 다시 생산재 생산수단부문에 재투자하는 것이, 자본축적률을 급속하게 높이고 국민소득도 보다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구조는 구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급속하게 중공업 부문 위주로 편중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나갔으며, 공업총생산에서 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 51.7%, 1980년 69.0%, 1987년 67.3%로 크게 확대되어 나갔다.⁶⁾ 이러한 북한의 공업구조 전환과정은 처음부터 경공업의 성장 없이 곧바로 중공업 위주 공업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남한이 경공업부터 발전시켜 점차 중공업 중심 공업구조로 변천해 온 현상과 대비된다.⁷⁾

그러나 북한의 공업총생산 증가율은 북한이 추진했던 경제계획 기간별로 볼 때 제1차 5개년 계획기간(1957~1961)과 제1차 7개년 계획기간(1961~1967)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차츰 둔화되어 나가고 급기야 1980



6)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연구』, 1993.12, p.246, p.248

7) 호프만의 4단계 공업발달과정론에 따르면, 남한은 1960년대 초반 1단계(소비재공업 대 자본재공업의 비율이 5:1인 단계)였으나, 1960년대 중반 2단계(약 2.5:1인 단계), 1970년대 말 3단계(1:1인 단계), 1980년대 이후 4단계(자본재공업이 소비재공업의 부가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단계)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앞의 3단계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4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앞의 책, p.244, p.249

년대 이후부터 정체·마이너스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 확대의 제약 등의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9년도에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1989~'92)을 발표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완충기(1994~'96)의 중점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제일주의'를 일시적으로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경제회복을 위해 선행 산업부문(전력, 금속기계, 석탄, 철도운수 등)의 집중 투자를 통한 중공업부문 정상화에 주력하면서 여전히 중공업 우선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3) 군사·경제 병진노선

구소련·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힘의 우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북한 또한 이러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에 따라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노선이 채택되면서 이후 북한 총예산에서의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⁸⁾ 북한의 산업은 '군산복합형'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



8) 1966년까지만 해도 북한 예산에서 군사비의 비중은 약 10% 정도였으나, 1967년~1971년 간에는 30% 이상 증액되었다. 1972년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와 남북대화의 시작으로 14~17% 사이로 편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예산에 은폐되어 축소 발표되고 있다.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은 북한 예산에서의 실제적인 군사비 비중은 25~30%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 구별이 어려워 정도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은 민수산업을 관리하는 「제1경제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함으로써, 북한경제 구조를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이원화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전반적 산업생산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⁹⁾ 이로 인해 북한 경제성장에 커다란 제약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핵문제를 계기로 '국방공업에의 선차적 역량 집중'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2.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전체 인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북한의 경제사전에서는 계획경제를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¹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수많은 협동농장과 도·시·군에 존재하는 기관·기업소·공장, 건설조직, 유통조직들의 생산량은 물론 기술자 및 과학자들의 연구개발까지도 거대한 국가적 계획의 한 부분으



-
- 9) 중국 심양군구 소속 87027부대의 한페이스(韓佩石) 연구원은, 2000년 겨울호 「동북아연구」에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 북한의 군수산업에는 130여개의 군수기업, 60여개의 병기수리 및 부속품 제조장, 100여개의 민수품공장 등이 있으며, 산업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 군수경제로 인한 북한경제의 제약에 대해 이미 1970년에 김일성은 “솔직히 말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의 규모와 인구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만약 국방비의 일부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에 돌려졌더라면 우리 민족경제는 보다 빠르게 발전되고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은 보다 더 개선되어졌을 것입니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70.11.2)라고 말한 바 있다.
- 11) 북한은 2003년에 이어 2004년 공동사실에서도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12) 「경제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324
-

로 위로부터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각 생산단위들은 이 명령(노르마)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소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활동과 국가의 전체 산업편제는 당의 정책방향에 따라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일원적으로 예속되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관리의 이러한 시스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계획의 분권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구조를 거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는 경제”¹³⁾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앞의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군수산업부문이 내각 산하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아닌 ‘제2경제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계획기구에 의해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전체 계획이 결정되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내각의 한 기관으로서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관리하에 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경제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면,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¹⁴⁾ 독자적으로 군수산업과 관련된 계획, 생산, 재정, 원자재공급, 소비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구조는 민수산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제1경제위원회’(1차 경제)와 군수산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2차 경제)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민수산업 생산기업소 중 군수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13) 앞의 책, p.325

14) 본래 북한의 군수산업부문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반산업부문과 혼재되어 중앙계획당국의 계획부문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수산업이 비대해지면서 1968년 내각 산하에 제2 기계공업부를 만들어 그 집행활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노동당 비서국에 군수담당비서를 신설하여 이를 지도·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제2경제위원회’를 만들어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였는데, 김일성이 “제2경제위원회는 제2정무원입니다”라는 교시를 내리면서 내각으로부터 독자적인 계획부문으로 독립하게 된 것이며, 1993년에는 아예 노동당 중앙인민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국방위원회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일용분공장’, ‘일용공장’이라는 명칭 하에 「제2경제위원회」가 지시한 군수생 산품도 생산함으로써 결국 두 개의 계획기관으로부터 별개의 노르마를 달성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북한 경제구조에서 군수경제 부문의 과다한 비중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이 발표하는 재정지출에서 군사비지출이 11%에서 17% 사이를 오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북한 GNP의 25~30% 정도가 군사비 지출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볼 때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구조에는 이러한 이원적인 계획경제 부문 외에¹⁵⁾ 비계획경제 부문도 인민경제의 한 부문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도 보게 된다. 즉 1990년대 들어와 연속적으로 진행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의해 계획경제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계획부문이 포섭할 수 없는 사경제(private economy) 내지는 암시장(black market)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 구조는 3중 경제구조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 북한경제에 있어서 비계획경제 부문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유통경제 부문에 한정되어 계획경제 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비계획경제 부문은 유통경제 부문외에 생산 및 금융경제 부문에서도 등장하고,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북한경제에 있어서 비계획경제 부문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경험론상 알려지는 정보 외에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98년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의도하는 「인민경제계획



-
- 15) 한편 북한의 경제구조를 이렇게 계획기구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 경제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 경제부문이 있음을 보게 된다. 당 경제관 김일성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경제부문으로서 중앙당 재정경제부인 제39호실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경제부문이다. 여기에는 김일성부자의 권력유지와 위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업소, 협동농장, 외화벌이기관 등이 따로 소속되어 운용되고 있다. 타마키 모토이 외, 김종우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pp.155-159)
- 16) 자세한 내용은 김현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10;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민족통일연구원, 1998.3 참조

법」을 제정하고, 결국 2002년 7월 1일에 장마당 가격을 반영한 가격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음을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것이 유의미한 것이라면 북한경제는 3중 경제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경제 발전노선과 경제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현상은 북한 산업구조의 심각한 왜곡과 아울러 고비용·저효율적인 경제구조, 극심한 생산성 정체 및 하락, 국제경제에서 비교우위성을 갖지 못하는 경제구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2절 ⅢⅢⅢ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북한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국민총생산에 관한 총량 경제지표로서 '사회적 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정보·군사분야 연구기관 등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총GNI(Gross National Income)와 1인당 GNI를 추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발표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다음 <표 5-1>과 같다.



17) 북한에 따르면 '사회총생산물'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사전 제1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54) 그러므로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5-1〉 남한과 비교된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구분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명목 GNI												
북한(A)	231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157	170
남한(B)	2,523	3,143	3,452	4,017	4,881	5,183	4,740	3,121	4,007	4,592	4,261	4,770
(B)/(A)	10.9	15.0	16.9	19.0	21.9	24.1	26.8	24.8	25.5	27.3	27.1	28.0
1인당 GNI												
북한(A)	1,142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757	706	762
남한(B)	5,886	7,183	7,811	8,998	10,823	11,385	10,315	6,744	8,595	9,770	9,000	10,013
(B)/(A)	5.2	7.1	8.1	9.1	10.5	11.5	12.7	11.8	12.0	12.9	12.7	13.1
경제성장률												
북한	-3.7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남한	9.0	5.4	5.5	8.3	8.9	6.8	5.0	-6.7	10.9	9.3	3.0	6.3

* 주: 1) 북한의 2001년도 1인당 GNI가 2000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남한의 기준환율이 2001년도에 전년도 대비 올랐기 때문임(2000년도 기준환율 = 1,130.61, 2001년도 기준환율 = 1,290.83).
참고로 북한 원화로 계산된 1인당 GNI는 2000년 = 85.6만원, 2001년 = 91.2만원임.
2) 경제성장률은 '95년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실질GDP 성장률임.

*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2002년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70억 달러(북한 원화 21,330.7억원)로서 남한의 약 1/28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GNI는 762달러로서 남한의 약 1/13에 불과하다. 북한경제는 본래 1970년대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속도전' 과 같은 김정일식 경제정책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저성장, 경제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1998년도까지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의 바닥을 친 후 '99년도에 6.2% 성장이라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이후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경제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는, '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에 따른 체제의 안

정화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무상지원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경협 확대에 의한 외화의 유입이 일부 공장가동을 정상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아직 전 산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의 <표 5-2>에서 보듯이 199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세는 농업, 경공업 및 건설업 등의 분야가 주도함에 따른 것으로 정부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및 중공업분야는 여전히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지방공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남한으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비료가 농업 생산증가를 가져오고, '9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토지정리사업 및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남포-평양간 고속도로 건설,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노동력을 대거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건설분야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부문은 2002년 -4.2%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 및 원자재 부족의 지속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생산내용을 나타내는 서비스부문 또한 사실상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2002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행부문에서 식량부문을 제외한 전력, 석탄,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선행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및 GNI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림어업	-10.2	-2.7	2.7	-10.4	0.5	-3.8	4.1	9.2	-1.9	6.8	4.2
광업	-8.5	-6.1	-5.5	-2.3	-11.9	-13.8	-6.1	14.1	5.8	4.8	-3.8
제조업	-1.5	-17.8	-3.8	-5.2	-8.9	-16.8	-3.1	8.5	0.9	3.5	-2.0
(경공업)	-6.2	-7.3	-0.1	-4.0	-6.8	-12.5	-0.2	2.4	6.2	2.3	2.7
(중공업)	-0.4	-21.0	-5.2	-5.9	-9.8	-18.8	-4.6	11.6	-1.5	4.1	-4.2
건설업	5.9	-2.1	-26.9	-3.2	-11.8	-9.9	-11.4	24.3	13.6	7.0	10.4
서비스업	0.3	0.8	2.2	1.7	1.1	1.3	-0.5	-1.9	1.2	-0.3	-0.2

*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북한은 최근 몇년사이 경제건설의 최대과제로 현존 경제토대의 정비와 국가 경제력 강화, 인민경제의 현대화, 인민경제생활의 향상 등을 강조하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성장을 위한 투입변수(inject variables)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전력부문을 비롯한 중화학공업부문의 설비들이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거의 노후화·낙후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화학공업부문의 정상화, 나아가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2)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한 나라 경제의 산업구조와 공업구조는 경제발전 및 정책의 성과가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에서 살펴본 3대 경제발전노선은 북한의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형태를 결정지었다. 즉 자력갱생원칙에 기초한 자립경제노선에 의해 북한의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부문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현상을 가져왔던 것이다.

〈표 5-3〉 북한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

구 분	1956	1960	1970	1980	1990	1995	1999	2001	2002
농림수산업	26.1	28.9	21.5	20.0	26.8	27.6	31.4	30.4	30.2
광 공업	40.1	41.3	57.3	60.0	42.8	30.5	25.6	26.0	25.8
SOC·서비스 ·정부기타	33.8	29.8	21.2	20.0	30.4	41.9	43.0	43.6	44

* 자료: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표 5-3〉을 보면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1990년대 이전에는 평균 25% 내외를 차지하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30%이상 상승하는 반면, 광공업 부문 비중은 1980년 60%까지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90년대 이후 26%대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차산업인 정부·서비스부문의 비중은 경제난 이후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90년대 이후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광공업부문 비중이 낮아진 것은 한 마디로 경제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에너지 및 원자재부족으로 석탄, 철강, 무연탄 등 광업생산 뿐만 아니라 공장가동률이 급락하고, 식량난으로 개인밭 경작 등 농업 생산활동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부문은 서비스부문을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그 비중이 별로 높지 않았다. 최근 이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상업, 유통, 금융, 보험, 서비스부문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형수력발전소, 고속도로, 주택 등 건설부문에서의 실적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산업구조 추이는 대개의 모든 국가가 공업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행하는 현상이다.¹⁸⁾

한편, 북한이 유지해왔던 중화학공업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균형성장전략 및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의 공업구조에 중화학공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불균형 현상도 가져왔다. 물론 아래의 〈표 5-4〉에서 보듯이,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이 거의 3:1로 나타나는 북한 공업구조의 불균형 현상은 현재의 남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과는 달리 첫째, 총국민생산액 중 농업생산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둘째 심각한 산업불균형의 진행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경공업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농업



18) 북한은 본래 사회총생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농업, 공업, 건설, 화물운송, 생산적 채산, 생산적 상업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전기·가스·수도 부문은 공업생산액에 편입하고 서비스부문은 추계하지 않는데, 북한의 추계 방법에 따른 1990년도 광공업부문 비중은 총 사회총생산의 45.3%이었다.

부문의 비중이 역설적으로 높은 산업구조의 왜곡속에서 중공업부문 비중이 높아지는 기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1970년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큰 중화학공업부문의 정상화는 아직 애로를 보이는 한편, 폐자재 및 내부자재를 활용하는 8·3인민소비품 생산이 확대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방침' 및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⁹⁾

〈표 5-4〉 북한의 공업구조 추이

(단위 : %)

부 문	1956	1965	1975	1980	1990	1995	1999	2002
중공업	52.4	51.2	63.7	64.8	74.1	69.8	66.7	63.6
경공업	47.6	48.8	36.3	35.2	25.9	30.2	33.3	36.4

* 자료: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3) 재정규모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기능,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기능, 소득재분배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재정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총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국가가 개별 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 (social consumption)²⁰⁾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2000년도부터 북한은 눈에 띄게 지방의 축산단지 및 양어장·닭공장 조성, 중소형발전소 및 주택건설, 탄광 확장, 각 도마다 '기초식료기지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20)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예산지출 항목에서 '사회적 시책비'로 부르고 있다.

북한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정보고'라는 형식으로 내각의 재정상(장관)이 전년도 및 당해년도 국가 예산규모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1994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1994년도 예산규모를 발표한 이래 3년간 재정상황을 발표하지 않다가, 김정 일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1998년부터 다시 재정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91.0억 달러이고 1999년도에는 92.2억달러로서 재정규모가 191.9억 달러였던 1994년도이래 1997년도까지 연평균 6.6%씩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표 5-5>를 보면 1998년도 재정규모는 1994년도에 비해 5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난에 따라 국가재정활동이 축소되었음을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재정규모 축소는 곧바로 자본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어 지난 1990년도 이후 9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4>를 보면 북한의 재정은 재정규모를 다시 공식 발표하는 1998년 이후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도의 경우 약 98억 불 정도로서 남한의 약 1/8규모에 불과한데, 북한의 이러한 재정규모는 남 북한 대비 GNI비율 1/28에 비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경우 2001년도에 재정부담비율은 18%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62.4%로 나타나고 있다.²¹⁾ 한편, 북한은 2003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2002년도에 집행된 세출입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수입은 계획의 100.5%, 지출은 계획의 99.8% 달성되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2002년도 재정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리고 2003년도 재정의 경우에도 수입은 전년 대비 13.6%, 지출은 14.4% 증가시킨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어 그 추정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2002년 7월 시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막



21)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12, p.65. 남북한의 GNI 대비 재정규모 비율을 비교함에 있어서 통계상 약간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즉 북한통계의 경우 GNI통계는 우리 한국은행이 추계한 수치인 반면, 재정규모는 북한이 발표한 것으로 서로 상치된다. 그러나 남북한 비교의 의미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 예산지출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은 이를 반영해서 2003년 5월부터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평양시 등 도시정비,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토지정리사업 등에 투입하기도 했다.²²⁾ 본래 북한의 재정운용방식은 균형재정을 기조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경제회복에 최대 목표를 두면서부터는 2002년도를 제외하고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속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이 추세를 2003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이른바 선행부문, 즉 전력, 농업, 석탄, 금속, 철도·운송 부문과 과학기술부문 등에 예산편성을 집중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석탄공업 30.9%, 전력공업 12.8%, 농업 21.3%, 경공업 12.4%, 건설 18.5% 증액 지출하고 있다.

22)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인민생활공채발행법령」에 따라 발행된 인민생활 공채는 10년 만기 500원, 1000원, 5000원권 3종으로 발행되었다. 이번 공채발행은 북한이 1950년대 초반 전쟁 당시 발행한 이후 처음이었다. 인민생활공채의 당초 판매는 2003.5.1~7.31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일반 주민들의 구입능력 부족으로 500억원의 발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2003년 연말까지 연장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5〉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연 도	달러표시(억 달러)	원화표시(억원)	대미환율(원)
1988	143.9	316.6	2.20
1990	163.7	355.2	2.17
1992	185	394	2.13
1993	187	402	2.15
1994	191.9	414,4215	2.16
1995	(157.8)	(323,4974)	2.05
1996	(118.0)	(252,5220)	2.14
1997	91.3	197,1195	2.16
1998	91.0	200,1521	2.15
1999	92.2	200,1821	2.17
2000	95.7	209,5503	2.19
2001	98.1	216,7865	2.21
2002	-	-	-

* 주: 1) '95, '96년 수치는 '94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 -21.9%에 의거한 추정치이고, 97년 통계는 한국은행 추정결과.

2) 2002년도 예산집행결과는 절대수치 없이 지·배수로만 발표.

*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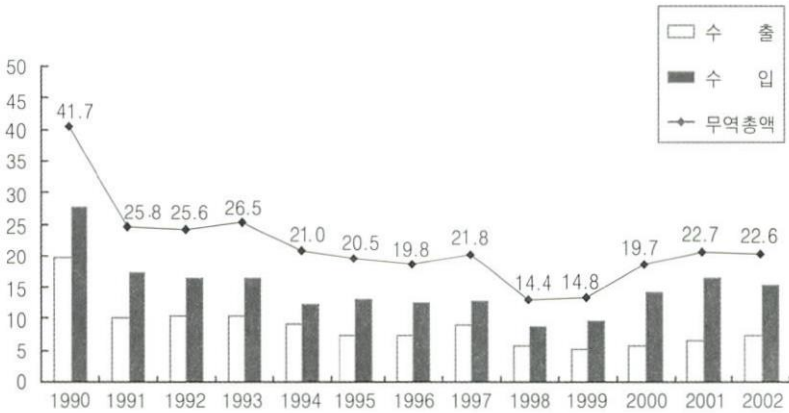
(4) 무역규모

북한의 무역규모는 1960년 3.1억 달러, 1970년 7.4억 달러, 1980년 34.5억 달러, 1988년 52.4억 달러로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급락하면서 1998년 14.4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지속된 1990~'98년간 무역액 하락률은 연평균 약 -9.3%로서 연평균 약 -4.3%씩의 하락률을 보인 GNI하락률보다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수입하락률은 연평균 약 -9.3%인 반면 수출하락률이 -9.7%일 정도로 수출의 감소가 아주 심각했다. 북한의 무역은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는 1999년부터 회복조짐을 보여 전년비 2.6%로 소폭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전년비 33.1%, 2001년도의 경우 전년비 15.1%로 대폭 성장세를 나타냄으로써 2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말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02년도의 경우 무역액이 22.6억달러로서 전년비 0.4% 감소하고, 2003년에는 약 3~4%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이 최근 이렇게 큰 성장세를 보이다가 다시 소폭 증가 추세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1999년 이후 무역증가 자체가, 첫째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결제에 투입되었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되었으며, 셋째 기계류 등 산업인프라 정비를 위한 설

비투자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²³⁾ 즉 한 마디로 북한 자신의 산업생산력이 회복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해외부문으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지원성 경제협력의 역할 그리고 이에 기초한 공장설비의 수입 증대 등이 북한의 무역증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처음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였다. 1990년 24.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된 1991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4.6억 달러로 줄어 들고,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 4천여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다가 2002년도에 8천여만 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5-6〉 참조)

〈표 5-6〉 북한과 구소련·중국간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구소련 (러시아)	총무역	24.7	4.6	3.2	3.5	1.5	0.8	0.6	0.84	0.50	0.46	0.68	0.80
	수출	10.5	1.8	0.7	0.5	0.4	0.1	0.2	0.17	0.01	0.04	0.04	0.04
	수입	15.2	2.8	2.5	2.9	1.1	0.6	0.4	0.67	0.49	0.42	0.64	0.76
중 국	총무역	-	-	6.9	9.0	6.2	5.4	5.6	6.5	4.07	3.70	7.38	7.37
	수출	-	-	1.5	3.0	2.0	0.6	0.7	1.2	0.57	0.42	1.67	2.70
	수입	-	-	5.4	6.0	4.2	4.8	4.9	5.3	3.5	3.28	5.71	4.67

*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23) 2001년도의 경우 기계류 19%, 철강제품 18%, 섬유류 19%, 화학공업제품 1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OTRA,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2.6

구소련은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기초 원자재의 주된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장·단기 경제협정을 통하여 북한경제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의 급격한 부진은 단순한 무역감소 이상의 충격을 북한경제에 끼쳤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19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6%나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당시 북한 원유 도입량의 77.2%, 곡물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 교역물자의 부족과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로 대중국 교역 역시 1994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도에 3.7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북한의 경제회복조짐에 따라 북·중교역은 2001년 이후 급증하여 2003년도에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과의 무역관계가 급락한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서(2002년도의 경우 북한 대외무역의 32.7% 차지) 북한이 도입하는 식량, 원유 등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주요 수입처로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추세를 살펴보면 이러한 회복조짐과 더불어 무역상대국의 비중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대외무역은 과거 구소련, 중국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 일본에 절반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은 1위의 수입대상국, 일본은 1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았는데, 2003도년에는 대일교역액이 급감하면서 중국이 1위의 수출국으로도 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대외교역 통계에 남북교역도 포함시키게 되면 북한의 대외교역의 2/3는 한·중·일 3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 편입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가산할 경우 남한은 북한에게 있어서 2002년 이후부터 제2의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에게 있어서 최대 무역수지 1위의 흑자국이 일본으로부터 남한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북한의 경제난은 모든 공급경제 부문에서 동시에 애로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shortage of supply)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의 형태는 공급경제(economy of supply side)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량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다음 <표 5-7>에서 보듯이 350만 톤~400만 톤 내외로, 정상배급 기준으로 볼 때 수요량에 비한 매년의 부족량이 평균 200~250만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5년~1998년 동안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도부터 국제농업기구를 비롯한 남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비료·종자·농기구 등의 지원에 힘입어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식량난도 약간 완화되어가고 있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2년도 이후부터 곡물생산량은 ① 양호한 기상조건, ②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 지원, ③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 등에 힘입어 400만톤대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배급을 기준으로 한 총수요량 대비 부족량은 여전히 200여만 톤으로서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7〉 1992년 이후 북한의 식량수급량 추이

(단위:만톤)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요량	650	658	667	672	673	670	639	650	606	613	626	632	639
공급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9	422	359	395	413	425

* 자료: 농촌진흥청

* 주: 수요량은 정상배급 추정치이고 공급량은 전년도 곡물수확량임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경부터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농법'²⁴⁾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의 모순 누적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 경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평균 200여만 톤 정도의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1인당 배급량을 700g에서 456g으로 줄이고 부족 식량의 대부분을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 관련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400만톤 이하로 격감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자연재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989년 대비 1990년도의 쌀생산량은 32.5%, 옥수수는 27.3%, 전체 식량의 양은 26.8%로 감소되고 있을 정도로 식량생산량이 격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난이 본격화됨과 더불어 1995년도 이후 3년 연속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식량문제'는 계속 구조적으로

24) 북한에 따르면 주체농법이란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p.419)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 농법은 한 마디로 과학기술적 차원의 농법이라기보다는 식량증산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식량위주 및 토지집약적 농사체계로서 과다 비료투입, 단작체계, 밀식재배 등으로 인한 토지 지력의 고갈 및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을 가져 오게 된다.

진행되었다. 북한에 이렇게 '식량문제'가 구조적으로 진행되자 국제사회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절대 식량부족량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소 조짐은 북한 스스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 대외지원에 힘입은 것으로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계속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우선 첫째, 1996년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협동농장의 최종 작업단위인 분조규모를 20명에서 7~10명 단위로 축소하고, 계획생산량의 감소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자유처분권을 부여해 주고 있다. 둘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인이 경작하는 텃밭의 규모를 30평에서 400평까지 확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 초기 개혁·개방 당시 도입한 농가생산책임제와 비슷한 '가족영농제'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셋째,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 강화와 더불어 협동농장 지배인을 농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화 조치를 내리고, 물질적인 인센티브제도도 강화하여 평균주의적 분배주의를 타파하고 있다.

넷째, UNDP가 세운 '북한농업재건계획' 하에 약 10여 만 정보가 넘는 경작지에서 이모작을 실시하거나,²⁵⁾ '사이그루재배법'을 도입하여 그간의 식량 위주 단작체계를 수정하고 있다. 특히 1999년도부터는 '적기적작(適期適作)' 및 '적지적작(適地適作)'을 강조하며 그 동안 금과옥조처럼 오직 식량 위주의 작물체계로 경작해왔던 주체농법에 대한 수정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자농사혁명'을 강조하여 옥수수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된 밭작물 대체작업도 벌이고 있다.²⁶⁾ 그리고 식량문제 해결의 전도를 감자생산에서 찾고,



25)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이모작 면적은 1997~1998년 3만 8천 정보, 1998~1999년 7만 정보, 1999~2000년 10만 정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26) 북한은 토지정리가 끝난 황해남도 청단군, 벽성군, 연안군 등의 경작지에 감자를 집중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노동신문, 2001.5.31); FAO, WFP에 따르면 북한의 감자 경작 규모는 1998년 4만 8천 정보 1999년 17만 정보, 2000년 약 20만 정보, 2001년도는 40만 정보까지 늘릴 추세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전체 경작지의 약 1/6이 감자 경작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농업성 산하에 '감자생산국'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에는 '감자생산체'를 신설하고 감자생산의 특화를 위해 각 군마다 1개 협동농장 1개 분조를 '감자분조'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1998.10~'99.4; 3만 정보), 평안북도(1999~'00; 5만 1천 5백정보), 황해남도(2000~'02; 10만 정보), 평안남도·평양시·남포시(2003~'04; 9만 정보), 황해북도·개성·함경남도(2004~'05) 등 총 60만정보 경지정리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토지정리사업도 벌이고 있다.²⁷⁾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농가에 안정적인 토지이용권과 더불어 생산 및 경영권의 이양, 농업생산물의 자율판매권까지 부여해주었던 중국의 농가생산청부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선조치들로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구조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에너지난

북한의 에너지 공급문제는 현재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30%내외로 떨어뜨리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식량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표 5-8>에서 보듯이 1990년대 들어와 현격하게 감소하는데, 석탄의 경우 1989년 대비 2002년도에 37.6%, 원유의 경우 76.3%, 전력생산의 경우 35.2%나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북한의 공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급격한 감소는 당연히 북한경제를 단시일내에 '빈곤의 함정'으로 유도

27) 북한 농업성 최명현 국장은 조총련 기관지인 월간 『조국』, 2002년 10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토지정리사업 규모는 약 60만ha라고 밝히고,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만 지난 4년 간 모두 18만ha의 토지가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6천ha의 새로운 '부침땅'(경작지)을 얻었다고 하며, 토지정리사업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무엇보다 석탄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요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석탄 70%, 수력 16%, 유류 7~8%, 기타 4%로 석탄의존율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립경제 노선에 따라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석탄 중심의 에너지공업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침체되면서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미도입, 자재의 공급예로 등으로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석탄생산량의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즉 1985년 3,750만 톤에서 1990년대 3,135만 톤으로 이미 11.6%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하자 석탄생산량은 더욱 하락하여 1998년도에 1,860만톤으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9년도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하는 듯하더니 2002년도 현재 2,190만톤으로 전년 대비 -5.6%로 다시 감소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²⁸⁾

〈표 5-8〉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억kwh, %)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석탄	3,508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20	2,310	2,190
	6.3	-23.4	-6.4	-5.8	-7.2	-6.3	-6.7	-11.4	-1.9	-9.7	12.9	2.7	-5.6
원유 도입	-	252.0	189.0	152.0	136.0	91.0	110.0	93.6	50.6	50.4	31.7	57.9	59.7
	-	-	-25.0	-19.5	-10.5	-33.0	20.8	-14.6	-46.2	-1.2	-36.6	48.5	3.1
발전량	294	277.4	263.0	247.0	221.3	231.3	230.0	212.7	192.7	169.5	185.7	201.5	190.4
	4.2	4.2	-5.0	-6.1	-10.5	4.5	-0.4	-7.4	-9.4	-11.9	9.2	4.1	-5.7

* 자료: 통일부, 한국은행



28)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12, p.54

원유도입의 급격한 감소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도에 252만 톤이었으나, 구소련으로부터의 도입이 대폭 감소·중단됨으로써 이후 무려 이전의 1/3수준으로 격감하였다. 최근 북한의 주요 원유 도입은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성 도입 내지는 KEDO사업에 따른 중유 제공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북핵문제로 그나마 2002년 12월부터 KEDO가 제공하는 중유공급도 중단됨으로써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KEDO의 중유공급 중단은 북한 연간 발전량의 약 10~15% 감소효과를 가져와 전력난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전력난은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부각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전력생산구조가 수력 대 화력의 비율이 대략 6:4로 수력의 비중이 약간 높지만,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석탄 화력발전소로서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저열탄의 대량 사용으로 화력발전소의 효율성 하락 및 노후화도 크게 진전되어 화력발전 생산을 악화시켜오고 있었다. 또한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설비들이 일제시대나 1950~60년대에 구소련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발전효율이 낮고 고장도 잦은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댐의 담수율도 낮아 정상적인 수력 전력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실제 발전능력의 30%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1998년도부터 “전기 문제가 풀려야 쌀도 나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연재(그을음), 벗겨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메탄가스 같은 대체연료의 개발이나 조수력이나 풍력, 하천의 낙차(落差)를 이용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발전소는 산업경제 정상화에 필요한 전력난 해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최근 준공되고 있는 안변청년2호 수력발전소나 태천수력발전소는 강우량이 일정하지 않고 갈수기에는 완전 가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의 전력난 해소에 큰 도

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발전소들은 노후화를 넘어 '물리적 수명'이 다 된 설비들로서²⁹⁾ 대대적인 시설보수 내지는 교체가 요구되는 현실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3년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계획」(‘03~’05년), 「3단계 전력증산계획」 중 1단계(‘03~’05년) 계획의 실시,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03~’07년) 등을 세우고 노후화된 설비들의 교체나 보수, 전력 및 석탄생산에의 자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배분 등 노력을 하면서 해외기업 및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예비자원의 동원이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고, 외부와의 전력협력 문제도 주변정세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북한의 에너지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원자재난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원부자재의 부족도 한 요인이다. 원부자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원자재난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그 동안 원자재공급원 역할을 해주었던 외부조달원이 축소된 것도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자재난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다음 <표 5-9>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9) 2002년 7월 16일 평양화전 기술부 기사장 박완기(62)씨의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전능력이 50만KW인 평양화력발전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상 가동되었지만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점차 생산량이 감소했고, 1990년대부터는 석탄공급마저 원활하지 못해 현재 전력생산량이 전성기의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설비들이 30여년이 넘은데다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수명이 다한 셈이라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표 5-9〉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구 분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철광석	816.8	476.3	458.6	422.1	344.0	291.0	289.0	378.6	379.3	420.8	407.8
비철금속	22.7	16.4	16.0	15.4	11.6	10.8	9.7	11.7	9.6	9.2	8.7
강 철	316.8	185.9	172.8	153.4	120.8	101.6	94.5	124.3	108.6	106.2	103.8
시멘트	516.9	398.0	433.0	422.0	379.0	334.0	315.0	410.0	460.0	516.0	532.0
비 료	80.4	90.1	73.8	67.6	53.6	43.1	39.2	57.2	53.9	54.6	50.3

*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년도

〈표 5-9〉를 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 주요 기초원자재 공급량은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으며, 1999년 이후부터 약간의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멘트를 제외한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비료 등의 생산은 그다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것도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5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화학공업부문의 회복은 여전히 난제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 회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광공업 가동률은 최근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30%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쉽게 타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부족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한 기초원자재 생산의 이러한 애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은 구소련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보수 및 대체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설비들이 신 투자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4) 외화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내부자원 동원 및 자본충원이 부족하고 고갈된 상황에 직면하면 해외부문으로부터 충당하는데, 북한은 현재 외채상환불능(모라토리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외화가득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달성했다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해방 직후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해외자본을 활용해 오고 있었다. 즉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 달러 등 총 47.5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전후 경제복구, 군사력증강,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등에 투자를 해왔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1960년대 이전에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유·무상으로 들여온 것이고 12.4억 달러는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 들여온 것이었다.³¹⁾ 그러나 이들 국가로부터 도입한 외채는 1970년대 후반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되어 2000년 현재 그 규모가 124.6억 달러에 이르러 명목 GNI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5-10〉 참조)

따라서 북한이 외화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채상환 불능상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995년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신용도는 조사대상 170개 국가



30) 이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2000년 2월 러시아와 「조·러 친 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그 길을 열어놓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2001년 8월 4일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선언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협력 관계 복원으로 북한은 과거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북한의 4대 화력발전소(북창, 동평양, 청진, 나진) 및 김책제철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p.385

〈표 5-10〉 북한의 외채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외채	78.6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121.0	122.9	124.6	N.A
외채/명목GNP	34.0	40.5	46.0	50.3	50.3	53.0	56.1	67.2	96.0	77.8	74.2	N.A

* 자료: 한국은행

중 167위였고 1996년 유로-머니(Euro-Money)지에 의하면 178개 국가 중 176위로 평가되어 있다. 아울러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외화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제3절 ⅢⅢ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해나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이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차관으로 대체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현실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외무역이란, 김일성 주석이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시장(사회주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자립경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부족한 국내공급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보완적 경제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한 마디로 북한 당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외무역을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간의 등거리 외교에 의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으려는 정책이 중·소 분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상원조도 중단되면서 사회주의국가 일변도의 대외경제교류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내포적 공업화’(Intensive Industrialization) 추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인 자본설비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와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되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서방 선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에 의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자극 받아 대외무역관계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하며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서방선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비사회주의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거래로서 비계획경제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음 4단계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6개년 경제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했다. 이 계획은 1961년~1967년 중 추진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으로 '사회주의공업국'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다 내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공업과 국방산업 발전, 특히 기술혁명과 산업설비의 근대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 북한은 본래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기대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의 원조가 어려워지자 대외경제관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즉 서방국가로부터 기술 및 대규모 설비 플랜트 등을 차관 형식으로 도입하는 제1차 대외 경제개방을 추진해 나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다음 <표 5-11>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 상반기 소련보다 서방선진국가로부터 압도적인 차관도입 실적을 보이게 되었으며, 무역구성비 또한 1971년 공산권 80%, 비공산권 20%에서 1974년 공산권 40%, 비공산권 60%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표 5-11> 북한의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1961~1976년)

(단위 : 만 달러)

년 도	소 련		중 국		기타 사회주의국		OECD국		합 계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1966~1969	-	19,688 (58.4%)	-	10,500 (31.2%)	-	3,500	-	-	33,688
1970~1976	-	90,600 (41.5%)	-	160	-	-	-	124,200 (57.8%)	214,960

*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그러나 1972년 불어닥친 석유위기로 북한이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등 수출가격은 감소함에 따라 1975년부터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1976년 25억 달러라는 누적채무 문제와 아울러 '채무불이행'(Default)³²⁾이라는 사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합영법의 제정이었다.

(2) 합영법의 제정과 합영사업의 실시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공포하여 대외경제 교류형태로 단순한 물자교역 형태 외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북한이 이렇게 차관도입정책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첫째, 차관도입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채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술도입도 용이하게 하여 외화가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셋째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장점에 주목하게 된 점, 넷째 합영사업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지 않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통제하에서도 관리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남한의 적극적인 대외지향정책으로 1980년대 들어와 무역규모 및 경제력 면에서 남한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 자극 받은 점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합영기업(equity joint venture)이란 북한의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의 합영기업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전인민

32)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1976년 일본에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은 1976년, 1979년, 1983년 세 차례에 걸쳐 약 800억 엔에 이르는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적 소유제 및 협동적 소유하의 기업형태외에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자본주의적 형태의 기업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서방과의 대외경제교류 필요성만을 인식하였던 1970년대 대외경제개방정책보다는 일정 정도 발전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했던 서방국가로부터의 합영사업 유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의 대외신용도 추락과 무역대금 미결제 문제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프랑스와 합영사업 제1호로 체결되었던 양각도호텔 건설사업도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로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북한은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은 1986년 소위 김일성 주석의 '2·28교시'에 의해 1992년까지 활발하게 추진되어 나갔다. 합영법에 의한 조·조 합영기업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약 100여 개 정도이고 건당 평균 투자액이 약 100만 달러 내외로 거의 2/3기업들이 주로 1차산업과 경공업, 식당·상점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조업중인 기업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³⁾

결국 1980년대 합영법제정과 합영사업 실시는 '조·조합영'의 형태로 그치고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이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을 일종의 '애국공장'³⁴⁾ 사업으로 여기고, 기타 국가들과의 합영사업의 경우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기업관리방식과의 충돌, 합영사업 공장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당국의 행위 등등 한마디로 계획경제시스템 속에서 합영사업을 관리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도 때문이었다.



- 33)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모란봉 합영회사의 경영자였던 전진식씨는 이미 1993년 12월 일본 T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가동중인 합영회사가 20개 회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조 합영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아카데미, 2000 참조
- 34) '애국공장'이란 김일성·김정일부자 생일기념 축하사업, 조국 경제건설에의 공헌, 충성의 모금운동이란 각종의 명분하에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조총련에 의해 헌납된 애국라면공장, 애국병제조공장, 애국맥주 제조공장 등을 말한다. 조총련이 북한에 기증한 이러한 공장 수는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합영사업의 실시는 북한이 국제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다양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 추진되는 신무역정책의 토대가 되었지만,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의 보완적 요소로만 여기고 해외자본이 유입된 경제단위를 계획경제시스템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본의 충당에 구소련 및 중국이 아직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위기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정책, 즉 1980년대 합영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북한은 그 대안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 7월부터 냉전 후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의 하나로써, 두만강유역의 3개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가들간에 '두만강개발계획'(UNDP 프로젝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정책의 커다란 성공으로 두 번째 개혁·개방단계로 진입하려는 중국의 사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 10월 당시 정무원 총리였던 연형묵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 주해,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한 후 1991년 12월 함경북도 최북단인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선포하였다.

북한이 1995년, 2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수정해 놓고 있는 나진·선봉 경

제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나진·선봉을 2001년~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중개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공업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부문 약 9억 달러, 서비스부문 약 1억 달러 등 총 투자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³⁵⁾ 1996년 9월과 199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포럼을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불안정, 기초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남한 기업 참여 배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00년 12월 말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6억 5,000만 달러의 계약 체결과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³⁶⁾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운수·상업 등 서비스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화교자본이 거의 2/3정도, 일본자본 그것도 초총련자본이 약 20% 정도로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³⁷⁾



35) 이 계획안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996년 7월 발간한 투자대상중합목록에 따른 것이다.

36) KOTRA, "2002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www.kotra.or.kr/main/info/nk

37) 북한은 나진·선봉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과거 합영법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지금까지 60개 가까이 제정·정비하고 있으며, 법 조항을 수시로 베트남이나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고 있다.

(4) 신의주·개성·금강산 신경제특구의 추진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10월에는 금강산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들을 잇달아 선포했다. 이는 기존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 추진을 의도한 것으로서, 북한이 네번째 새로운 대외경제 개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의주·개성·금강산 경제특구에 관련된 법령들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비해 상당히 획기적·개방적이고 시장경제지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를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의 직할하에 두지만 독자적인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등을 부여하고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 명의로의 대외사업, 여권발급 및 독자적인 구장·구기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자들의 경제활동 보장 및 자율성 허용, 수익성 보장, 특혜면에서 중국의 심천 특구와 거의 비슷한 경제개방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제도면에서는 홍콩식 제도를, 경제개방 및 경제특구 제도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 방식을 선별 혼합함으로써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보다 진전된 경제적 자율성 및 특혜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의 경우 신의주처럼 완전히 독자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남한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수익보장을 규정해 놓고 있다. 즉 법조항에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개성공업지구법 제1조) 또는 “국제적인 관광지역”(금강산관광지구법 제1조)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신의주가 홍콩식 경제특구형이라면, 개성·금강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의 자율성만 보장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내 경제특구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러나 개성·금강산 특구의 경우 내용적으로 볼 때

투자재산보호 및 상속권 보장, 투자재산의 국유화금지, 자유로운 외화반출입 및 이윤송금, 토지임대 등 면에서 신의주와 비슷하지만, 무관세· 전환성 외환 외에 신용카드 사용 허용, 일부 업종에서 신의주보다 유리한 세제 등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과거 남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보다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동시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통행보장에도 남한 당국과 합의·추진함으로써 개성과 금강산을 남한기업들의 주요 투자활동 무대로 열어놓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⁹⁾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의 추진은 사회주의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서남북 변경인 일부 제한적인 지역 공간에만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이지만,⁴⁰⁾ 과거보다 질적으로 전환된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과 같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은 한계가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 및 남한 기업가들의 투자진출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시작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8) 신지호, "개성공단지구법 분석", 2002.12, p.3,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39)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의 지정은 그동안 비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제3국을 통한 통행, 통신, 화폐거래 등을 직교역하고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남북경협을 투자진출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이다.

40)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무역경제학과 리명숙(46.여) 교수는 2002년 11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경제특구를 설정하면 점차 그 나라 전체가 특구처럼 되었으나 우리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며,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지향과 결심"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처럼 점-선-면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식 개방에 머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1) 대외 경제개방 환경조건 및 내부 시스템의 미비

사회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업소들의 무역자유권 확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은 아직 몇 가지 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관리체제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은 현재 1992년 신무역체계 도입 및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영기업소들 중 일부 주요 기업소 위주로 부분적으로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기업내부에 재투자하거나 자체 유보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소들이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당·정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활동을 뒷받침할만한 무역금융제도도 미비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이전과는 달리 이제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시장과 할 수 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국제시장원리를 체득한 경영자도 적극 육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개혁·개방 당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 투자기업과 합작·합영 및 단순교역을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논리보다는 개별적 인간관계에 기초해 무역관계를 맺으려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이 이미 대외경제개방을 하여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들보다도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이 국가들과 외국자본 투자유치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북한은 대내외적 정치부문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자관리 및 노동생산성 수준, 임금조건, 인프라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 국가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최근 북한은 외국인 투자유치

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보다 유리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방식도 적극 개혁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 수준보다도 낮은 개방 및 경제개혁수준,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경제환경의 불안정, 국가신용도의 최저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2)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 처음 진출할 때, 이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기지 활용만이 초기 투자의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 배후에 있는 소비시장의 성숙에 따른 내수시장 선점도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장기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구매력 자체가 고갈되어 있고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의 적극 진출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특구들은 모두 내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로서 내수시장과 고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구내 기업들이 생산제품들을 북한 내수시장에 쉽게 판매하기도 어렵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들도 북한내에서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의도하는 북한경제개발의 효과에도 의문을 줄 수 있다. 중국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13억 인구라는 중국 내수시장이 매력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에 선진적 경영기업 및 기술들이 전파되어 가는 파이렛 역할도 하였음을 북한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열악한 사회간접자본부문과 북한 당국의 해소 능력 부재

북한의 사회간접부문 열악성은 거론할 여지도 없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사회간접분야의 낙후로 인해 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도

일부 단절되어 있는 데, 이런 상황이란 중간재를 생산하면 소비재 시장이 부재하고 소비재를 생산하려면 중간재가 없는 현실로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 어렵게 하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사회간접부문은 거액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부문으로서 특구내에 진출하는 개별 기업들이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특구 개발 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정비를 위한 투자의 2/3정도를 중앙정부·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이 직접 담당하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개발차관 및 외자로 충당해 나갔다. 즉 처음부터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탁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일정 부문의 사회간접자본부문 구축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가운데 외국인자본을 끌어들이었던 것이다.⁴¹⁾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은 이러한 능력이 없어 경제특구 개발을 직접 주관하지 못하고 개발업자에게 조차 형식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출신의 기업가로서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양빈의 구속으로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금강산·개성 경제특구의 경우 한국내 국민여론, 북미·북일관계,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여건속에 놓여 있다.

(4) 북한 당국의 제한적 개혁·개방정책

경제개혁과 대외경제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혁·개방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와 안정성, 개혁·개방에 대한 확고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의 초기에 공산당 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덩소평이 “개혁·개방은 10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의

41) 김석진, “경제특구, 북한경제 살릴 수 있나”, 『LG주간경제』, 2002.12.18, p.11

지 또한 확고하였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할 수 있었고,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권도 하부 행정단위 및 경제단위로 분권화해나가면서 사실상 정치부문의 개혁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자본의 북한 진출에 '정치적 리스크'가 중국, 베트남에 비해 상당히 크다. 물론 최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실용주의적 경제관리의 강조로 '북한식 변화'의 틀을 구체화해나가고 있지만, 이 자체가 체제시스템의 개혁 없는 정책노선의 실용주의적 수정이기 때문에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일정 수준의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것이 정치·경제 시스템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외경제개방의 성과에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책의 집행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의도했던 대외경제개방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체제전환국가들의 사례는 잘 보여준다.

제4절 ⅢⅢⅢ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 · 개방전망

최근 북한경제는 커다란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9년간 지속해온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행진을 멈추고 5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고 '북한식 경제개혁', 즉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1998년 김정일정권의 공식 출범 후 3~4년간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여기 저기서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부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

(1)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

북한은 정치체제가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 기초에너지 및 원자재가 필요하지만, 첫째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 및 자본이 도입될 때까지 어떻게든 경제회복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대체에너지 및 원료라도 개발하여 공장가동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둘째

21세기는 첨단과학시대로서 그 변화에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셋째 김정일 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는 시대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제시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아무튼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 당국은 19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과학기술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관련 예산도 1999년도부터 증액해 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는 현대적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 경제강국, 과학기술대국을 세우는 것”⁴³⁾이라고 하면서 적극 과학기술육성에 토대를 둔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장이 멈추더라도 과학기술 개발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학기술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과학기술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11월에 전자공업성을 신설하고, 2000년도에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과학기술육성이란 곧 IT산업육성으로 표명되고 있으므로 실행적으로는 IT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도약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2)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 도약’ 전략

과학기술육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IT산업을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삼고 이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



42) 북한에서 나온 한 책자에 따르면, 북한이 내걸고 있는 과학중시노선은 첫째, 강성대국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붉은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철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셋째 군사강국건설에서도 커다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하는 당면 현실 때문에 혁명전략 노선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재호,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pp.31-37

43) 「로동신문」, 2002.1.23

으로 보인다. 즉 첫째, 북한의 산업은 현재 노후화되고 폐품화된 설비가 많아 대체설비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외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북미관계 개선이 요구되지만,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우선 단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IT산업 분야 중 하드웨어 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소프트웨어분야는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내 성장이 가능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20세기형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북한이 설사 과거 산업생산력을 회복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발전이 뒤떨어져 영원히 뒤쫓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경제 '회복'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도약'도 동시에 이루는 전략도 요구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⁴⁴⁾

넷째, IT산업 육성전략은 북한이 의도하는 '제한적 개방전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IT산업이란 굴뚝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공단이 필요 없으며 설사 외부기술도입과 대외관계를 맺더라도 사상성 좋고 훈련이 잘 된 몇몇 엘리트 계층만 있어도 되므로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체제유지의 침해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의도에 따라 북한은 200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기술개선(技術改建)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각의 주도 아래 몇몇 주요 산업 및 공장부문의 설비들을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시설들로 대체하는 운

44) 북한은 노동신문 2001년 1월 9일자 사설에서 "경제를 추겨 세위도 종전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여 그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오물썸물 뜯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 최상의 것을 큼직큼직하게 들여앉히자는 것이 우리의 뱃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등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사무자동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의 중요성과 컴맹 퇴치운동 등을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매일 강조하며 IT인력 양성 및 컴퓨터 교육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 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각 대학에도 정보관련 단과대학 및 학과를 설치하여 IT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의 현재 정보화 수준은 하드웨어는 초보적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IT산업 육성에 주력해오다가 최근에는 이동통신, 하드웨어, 인터넷 등으로도 그 대상영역을 확대하여 적극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북·중 합작으로 「아침-판다 PC」라는 펜티엄 IV급 컴퓨터 조립생산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연결된 '광명'이라는 이름의 내부 인트라넷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120여개에 이르는 경제부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여 e-비즈니스도 시도하려 하고 있으며, 태국 록슬리사와 합작으로 동북아전신회사(NEAT&T)를 설립하고 2002년부터 소규모로나마 이동통신 서비스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T산업 육성은 전력난 및 기본 통신 인프라의 열악, 바세나르 협정에 의한 첨단기술의 도입 곤란, 외부 세계와의 인터넷 연결 부재 등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단번도약'의 선도산업 역할을 하기에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5대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5대 선행부문이란, 전력, 석탄, 농업,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을 말하는데, 북한은 이 부문부터 산업생산력 회복에 주력하고 이 부문들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의 연쇄반응적 경제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북한은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경제

비의 대부분을 선행부문의 정상화 및 이 부문의 기술개건(技術改建)⁴⁵⁾에 집중 편성하고 있으며, 선행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전력·석탄의 정상화에 집중 지출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력 12.8%, 석탄 30% 이상 예산을 증액 지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문은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 혁명에 의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산업생산력 회복의 관건은 에너지산업의 정상화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⁴⁶⁾ 또한 5대 선행부문의 산업생산력 회복을 위해 다음 절에서 살펴볼게 되는 경제정책의 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4)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북한은 최근 내부자원의 고갈 해소와 '저축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른바 '우리식 변화'를 표명하며 해외시장경제에의 편입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즉 2000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구원'을 설립하고, 60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도록 계속 손질하며 남한 및 해외 기업들과의 위탁가공을 겨냥한 「가공무역법」(2001년)도 새로이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신의주·개성·금강산 등 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추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무역결제망(SWIFT), 각종의 지적재산권 협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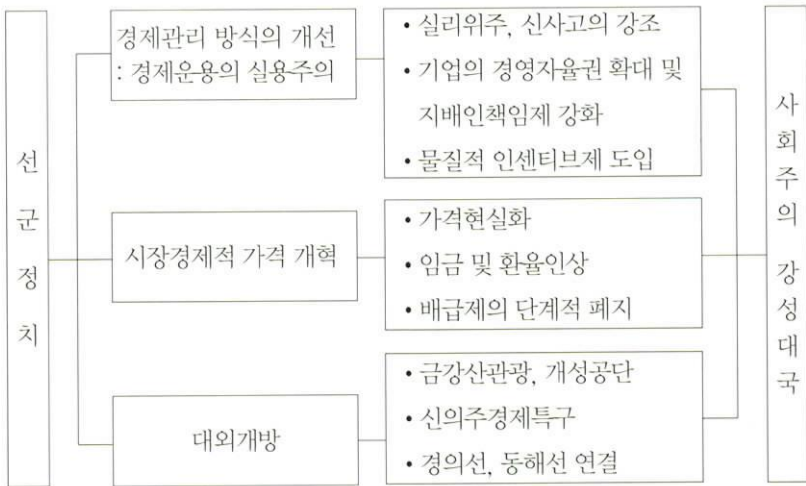


45) 북한의 「경제사전」에 따르면, 기술개건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인 기술설비들로 바꿈과 동시에 신기술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혁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85, p.290)

46) 북한은 2003년 공동선년사설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인민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고리로 계속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5대 선행산업보다 국방산업에 우선 투자자원을 집중 지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미간 핵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5대 선행산업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상화전략이 수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도 적극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매년 국제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거나 해외에 참가함으로써 국제상품시장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고 하고, 관료·교수·과학자·대학생들을 2000년 이후 연평균 300명씩 해외시장경제 시찰 및 연수를 위해 내보내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은 현재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방 수준에 거의 근접한 제한적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림 5-2〉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방향



2.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북한은 대략 위에서 살펴본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이미 1990년대 후반경부터 경제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었다. 즉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2~3년전부터 이미 선군정치에 바탕을 둔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해 '경제적 실리주의'에 입각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업소·기

관·협동농장의 경제일꾼들에게 강조하며 독립채산제의 강화, 협동농장 및 기업관리방식의 개편, 산업조직의 개편 등을 조금씩 도모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신의주·개성·금강산 경제특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최근 2~3년 사이 북한이 추진해오고 있는 경제개혁 및 경제정책의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리사회주의'의 강조

북한의 경제개혁 및 경제정책 변화의 기본 방향은 선군정치(先軍政治)에 바탕을 둔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큰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의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전세계가 자본주의시장화되어 있는 국제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이념의 변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관리 및 운용논리에 있어서의 변화만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라는 논리로 표방되고 있다.⁴⁷⁾ 지금은 21세기일뿐만 아니라 주변 국제경제환경이 모두 시장경제화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경제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실리주의'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각 경제단위들은

47)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처음 개혁·개방을 할 당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제시에 의한 정치이념의 수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개혁 및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후자에만 국한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실리사회주의'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2.11.25

수익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은 낮은 생산공정은 대담하게 들어내거나 폐기처분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하고 있다.⁴⁸⁾ 이렇게 '실리사회주의' 논리에 따라 각 경제단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생산량'이 아닌 '수익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계획경제에 시장의 기능을 일부 접목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향에서 2003년 3월부터 기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허용·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003년 6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및 분권화

그 동안의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전인민적 소유 및 집단적 소유에 바탕을 둔 '대안의 사업체계' (공업·기업관리), '청산리방법' (농업관리) 등으로 표명되어 왔다. 즉 당정책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이 각 경제단위에 개입하고, 중앙계획기구가 '계획지표'에 의해 각 경제단위들의 경제사업을 관리·통제하고 심지어 경영권까지 구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당간부가 행사하던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당 간섭 배제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공장 및 협동농장 지배인의 경우 노동자나 농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생산단위들의 독립성·자율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내실화하는가 하면, 세부적인 경제계획 및 생산지표, 일부 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 등에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도 내리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48) 김정일 담화문,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001.10.3

각 공장·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 초과이윤을 기업 자체로 투자 재원 및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유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권 및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주요 기업소의 경우 수출로부터 벌어들인 이윤을 기술개건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가 하면, 수출물량의 3배까지 수입물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주고 있다. 개별 생산단위 스스로 생산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가 하면, 기업의 채산성 호전 및 자재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기업간 원자재거래도 허용하는 '물자교류시장'도 도입하고 계획에 의해 부과된 기본생산량외 초과생산량이나 부산물의 시장판매도 30%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시행하면서 계열화·전문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리를 내지 못하는 기업의 파산·해체도 취해지고 있다.⁴⁹⁾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적지적작(適地適作)을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작목선택권과 자체 영농방식의 결정권을 주는가 하면, '분조관리제'도 개선하여 최종 노동단위의 분조규모를 20명 단위에서 7~8명 규모로 축소하여 생산할당량을 낮추고 초과 달성한 분조에게 자유처분권을 줄뿐만 아니라 분조간 평등분배를 실적분배로 전환하고 있다.⁵⁰⁾ 그리고 개인 경작지(텃밭, 패기밭)의 허용 면적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마디로 최근 2년여 사이 취해지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및 분권화 조치는 중국이 초기 개혁·개방 당시 내린 조치들과 상당히 비슷한 정책적 변화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가생산청부제', '경영청부제'와 같은 소유권에 있어서의 개혁조치 및 소유제의 다양화조치들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9) 북한은 최근 생산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기존 공장·기업소를 유지를 통한 정상화, 기술개건을 통한 정상화, 해체 등으로 분류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파산조치도 내리고 있고, 그 한 예로 북한 최대의 유리공장인 남포유리공장을 폭파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2.1.14

50) 그러나 분조에 대한 초과생산량 처분권 및 실적분배제는 식량난 지속에 의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노무관리의 변화와 인센티브제 도입

북한은 이렇게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하면서 노무관리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 간부의 생산단위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가운데 유급 당간부들을 대폭 줄이거나 무급으로 돌리고, 당·정 간부 및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던 의무적인 ‘금요노동’을 폐지하는 등 강제 노력동원제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무보수로 동원하던 사회적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보수를 줄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노동력 동원 방식도 개편하고 있다. 또한 계획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분배하는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간 개별 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본임금과 그 외의 실적 보너스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즉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120% 이상 계획을 달성한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누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조치들은 선전선동적 차원에 기초한 사회적 노동력동원 방식의 변화와 계획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에 따라 분배되었던 평균주의적 분배개념을 철폐하는 것으로 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화폐경제의 적극 도입에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도입되었던 인센티브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조치들이다.

(4)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가격개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계



51) 『조선신보』, 2002.10.16

획가격제 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가격제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욕구, 수요·공급의 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가격제로서 전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가격제였으며,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간의 극심한 가격차를 유발하여 암시장에서의 상품유통을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 조치를 내렸다.(<표 5-12> 참조)

〈표 5-12〉 최근 북한의 가격인상 조치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 조정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 배)
상품 가격	쌀	1kg	0.08	44	550
	옥수수알	1kg	0.07	33	471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평북)~남양 (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입장료	송도 해수욕장	3	50	17
	냉면	옥류관	10	145	14.5
	집세	평양기준	수입의0.03%	1m ² 당 월2원	-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환율	대미환율	1달러당	2.12	153	72
관세	비누, 신발, 직물		20%	40%	2

* 자료: 한국은행, 조선신보, 노동신문 등 자료 종합

즉 쌀, 옥수수, 생필품 등 가격을 거의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 임금의 경우 직종,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성과 등에 따라 15배~25배까지, 환율도 대폭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①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능력이 높은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차등분배 방식을 적용하고, ② 생산자의 생산원가외에 수요·공급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생산원가를 무시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폐지하였으며, ③ 가격제정에 국가가 여전히 관리·통제하지만 수요·공급 및 생산단위의 요구도 반영하여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허용하는 ‘합의제가격’을 도입하고, ④ 그동안 사회보장 및 사회주의적 소유원리에 입각하여 거의 무료다시피 공급되었던 주택, 토지 등에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⁵²⁾

이러한 가격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제 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 재정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암시장으로의 재화유출을 방지하여 계획경제부문을 정상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화폐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가격결정을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중앙, 지방행정단위들에서 관리·조절하도록 되어 있다”⁵³⁾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구매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시장에 자율판매하는 상품일지라도, 계획당국이 정해놓은 ‘최고한도가격’이라는 가격상한선내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⁵⁴⁾ 함으로써 시



-
- 52) 주택사용료의 경우 규모에 따라 한 채에 월 5~10원하던 것을 평당 7~15원으로 오르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왔던 물세, 전기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농장의 토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돼기밭에도(평당 12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 53) 「조선신보」, “더 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서 4 - 대담하고 혁신적인 개선책 : 로임 및 전방가격의 인상”, 2002.7.26
- 54)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 지표 상품의 최고 한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수요·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가격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3.12.22
-

장가격화 현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 북한 스스로 화폐경제 도입을 인정하고 있음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이유는 화폐경제 및 가격기능의 정상화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의 필요성을 어쩔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가격현실화조치는 '배급제'를 '구입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상품유통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활용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에 북한은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공산품의 거래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 행정단위들이 주관해서 종합시장을 확장내지는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을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상품을 대상으로 한 개인이나 기관·기업소·협동농장 등의 개별 상업활동도 허용하며, 대신 시장이용료 및 국가납부금(일종의 소득세)을 내도록 하고 있다.⁵⁵⁾ 특히 식당, 상점 등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경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관들이 협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합의제식당 및 상점'도 허용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과거와 달리 가격결정, 자원배분, 상품유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시장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5) 배급제·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

전반 가격의 현실화 및 개혁 조치는 북한의 거시경제 전체 차원 및 재정부문에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즉 우선 전반 상품들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인위적인 이중가격제 유지에 따른 가격편차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북한은 예컨대 농민

55) 평양의 경우 개인, 기관들이 운영하는 매대가 150여개이며, 현재 38개의 종합시장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 42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선신보』, 2003.12.24

들로부터는 쌀을 kg당 82전에 구매하여 주민들에게는 8전에 배급해 왔고, 이 차액을 국가재정자금으로 충당하는 배급제를 유지해 왔다(90% 적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도 콩과 같은 원료를 농민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기업소에는 낮은 원료가격으로 판매하는 보조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상된 월급을 가지고, 기업소·공장들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직접 물자교류시장 및 국영상점·식량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가 거의 무상가격이다시피 배급해 왔던 주요 원자재, 생필품 및 식량 등을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을 제외한 정부에 의한 사회적 시책을 축소내지는 폐지하여 개인의 가계부담화하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유동자금)도 자체 조달하게 하고 손실 발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폐지하는 조치도 내리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쌀 등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배급제를 유지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쌀배급소'가 '쌀판매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듯이, 배급제의 단계적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내지 철폐는 사실상 국가재정과 기업회계의 분리를 의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방식의 조세제도 도입을 유도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화폐경제의 도입,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재정 역할의 축소 등은 다른 한편 상업금융제도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금융개혁도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9월 일본을 방문한 김용술 북한 무역상(相)에 의하면 상업금융을 전담하는 신탁은행을 개설한 바 있는데, 2003년 1월 15일 이 은행과 조선합영은행을 합병하여 경영신용은행(Kyoungyoung Credit Bank)을 신설했다고 한다.⁵⁶⁾



56) 「중앙일보」, 2003.11.4

이 은행은 현재 일부 대외무역기업소만을 대상으로 신용장 개설, 예출금,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들 및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상업은행들의 신설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점차 발권업무만 하고 예대출 및 신용공급은 상업은행에 맡기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안이 추진된다면, 이 또한 금융부문의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되는 것으로서 주요한 정책적 변화가 될 것이다.

(6) 신경제특구 정책의 추진

제3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모기장식 개방'에 의해 자본주의시장경제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의주특별행정구 및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표명된 북한의 신경제특구정책은, 일정한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극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질적으로 진전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내부경제와 격리된 제한된 지역에서 의도하는 것이지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공존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성공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나 생각된다.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 및 경제개혁 조치들은 북한 경제 50여년 역사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경영, 농업경영, 분배제도, 무역제도, 재정·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 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조치들은 아마도 재정활동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비공식경제부문의 위축 및 공식경제부문의 활성화, 생산성 향상, 환율의 현

실화에 따른 대외경제부문의 경쟁력 증대, 인센티브제 도입 및 기업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개인·기업소의 개별 소득증대 등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조치 후 이러한 방향의 긍정적 징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400~500%에 이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에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①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부터 해결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②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이 후속 보완조치로 계속 도입하여 선행 개혁조치들이 탄력을 받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면, ③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북·미간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경제환경 조성이 주요 관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도입한 경제 개혁 조치들의 성공 여부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과제들이 단기간내에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개혁들이 추진된다면, 북한경제는 그럭저럭 유지되는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조치들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화(marketization)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주목해 둘 필요도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
- 권영경, "북한경제의 위기구조와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정책에 비추어 본 북한의 개혁·개방 평가", 『안보학술논집』, 제13집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_____,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나타난 북한의 국영기업개혁 내용과 향후 과제", 『북한의 최근 실상과 전망』, 2003년도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2003. 12
- 기무라 마쓰히코, 김현숙 역, 『북한의 경제』, 해안, 2001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 연구』, 후마니타스, 2002
- 김석진, "북한개혁 시나리오, 실현가능한가", 『LG주간경제』, 2003.10.15
- 남성욱·공선영,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 동용승·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CEO Information 제360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8
- 박석삼, 『전환기의 북한경제』, 한국은행 조사부, 2000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해남, 2002
- 산업연구원,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 1998
-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 아카데미, 2000
- 양문수, "북한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2호, 2000

참 고 문 헌

- _____,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5
- 윤덕룡·이형근,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02-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7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1998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 아카데미, 2000
-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
-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 통일부, 『북한개요』, 2004
- _____,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관련 설명자료』, 2002.9
- _____, 『2003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3.1
- _____, 『주간 북한동향』, 각 호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1996
- _____, 『북한경제 리뷰』, 각 월호
-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00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각 년호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2000
- 김일성종합대학, 『경제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8
- _____,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 경제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2001.10.3 담화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0



6

북한의 교육과 문학 · 예술

» 고 성 호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의 교육

제2절 북한의 문학과 예술

제3절 북한 교육과 문학 · 예술의 과제와 전망



요점

- 북한의 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 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새 세대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을 중시하면서, 이들을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양성시킬 것을 강조한다.
- 북한의 문학·예술은 본질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체문예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당성·인민성·계급성을 민족적 정서를 통해 호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주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경제회생을 위해서 남한은 물론 미국·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내용도 실용적인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경우도 당에 의한 독점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방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술성을 중시하는 한편 제한적이거나 남한과의 교류를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제1절 ⅢⅢⅢ 북한의 교육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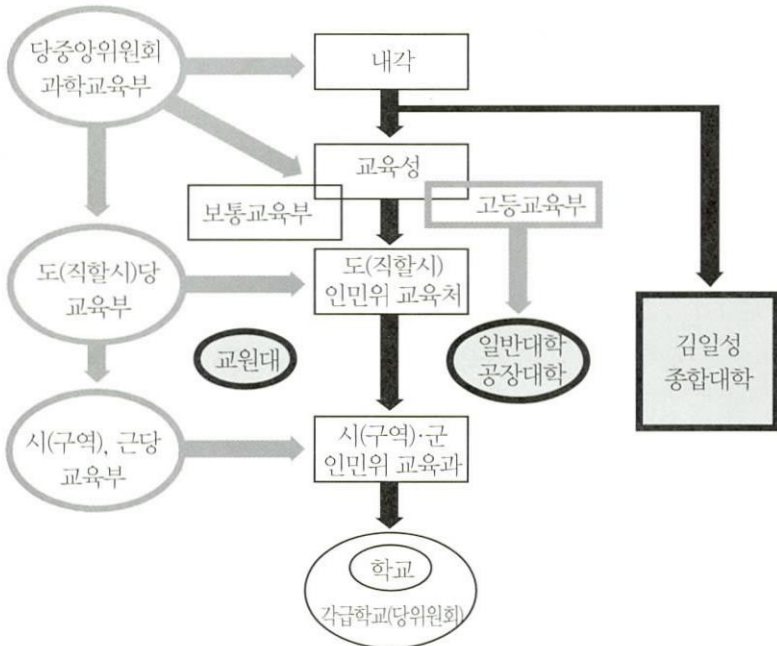
(1) 교육목표

출생시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교육은 가족이나 또래집단, 보다 넓게는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은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시되고 있으며,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헌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과 교시 등을 정리하여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근거한다. 이 테제에 의하면,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계급성·혁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성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교육을 통해 북한당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넓게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좁게는 김일성과 김정일 등 지도층에 무한히 충직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체계



(2) 교육행정체계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구조에 기초하고 있는바, 그 관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당은 지시와 감독을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

① 노동당 : 북한 교육제도의 큰 특징은 노동당의 통제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당은 교육과 관련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북한의 행정이 그러하듯이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인사나 교육문제를 다룬다.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에 파견된 당위원회 위원장이 실권을 장악한다. 따라서 교원들도 교장에 대해서는 형식상 복종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파견한 담당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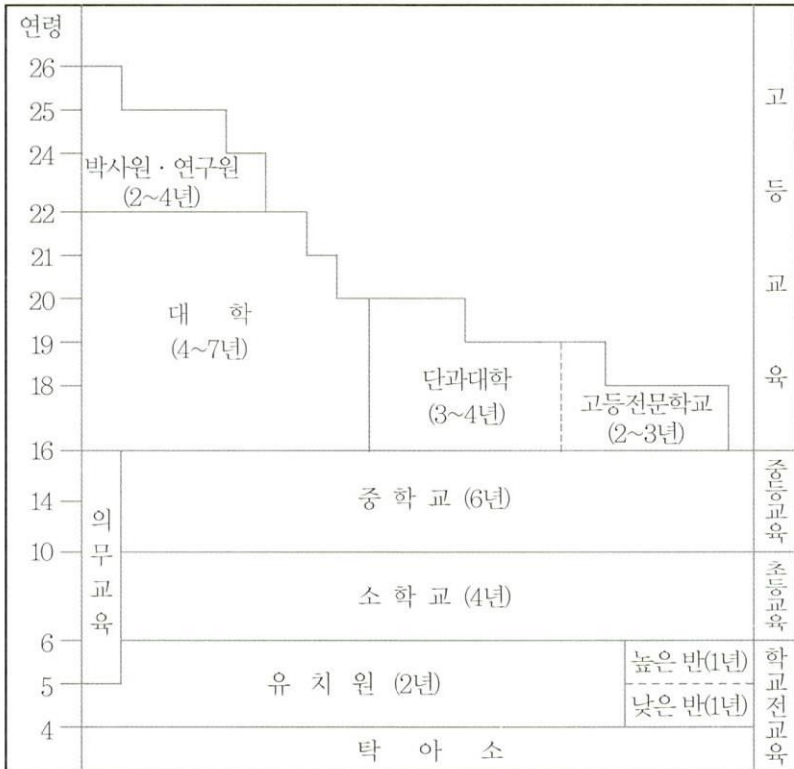
② 내각 : 행정적·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교육성이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가 있다. 보통교육부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교원대학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부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관장한다. 교육성은 해당 업무를 각 도(직할시)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 교육처는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이 교육지침이 최종적으로 각급 학교에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북한에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는 유치원 높은 반과 더불어 의무교육제다. 고등교육은 특정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군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28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평양외국어학원과 만경대혁명학원 등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도 6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각급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3) 학제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6-4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2> 북한의 학제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은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전문 학교는 2~3년제이며, 교원대학은 3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도 학교와 전공에 따라 예과를 두는 등 4~7년을 수학기 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당면한 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 급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9월 1일을 기해 학기가 시작되었으나, 1996년 부터는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각각 한달(8월 과 1월)이다. 3월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고 약 10일 정도 휴식을 가진 후 4월 1 일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

1) 보통교육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 학교교육 실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종래 의 국민학교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 반 1년 과정을 포함하여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제의 골간은 1975년부터 실시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이다. 11년의 의무교 육기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그리고 중학교 6년을 의미한다.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 기 위한 전민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9)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6·25전쟁 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구 체적으로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 터 3년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방침은 1972년 제5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 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

도록 하였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75년 9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5세로 1년이 낮아졌고, 소학교와 중학교(6년)를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로 보통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모든 자원이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생산물 역시 정부가 소유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이런 자원 독점 하에서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둘째, 북한의 학생은 학교의 등록금을 노동으로 보상하는 의미도 있다. 북한의 교육은 '노동을 병행하는 원칙'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산활동이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의 등록금은 노동을 통해 지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북한의 학생들은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내야하며, 교과서 등 교육자료도 돈을 내서 구입해야 한다.

북한이 형식상으로는나마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문맹인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고등교육

북한에서 고등교육기관은 1946년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동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건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휴전 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1956년)에는 정치·경제분야 대학들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 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등교원의 대량 양성을 위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에는 6개년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7개년 인민경제계획(1961~1970) 기간동안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이어 제2차

7개년경제계획(1978~1984) 기간에는 부족한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최근 과학기술 중시 요구에 맞게 관련분야 인재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동화학부와 물리학부를 일부 개편하여 컴퓨터과학대학을,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도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평양컴퓨터기술대학과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일부 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켰으며, 각 대학에도 컴퓨터 관련 학부나 학과를 신설하였다.

북한은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모두 졸업한다. 그러나 대학진학은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70% 정도가 군에 입대(남자의 경우)하며 20%는 직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직통생'이다. 직통생은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직통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가기도 한다.

중학교 졸업반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 검토를 포함하는 복잡한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시(구역)·군 인민위원회(대학모집과)에서 중학교별로 지정표를 배치한다. 지정표란 특정 중학교에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의미하며, 시(군·구역)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경우는 지정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각 중학교는 그 지정표에 맞는 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배정된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중학교에서의 선발은 일반적으로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험은 1980년대부터는 중학교 졸업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학·물리·화학·외국어·김일성 혁명역사 등 5과목에 걸쳐 치르는 '국가판정시험'이다. 여기서 합격해

야 추천을 받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당과 보위부에서 출신성분을 조사해 보고 나쁘면 변경할 것을 학교 측에 종용하기도 하며, 수준이 낮은 학교로 보낸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 지도 목적상 성적을 우선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학진학 추천을 받으면 각 대학별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혁명역사,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로 3~5개의 논술식 문제를 출제한다.

3) 특수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이 있으며, 여기서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특기자를 가르친다.

제1중학교는 영재교육기관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사상 위주의 교육으로 과학기술부문이 뒤떨어졌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영재 육성을 서둘러왔다. 그 일환으로 1984년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계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거하여 제1중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첫 학교는 1984년 9월 평양에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남포·개성·청진·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직할시로 확대되어 12개의 학교를 운영해왔다. 주로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하며,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과학 및 수학 성적은 물론 출신성분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1999년에는 시(구역)·군까지 확대·신설하여 현재는 2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일부 학생이나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제1중학교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부족한 교육예산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설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서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도 외국어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21일 당시 민족보위성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소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7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이다.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엄격한 군사조직 아래서 교육을 받으며 완전 국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4) 사회교육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모든 주민은 각종 정치학습에 동원된다. 일반주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각의 상(相)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도 매주 토요일에 오후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학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학습의 종류는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작업 전에 실시하는 독보회와 조회 등이 있다. 학습자료는 주로 김일성·김정일 노작과 노동신문 등이며, 그 밖에 공장이나 마을 단위로 설치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교육 이외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밭머리 학습’, 행군 중의 문답식 학습, 훈련을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군정학습 등 다양한 학습이 진행된다.

2. 교육내용과 방법

(1) 교육내용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의하면, 학교교육의 내용은 ① 정치사상 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

을,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교육의 경우 <표 6-1>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2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 교육, 과학기술 교육, 체육 교육, 예능 교육, 국방 교육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 공작의 순이고, 이어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등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우상화하는 과목이 각각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표 6-1>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1	1	1	1
12	공 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말 1주일간 봄방학)

중등교육의 경우 <표 6-2>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표 6-2>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공산주의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 국 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20	미 술	1	1				
21	제 도				1	1	
22	컴 퓨 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과 실용교육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한편으로 볼 때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사 상교육보다는 외국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 등 실용적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 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 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 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잡았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북 한 당국은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영어를 필 수적으로 수강토록 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가 2000년 10월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에게 영어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북한 이 영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교육은 90년대 말부터 강화하기 시작해 왔는바, 2001년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였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된 소수의 영재 들이 여기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소학교와 중학교의 컴퓨터 및 과학·기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별로 2~3개의 시범학교를 설정하여 ‘본보기 단위’로 조성하였다. 1999년 김일성종합대에 컴퓨터과학대학을 설 치하였으며, 2002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 기술대학을 신설했다.

2001년 4월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제가 중등교육에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서는 농 업관련 교육을, 어촌지역에서는 어업관련 교육을, 산간지역에서는 임업관련 교육을, 그리고 경공업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공업관련 교육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맞춰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弱電) 등 6학년 교과서를 펴내기도 했다.



1)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pp.715-716

또한 개방화에 대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법률대학을 설치하는 등 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률대학에는 법, 국제법, 그리고 정치학 등 3개의 학과가 있다. 북한의 법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부나 철학부에 흡수되는 등 '수난'을 겪어 왔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시가 법에 우선하는 현실에서 법학이 중시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최근들어 법률대학을 신설하는 등 법학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법보다는 국제법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징상, 그리고 북한이 처한 정치적 위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치사상교육을 등한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 등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목은 물론,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력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교육성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각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듯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반미 대결의식의 고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²⁾ 보도에 따르면, “교육성에서는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사상교육에 더 큰 힘을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성은 이에 따라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침투를 배격하고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과 학생의 군입대 장려교육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3년에는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반미교육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2) 「로동신문」, 2003.1.7



(2) 교육방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은 5개의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첫째는 '깨우쳐 주는 방법'이다. 이는 한 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본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누구 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방식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문답식 방법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강의위주로 진행한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종합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 먹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내는 이론적인 기반도 된다.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생활'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정치사회화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조선소년단'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절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은 '과의 교양기지'로 일컬을 만큼 중시한다.

또 성인이 되어도 각자가 직장조직 외에 각종 직업조직 등에 참가해야 하므로, 평생동안 조직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직의 벽은 이중·삼중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조직생활의 틀을 벗어난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나 조직을 우선하는, 즉 집단 우선의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교육 이

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일차적 매체인 가정과 '사회교양수단' (당과 외곽조직단체, 언론매체)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 로서가 아니라 '당의 얼굴' 로서 중시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개인 찬양·충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노력동원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교육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북한의 어린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처럼 각 '교육공정' 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경우 '토요일 학습, 수요강연회에서 매일 2시간 학습' 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이다.

북한의 교육은 다섯 가지 '혁명적인 사회주의 교육방법' 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모든 매체(당, 가정, 교육기관, 조직단체, 대중매체 등)들이 관여한다. 교육·교양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당원으로부터 핵심군중(계층)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게 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 과외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는 하루 평균 5시간을 가르치며,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는 1~3학년이 6시간, 그리고 4~6학년이 7시간을 가르친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15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45분간(12:35~2:20) 점심시간을 갖는다. 점심시간에는 오침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6교시가 시작되어 3시15분에 끝난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1시 반부터는 점심 및 오침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는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과외 열풍은 없다. 고급 관리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해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이른바 보충수업 형식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소조, 외국어소조, 그리고 예체능소조 등이 있으며, 매일 방과후 2~3시간 정도 한다.

북한 학생에게 특징적인 과외활동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북한의 헌법 제44조에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학생은 생산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 의무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소학생은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8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기간을 길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무노동은 농촌지원과 경제건설 분야의 노동이다. 모내기, 강냉이 심기, 그리고 김매기가 농촌지원의 주를 이루며, 경제건설분야는 도시건설, 발전소건설, 철도부설, 학교시설 및 기계제작, 탄광건설 등이다. 이런 노동은 학교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소학교 학생들도 행인의 복장 상태를 단속하는 '꼬마 규찰대', 생산물을 갖다 바치는

‘꼬마계획’,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가창대’에 동원되며, 각종 청소와 녹화사업, 그리고 국가적 행사에 동원된다.

북한의 주민이라면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중학교 4학년이 되면, 붉은 넥타이를 풀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중학교 고등반으로 진급하면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편입되며, 대학생이 되면 교도대라는 준군사조직에 편입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로, 학부는 대대로, 학과는 중대로, 그리고 학급은 소대로 편성된다.

다른 북한의 주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학생들도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는 일일총화, 주간총화, 월간총화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생활총화를 큰 부담으로 여긴다. 생활총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같은 비판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떠들었다, 지각했다, 숙제를 안 했다 등이 가장 흔한 비판 내용이다.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열성적으로 참여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식적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2) 학생의 이탈과 처벌

북한의 중학생들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신성분이 좋지 못한 학생은 공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장마당을 배회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학교 출석률이 40~50%에 불과했으며, 등교한다 하더라도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비밀비재했다. 교원들도 결근을 자주하고, 결석하거나 수업중 자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큰 처벌은 없다고 한다. 이런 이탈현상은 1990년대 말 북한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학생이 저지르는 이탈행위는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다

양하다. 생활총화에 빠지기도 하고 절도를 하다가 들키기도 한다. ‘엉덩이 춤’, 장발, ‘쫄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은 차별대상이다. 화장이나 문신, 귀고리 등도 차별받는다. 이성교제도 엄격히 통제된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반 정도에 이르면 반지를 주고받는 등 선물을 하거나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짝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대학생도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지만 은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생에 대한 차별 권한은 청년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나 숙제를 안 한 학생 등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서 벌을 준다. 수업 중 체벌이 빈번하며 학생은 대개 체벌을 감수한다. 물론 간혹 반항하는 학생도 있다.

퇴학제도는 없고, 학교에서 개인별로 교양을 한다.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 교양을 받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양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시·군·구역별로 문제학생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교양을 하기도 한다.

(3) 북한의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대학교원의 경우 교수라고 하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반 교원인 경우 임금수준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으며, 대학교원인 경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임금에 관계없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학부모들도 교원을 깎듯이 대하며, 명절때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간단한 선물도 준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감자나 옥수수 등 일용식품을 보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대학으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직할시)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중학교 교원을, 교원대학에서는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또 교원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북한 교사의 주업무는 물론 교육이지만 방과 후 월요일에는 학습과 총화시간을 가지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모임을 갖는다. 나머지는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교원의 분과모임은 수업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서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북한의 교사는 우리의 생활기록부와 유사한 '교원수첩'을 갖고 있다. 교원수첩은 개별 학생들의 신상명세와 학교활동, 그리고 지도내용 등을 기록한다. 북한의 답임은 우리와는 달리 첫 학년의 답임이 졸업할 때까지 맡으므로(예를 들어 소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교원수첩을 한번 만들면 추가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된다.

제2절 ⅢⅢⅢ 북한의 문학과 예술

1. 문학·예술정책

(1) 정책적 목표

북한의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목적주의 문예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주의 문예관은 북한 헌법 제 52조에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문학·예술 정책은 예술성보다는 당국이 의도하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북한 당국이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과 노동동기 부여, 지배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 그리고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 확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문학·예술은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를 이식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확

산시키고 노력동원을 고무시키는 수단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당의 노선에 따라 초기에는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을 찬미하고, 1950년대 후반에는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면서, ‘천리마운동 영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1980년대에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숨은 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을 집중적으로 창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붕괴, 동구권의 체제전환 등 사회주의권이 급변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려는 문학·예술 또한 사회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지키세〉, 〈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그날의 행군 정신으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북한의 문학·예술 정책은 통치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김일성의 권력 장악이 확고해지면서, 나름대로 미적 측면을 추구하고 있었던 카프(KAPF) 계열의 문인이 대거 숙청되고,³⁾ 김일성의 반제 항일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 이른바 5대혁명가극(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대혁명연극(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 그리고 〈불멸의 역사〉 시리즈이다. 1980년대에 이르면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되고, 이에 따라 〈불멸의 향도〉 등 이른바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는 문학·예술에 다양성이 보이면서 항일혁명문학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 고양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나는 첫 세대다〉, 〈반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그리고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등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찬양하는 작

3) KAPF(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는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문예단체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하면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품이 이런 예이다. 특히 2003년에 들어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시대정신에 맞아야 하며 시대의 숨결을 담아야 한다”면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이바지해야 한다,” 미국과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길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등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창작을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예술을 통해 북한 당국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과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1970년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연설에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절차를 “첫째, 인식단계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철저히 폭로 인식시켜야 하고, 둘째, 중요단계로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증오하며, 셋째, 결심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북한에서는 문학·예술 작품을 동원하여 남한 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남비방이나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북한의 문학·예술 정책은 독자적인 목적과 의의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2) 문예이론

북한에서는 초기 KAPF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엥겔스의 이론에 따라 “전형적인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충실히 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작의 형식면에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본질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령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⁴⁾

북한의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관, 기본 이념, 창작 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종국적으로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라고 할 수 있다. 이

4)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문예학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6, pp.108-109

는 논리적 성격으로 볼 때, 이념적 보편성과 형식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의하면 모든 문학·예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형식이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운 전통적인 민족문학의 형식이나 전통 양식의 현대적 재조명이 아니라,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 시절에 창작했거나 지도했던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낡은 것(붕건 잔재)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 계급'과 자본주의의 모순 폭로, 그리고 사회주의 옹호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 북한의 모든 작품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한 대중성도 과거와 달리 중시되어 가는 실정이다.

미학원리가 주체문예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예술창작에 임하는 실천강령은 '종자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종자론은 북한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으로 규정하면서, 종자의 선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자를 구성하는 미적 요소와 사상적 요소 가운데 사상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부연하면,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

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며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군중예술론은 한편으로는 창작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는 이론이다. 이는 곧 사회주의 건설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바, 김일성 주석은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은 문학예술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수준을 전문작가·예술인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 문학·예술을 전문예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시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라고 주장한 바 있다.⁵⁾

특히 김일성 주석은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글 쓰는 것을 신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학과 예술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고 지적하며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광범위한 대중 속에서 그들의 발전을 도와준다면 모든 군중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군중예술론은 2003년도에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요 행사에서 군중예술 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하는 등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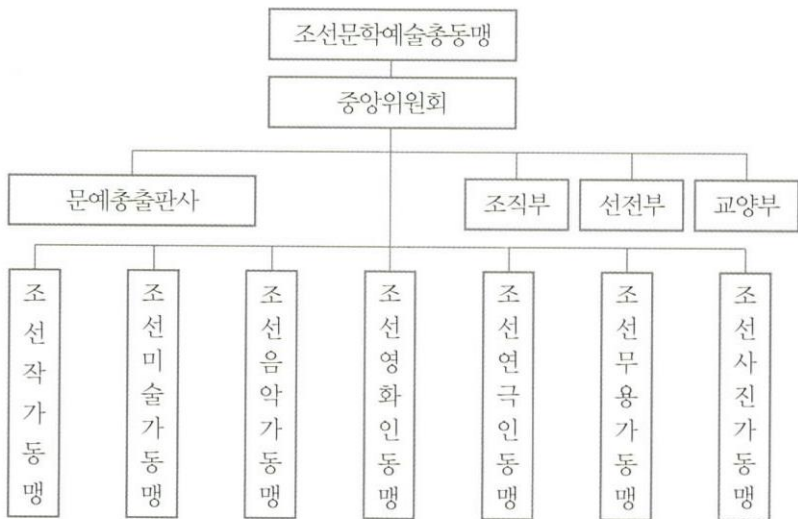
결국 북한의 문학·예술은 본질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체문예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당성·인민성·계급성을 민족적 정서를 통해 호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주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5) 『김일성 저작 선집』, 제5권, p.462

(3) 창작제도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집단적 창작은 김일성이 제안하였고 김정일이 주도하였다는 이른바 '3위1체 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3위1체 체제란 당, 행정기관, 그리고 문학·예술인(혹은 그 단체)이 공동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당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을 감독하며, 문화성과 같은 행정조직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창작가들은 이에 따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한다. 결국 문학·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작품을 창작한다기보다는 정권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문예총 산하 해당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림 6-3〉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조직



* 주: 각 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에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 지부가 있다.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제도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이 단체에 소속하여야 작가·예술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예총은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듯이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등 분야별로 문학·예술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문예총에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훈과 역량에 따라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를 비롯하여 1급에서 8급까지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는 국가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최고 영예인 국기훈장의 급수가 인정되어 인민예술가는 국기훈장 1급, 공훈예술가는 국기훈장 2급에 해당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들의 예술활동은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준중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각 동맹의 후보 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전업작가의 약 40%가 문학통신원 출신으로서, 이는 직장인으로 현상모집에 응모하여 작가의 길로 전환된 경우이다.

2. 문학·예술 분야별 활동실태

(1) 문 학

북한의 문학은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 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의 초인적인

모습을 그려내도록 '수령형상 창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중을 둔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70년 초반부터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명작들을 다시 장편소설로 개작하여 사상예술성이 구현된 작품의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던 바, 이는 지난날 친일지주와 소작인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에서 나아가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모범적·긍정적인 인물로서의 노력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문학의 소재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일방적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소재가 다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외부의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되 즐거리는 남녀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김일성부자 가계를 우상화하고 당 정책을 선전하며 체제를 찬양하는 한편, 각종 문학상을 제정하여 소학교 학생에서 근로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창작하게 함으로써 정치사상적 효과를 고양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그리고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⁶⁾

추모문학은 문자 그대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서 김만



6) 연합통신, 『2002 북한연감』, pp.779-780

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한다. 단군문학은 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군릉을 발굴·복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 총비서를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신개념의 문학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인상을 최상의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한" 문학이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선군혁명문학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는 특정한 문학작품을 일컫기보다는 수령형상 문학을 있는 개념으로서, 김정일 총비서의 선군혁명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를 미화시키기 위해 전우애를 강조하거나 강성대국 건설을 굳이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출하는 작품이 눈에 띄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유머 등 간단한 입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북한문학의 새로운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김성옥의 <나의 멋>과 <유치원 마당가에서> 등은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다룬 작품이다.⁷⁾ 『조선예술』(2001. 2)에 실린 유머란에는 손을 씻고 피아노를 치라는 아버지에게 “안 씻어도 돼요. 난 새까만 건반만 치겠어요”라고 답하는 딸의 이야기가 게재돼 있다.

(2) 음악

북한 음악의 창작과 표현의 기본방침은 사상교양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며 서양음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둘째,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하며, 셋째, 기악보다는 성악에 비중을 두고, 넷째,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시한다.

7)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반 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양식을 따르는 국민가요식의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극히 단조로와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고 지루하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에서는 당 정책선전 가요·서정가요·혁명가요·조선가요 등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이다.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조선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 등 4개 단체가 신작으로 발표하여 악보가 소개된 76개의 곡목을 살펴보면 김일성 부자 찬양이 52개 곡목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음악에 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동시에 합주토록 함으로써 악기 개량에 관심을 보여 주는 한편 전통음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음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비정치적인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창작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3년에는 <황해산 타령>, <새타령>, <느리개타령> 등을 창작하였다. 선군정치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주석 사망부터 고난의 행군 과정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이 대표적 음악으로 꼽힌다.

2001년 하반기에는 '민족수난의 노래' 또는 '계몽기 가요'라는 명칭으로 <낙화유수>, <타향살이>, <홍도야 울지마라> 등 신민요, 유행가 등 해방 이전의 흘러간 옛 노래 모음집을 발간하였는바, 이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용

북한의 무용은 가극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여타 예술분야에 비해 독자적 정체성이 미약하고 음악, 재담(코메디)과 곁들여 종합 공연할 때 소부분으로 삽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무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의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무용형식에서는 육체의 아름다움, 율동미, 시적인 메시지보다는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중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우아하고 섬세한 율동미보다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동작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이라고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북한에서 15년 만에 완성하였다는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1987년)은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동작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 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시키면 어떠한 무용동작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외 무용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⁸⁾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 기념일이나 외국 수반 환영식에 수만 명을 동원하여 화려한 집체예술로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에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8) 남한에서도 이미 1971년 서도소리의 대가였던 명창 김정연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무용동작으로 조합시켜 저술까지 발표한 선행연구가 있어 비교가 된다. 김정연, 『한국무용도감』, 서울 : 한국고전음악출판사, 1971, pp.37-224

(4) 미술

북한에서는 전통적 미술을 배척하면서 김일성이 주도하였다는 항일혁명 미술을 참된 미술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전통 미술은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였을 뿐 계급투쟁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반면, 항일혁명미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적 미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다른 문학·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을 장려하여 왔다. 김일성 주석 자신도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⁹⁾ 때문에 북한의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목적적 작품이 많으며,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노동하는 장면, 농민들이 벼이삭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술에서는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미술을 재료와 기법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눈다.¹⁰⁾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유화·벽화·출판화 등을 포함한다. 이중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각에는 환각·부각·투각 등이 포함되는데, 동상으로 대표되는 환각작품에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많다. 특히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자개·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



9) 「김일성저작집」 평양: 노동당 출판사, 1982, pp.427-473

10) 통일부, 『2002년 북한개요』, pp.509-510

이크화처럼 그려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로서, 북한이 독특한 노후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이다.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대표적 예이며, 기타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데 주로 활용된다.

(5) 영화 및 연극

북한에서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영화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연감』에서 『영화연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 부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하고 정서교양도 하여야 합니다”¹¹⁾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화예술론」(1973)에서 사상적 알맹이(종자)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는 감정의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자본주의의 ‘연출 제일주의’를 배격하고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배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일정한 세계관과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감정·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노동계급적 예술가로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북한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

11) 『조선영화』, 1992년 1월호, p.54



화 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되어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뉘우쳐 오류를 시정하는 스토리도 주요 테마가 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 천리마 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 시리즈가 제작되는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다. 그러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증〉도 기존 북한 영화의 틀을 깨뜨리고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 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차별 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여 대중들의 지지가 높았다. 신(申)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그러한 변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 및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영화는 원래 50부작으로 계획되었으나, 2003년 현재 60부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영화 역시 선군혁명문학예술론에 부응하여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반영하는 작품을 주로 내놓고 있으며, 관심을 끈 작품은 대체로 군사관련 영화이다.

2003년도 대표작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년간 나온 영화들 가운데 제일 잘 만든 영화”라고 극찬한 〈이어가는 참된 삶〉이 있다. 이 영화는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당시 전사한 아버지의 자녀와 그 주변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이 외에도 〈그들은 제 대병사였다〉와 〈여병사의 수기〉 등이 2003년에 제작된 대표적 영화이다.¹²⁾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는 신상옥·최은희 씨가 북한에서 제



12) 연합뉴스, 『2004 북한연감』

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주의인데다 비교적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0년 국내에서 북한 영화 <불가사리>가 상영되었지만 흥행에 실패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스토리 중심의 북한영화는 대중성이 떨어지고 상업적 교류를 위한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동맹권을 중심으로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해 오고 있는 바, 이 축전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도라지꽃>, <민족과 운명(1, 2부)>, <먼 훗날의 나의 모습>이 대상적인 '화불 금상'을 수상한바 있다. 2000년 개최된 제7차 축전에는 처음으로 일본영화가 상영되었다. 2002년에는 제8차 축전이 개최되었는데,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침몰사건을 다룬 <살아있는 령혼들>이 화불은상을 수상하였다. 8차 축전에는 처음으로 미국의 영화 <에비타>가 출품되었는데, 이 영화는 미국의 팝 가수 마돈나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연극이 큰 빛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연극인들이 연극보다는 가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었다. 무용과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는 북한 연극은 1980년대에 들어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일당> 등이 대표작으로 이들 연극들은 모두가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으로서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다.

1978년 6월 14일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 됨에 따라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의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주민들은 단막극, 경희극 등 대중정서에 맞는 코메디한 연극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문학·예술정책의 특징

북한 당국자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위해서는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사상적 요새 점령은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두마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상적 요새란 문화적 측면으로서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로 개조하는 것이며, 문화정책은 교육과 더불어 정치사회화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문예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문학·예술정책은 미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당성·계급성·인민성을 강조함으로써 목적주의 문예관을 반영하고 있다. 당성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서, 결국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다. 계급성이란 노동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고수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신으로서, 모든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계급이 일차적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인민성이란 “공산주의를 완성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중의 이익만을 대변, 반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역량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 정신으로서, 결국 혁명적 정신이다. 결국 북한의 문학·예술은 지도자를 예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며, 또한 한반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창작된다.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통제성이다. 문학·예술가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소지가 없으며, 모든 창작활동은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검열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통제된다. 예를 들면 3위1체에 입각한 집단주의 창작은 북한 문학·예술의 통제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문학작품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검열이 이루어진다. 그 검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술성 위주, 위로 올라갈수록 사상성 위주로 검열된다. 출판

총국을 예로 들면, 작품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사회주의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묘사된 곳이 없는가,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없는가,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전투성·혁명성·계급성이 충분히 발양되어 있는가,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는 않는가, 단어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등을 검열한다.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독점성으로서, 창조에서부터 전파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당 특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독점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김일성의 '교시'는 법에 우선하여 지킬 것을 강요한다. 북한의 기본적 문예이론은 주체문예이론 하나에 불과하며, 그 핵심 명제인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헌법(제52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결국 북한의 문예정책은 김일성의 교시나 주체사상, 그리고 김정일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 선택, 그리고 스토리의 배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함으로써 북한의 문학·예술은 창조에서 전파까지 좁게는 김일성 부자 보다 넓게는 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소극적 수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3절 IIII

북한 교육과 문학 · 예술의
과제와 전망

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전 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의 내면화와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정책과 문예정책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전체 주민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197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으로써, 표면적이거나 공민이라면 중등교육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맹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이 핵심이며, 이를 사상개조·인간개조의 차원에서 다룬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등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중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발달을 경시하고 세계 문명사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소홀히 한다는 점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수학이나 물리, 그리고 최근 들어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용성 있는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경부터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에 대해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

며, 교원과 학생 등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실용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문학·예술 또한 정치사상적 목적에 동원됨으로써, 사고의 표현 방식 등에 있어서 인성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다룬다는 주체문예이론에 따라, 이른바 당성·계급성·인민성 등 사회주의적 전형성을 강조한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 개혁의 찬미와 노력 영웅 칭송, 그리고 '남반부 해방' 등 체제를 보위·발전시키고 대남적화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물론 최근 들어 '재미있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정치사상성이 약하고 순수한 목적의 창작품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도로 말미암아 문예활동을 탈정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4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정치사상' 교양을 중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은 표면적으로는 집단주의적, 정치 교화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간의 개성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모든 사람을 획일화하여 완전 개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가능한 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가 의도한 인간형으로 교양되었다고 해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세계사적 흐름이나 북한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남북 간 관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가 관심사로 남는다. 특히 21세기를 전후하여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EU 등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내적으로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착수한 북한이 앞으

로 이념 위주의 폐쇄적 교육을 벗어나 세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교육, 그리고 남북간 공존공영의 관계에 대비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학의 경우도 당국의 독점적 통제를 벗어나 어떻게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창작 기법을 개발해나갈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어떻게 폐쇄적 문예 활동에서 탈피하여 문학·예술의 세계사적 추세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상황에서 문학·예술인들이 세계적 행사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고립적·폐쇄적 문예활동을 지속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의 경우 정치교육에서 실용교육으로, 사회주의 교육에서 시장경제 교육으로, 그리고 폐쇄교육에서 개방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컴퓨터 등 첨단시설을 활용한 교육,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조직화된 생활을 강조하던 교육에서, 개인의 자아를 계발하고 시장경제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부합하는 열린 교육, 문화의 다양성을 용인하고 다원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방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학과 예술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문학·예술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미적 감각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작품으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예활동의 세계화 추세에도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경우에도 보편적 가치관을 담을 수 있는 참신한 주제와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열린 문예활동의 길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현 지도부가 개방화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인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더구나 비판적 사고의 배양과 외부사조의 유입은 북한 주민의 동요를 야기하고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과 문학·예술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경제회생을 위해서 남한은 물론 그 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교육내용도 체제수호에 역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정보화 교육, 그리고 제한적 차원에서나마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학·예술의 경우도 당에 의한 독점적 통제를 유지하는 하면서 개방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술성을 중시하는 한편 제한적이거나 남한과의 교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서울: 박영사, 1995
- , 『신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김동규,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1999
- ,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 1990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한백, 1989
- ,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 1990
- 문화관광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방법론 연구』, 1998
-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서울: 돌베개, 1999
- 박태상, 『북한문학의 동향』, 서울: 깊은샘, 2002
- 박호성 등,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 배찬복, 『남북한 정치사회화』, 서울: 법문사, 198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 북한연구학회(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1999
-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2001
- , 『2004 북한연감』, 2003
-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임채욱, 『통일문화와 북한문화의 가치성』, 문화방송, 1998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2000
- 정석홍, 『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사람, 1997
- 좋은벗들(편),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도출판, 2000
- 통일부, 『북한인민학교 교육 및 학생생활』, 1998
- 통일원, 『북한의 교과서 분석』, 1992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북한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참 고 문 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방안』, 1998
- ,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1998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김형찬 등,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황정규,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 한중모 등, 『주체의 문예이론의 기본』, 평양: 문예출판사, 1992
- 강운빈, 『인간개조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리현순, 『사회주의 영화예술 건설』, 평양: 문예종합출판사, 1998
- 『문화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8
- 『김정일 선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과정안』, 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96
- 『조선문학』, 평양, 8월호, 2001



7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 김 석 향 |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북한주민의 가치관

제2절 일상화된 조직생활

제3절 명절과 세시풍속의 변화

제4절 의식주 생활과 배급제도의 변화



요점

-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겉으로는 유일지배체제와 집단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 규범을 따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이후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 양상은 북한체제가 위기를 겪으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주도하여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온 결과 북쪽에서 명절을 쇠는 방식은 남쪽과 많이 달라졌다. 남쪽에서는 예전부터 이어 온 전통을 따라 지금도 음력 정월 초하루와 팔월 한가위를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오랫동안 이런 명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2월 16일과 4월 15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였다. 다만 2003년 이후 전통 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임금과 함께 각종 생활필수품의 국정가격을 대폭 올렸다. 이번 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절 ⅢⅢⅢ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주민과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공유해 온 같은 민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질적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북한 주민이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의 행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남북한의 분단에서 찾아야 한다.

1945년 분단 이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남쪽과 북쪽을 구분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이른바 가(家)를 중심으로 그 수장인 가부장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보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런데 분단을 기점으로 남쪽의 우리는 우리대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온 반면 북한에서는 초창기부터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위 사회주의 생활방식을 도입하였고 주민들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들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은 우리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이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남쪽의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개인의 권리의식 강화와 민

간단체의 활동영역 확대의 방향으로 발전해 온 반면 북쪽에서는 당국의 주도로 주민들은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고 “온 사회를 일색화” 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1990년 이후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의 결과 주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공식적 규범체계와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과연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오늘날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고찰한 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소위 ‘북한식 가치관’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식 가치관의 특징적 요소

(1)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

북한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를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조건화된 상황에서 살아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횟수가 다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을 앞세우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개념도 사실상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제인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

따라서 주체사상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특징

적 측면으로 보아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혁명적 수령론’이란 대중과 정치적 지도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론적 체계를 다듬어 온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사실상 인류역사의 철학적 흐름에서 늘 논쟁의 중심을 이루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독특한 요소라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다. 북한당국은 이런 논리를 내세워 주체사상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또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혁명적 수령론에서 찾아야 한다. 그 조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수령의 영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수령론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당국의 논리를 따르면 오늘날 북한주민은 역사상 최초로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는 수령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정치적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신체의 어느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령은 ‘뇌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

1) 2004년도 1월 1일 이후 10일까지 열흘 동안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제목에 주체사상을 거론한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방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는 다음과 같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길에서”(1월 4일),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 연속 좌담회-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고전적 정석화”(1월 5일), “외국인이 지은 사: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1월 5일),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길에서”(1월 7일),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의 역사적 선포”(1월 8일)

의 신체에서 두뇌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수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 수령이 부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주장이다. 이 논리를 근거로 북한주민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수령을 ‘결사옹위’ 하는 ‘총폭탄’이 될 것을 다짐하는 구호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말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い’와 ‘효자동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북한사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당 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 집단주의원칙의 일상화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헌법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다. 1998년 개정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은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집단주의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발행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집단주의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북한당국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라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집단주의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도덕적 덕목으로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원칙을 강조하는 북한당국의 입장을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했던 것은 개인의 권리의식보다 가부장의 권위와 가족·친지로 구성된 대가족 속의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문화와 친화성을 지닌 생활규범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집단주의원칙은 그 내용상 개인의 독립성보다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적 배경과 가까운 측면이 많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집단주의원칙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권리신장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민주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집단주의원칙은 결국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²⁾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 결국 집단주의원칙은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선노동당이 제시하

는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에 순응하지 않거나 집단이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통해 '모서리'를 줌으로써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당국의 인권 개념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북한당국은 우선 인권이란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1992년에 나온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인권과 인권유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인권 :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인권유린 : 반동통치계급들이 사람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짓밟는 것³⁾

『조선말대사전』의 개념 규정을 보면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인권이 보편적 개념의 인권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난다.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이기 때문에 “제 때에 짓부셔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자.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 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



2) 남대현, 『청춘송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36

3)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696

성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⁴⁾

결국 북한당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을 거부하는 “불순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단호한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인권 개념은 오늘날 북한 특유의 집단주의 정신과 어울려 모든 주민이 당에서 제시하는 생활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사회주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생활방식의 혼재

북한당국은 19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복고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전통적인 예절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낡은 생활습관’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집단의 어른들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을 자손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음력설을 비롯한 한식·단오·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했던 것도 전통적 생활문화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을 내

4) 『김일성저작집』, 제32권, p.536



세우면서 전통적 생활문화와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란 결국 “조선민족은 그 사상과 전통, 역사에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동명왕릉과 단군릉을 개축하고 1995년 이후 “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김일성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당국이 음력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을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보급한다는 기치 아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면모를 전통적 생활양식에 결합시켜 온 것이었다.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단결’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3년 음력설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부터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기본 설 명절’로 지키고 정월 대보름도 새롭게 민속명절로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단오와 추석 등 전래의 명절을 예전의 명칭을 되살려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⁵⁾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당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강력하게 장려해 온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 중에서 전통적 생활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예법에 맞게 상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사상 차리는 법을 부모를 통해 집안에서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상



5)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366

차림에 관한 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생활방식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대처하지만 오직 사회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설 명절에 차례를 올리는 등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과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면모는 집단주의 원칙의 생활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상이다.

2. 북한식 가치관의 형성과정

북한주민을 만나거나 북한에 다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똑같아서 놀라고, 너무 달라서 다시 놀란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처음 방북하거나 북한주민을 직접 만날 때 소위 “빨 달린 공산주의자”를 상상하며 만나게 되는데 막상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의 안부를 걱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가 하면 직장동료끼리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모습을 보면 북쪽 사람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저절로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그런데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해 거론하거나 농담이라도 하면 순간적으로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너무나 다르다”는 놀라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래도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까지 품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민족의 구성원인 북한주민이 소위 ‘북한식 가치관’을 지니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추적하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단편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보고 특정사건이 당시의 상황에서 북한주민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북한식 가치관의 형성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별로 북한주민이 가치관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역사적 경험과정을 간략하게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시대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단계는 1945년 분단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유일 지배체제 구축이 본격화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본격적인 이상화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표면화하는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제3단계는 1990년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무너지고 북한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당국이 마침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

(1) 제1단계 : 1945~1970

1945년 당시 한반도 전체가 광복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 강대국은 분단을 결정했다. 분단 자체가 스스로 선택한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와 허탈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사회체제로 변모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북한을 비롯한 여러 '형제나라'에 기존의 제도 및 관습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체제'를 이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북한당국은 소련의 지도노선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⁶⁾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거리감을 더욱 급격하게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단이 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의 생활문화가 한순간에 모두 바뀐 것은 아니



6)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London Hurst & Company, 2002

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여전히 조상을 모시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절을 중시하는 전통적 생활문화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함경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평안도 특유의 생활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는 지역 개념은 그 당시 우리의 인식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단 직후부터 북한당국은 소위 '사회주의 이상향'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모두 다 '낡은 사회의 봉건적 유물'을 벗어나 예전과 다른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조차 여전히 획기적인 내용으로 여성의 권리를 명시해 놓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가 하면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지주에게 억압받던 농민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하면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한글전용 원칙을 정하여 모든 공문서와 신문 기사를 한글로 표기하는 원칙을 정하기도 했다. 또한 일단 원칙을 정하고 나면 북한 전역에 걸쳐 강력하게 시행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랐다.

분단 초기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대체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당국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결과 풀 한 포기 꽃을 땅이 없던 처지에서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나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다가 교육의 혜택을 받아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이상향'을 꿈꾸던 학자와 전문가 집단은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당국의 입장을 추종하여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유물'을 없앤다는 구호 아래 전통적 생활문화를 사회주의 생활문화로 바꾸려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당국이 강조하는 혁명적 동지애보다 가족과 이웃 간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을 따라 전통적 제례의

식을 지키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전통적 생활문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무의식적 노력은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당국의 노선에 맞서는 사람은 종파분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의 생활문화는 전통적 방식과 사회주의 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에 이른다. 다만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남은 사회의 봉건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거나 종파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외면적이거나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추종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주의의 모범이며 전형이라는 점을 과장해서 표현하려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당시 북한에 사는 대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방식과 사회주의 방식이 충돌할 때 사회주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생활양식은 이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7~68년을 고비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이상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당국은 "마땅히 타파해야 하는 남은 사회의 봉건적 유산"의 기준을 좀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물론 김일성 개인에 대한 이상화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당국도 체제 저항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정치계에서는 그나마 남은 세력이었던 갑산파를 종파분자라는 이유로 완전히 숙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이상향'을 꿈꾸며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던 학자와 전문가의 희생도 컸다. 북한당국을 열심히 후원하던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의 희생이 컸던 것은 김일성 이상화에 대한 이들의 반대가 그만큼 거셌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이들은 북한당국이 학교마다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을 만들고 김일성의 말이 유일한 지식의 근거라는 이유로 각종 외국서적을 모아 불을 지를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상당히 많이 희생을 당했다.

숙청의 범위가 정치인을 넘어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에게도 가혹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저절로 깨닫게 되었다.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의 유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일에 민감해졌고, 일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사회주의 생활문화와 혁명적 전통에 비추어 비판받을 점이 없는지 스스로 조심하고 확인하는 습성을 제2의 천성으로 키우게 되었다.

(2) 제2단계 : 1970~1990

북한당국의 이상화는 김일성의 60회 생일인 1972년을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무렵 북한사회에서는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일단 김일성의 ‘교시’가 주어지면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으로 관철시키거나 최소한 관철시킨 것처럼 꾸며놓아야 했다.

1973~74년을 고비로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내부를 장악하고 생활총화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일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짝 짜여진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생활총화에는 아무도 빠질 수 없었다. 게다가 영화인과 예술인들은 그 자유분방한 기질을 없앤다는 이유로 이틀에 한 번씩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쌀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조직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생활총화’란 직장과 사회단체, 인민반 등 북한주민이 일상적으로 속해 있는 단체 내에서 노동당원은 노동당원끼리, 직맹원과 농공맹원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자아비판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을 거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활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모임을 말한다. 생활총화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근거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이외에 1974년 김정일이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⁷⁾을 기본으로 한다. 이 원칙은 북한에서 노동당원은 물론,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도 모두 철저히 외워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적 원칙으로 온통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개인 우상화를 철저히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채워져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습관화된 상태로 살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북한당국은 우상화를 강화하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및 집단주의 원칙 등을 개발한 뒤 다양한 자료와 예술의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면서 누구나 이 내용을 학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대다수 북한주민은 곧 당국의 지도노선에 순응하거나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 순응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다. 간혹 예외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항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예외없이 생활총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호된 비판을 받거나 그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심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습관을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북한주민의 일상적 행위를 구속했던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철저한 배급제도의 시행에서 나왔다. 북한에는 그 이전에도 배급제도가



7)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은 1967년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처음 만들었으나 1974년에는 김정일이 그 내용을 다시 정비하여 제시하였다고 한다. 1967년 당시에는 김영주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곧 김정일의 위치가 급격하게 부상하였다. 김영주는 그 뒤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오랫동안 집거생활을 했다.

있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선 뒤 그 시행이 더욱 엄격해졌다. 배급제도는 시행과정도 엄격했지만 무엇보다 특권층과 일반주민을 구분하여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 전역에 심리적 영향이 컸다. 한번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언제라도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⁸⁾ 일단 특권층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특별한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게 마련이었다. 반면에 일반주민은 누구나 특별공급대상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풍조가 퍼져 나갔다.

게다가 당시 북한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농민시장은 더욱 규모가 줄어들었다.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한 처벌로 금지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사업체는 오래 전에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하려면 당국의 지도노선에 순응하면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 빠짐없이 출근함으로써 정해진 분량의 배급표를 받아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편 북한당국도 체제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식량배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이 나날이 하락세를 겪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일을 어기지 않고 보름에 한 번씩 계속 식량을 배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경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새땅찾기 운동을 벌이면서 산꼭대기까지 밭으로 개간하여 다락밭을 일구는가 하면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이름 아래 밀식(密植)재배를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에 대처해 나갔다.

8) 성해람,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pp.489-490



사실상 북한당국이 장려했던 다락밭 개간이나 주체농법은 오늘날 식량난을 일으킨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당국이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동안 식량배급을 중단한 일은 없었다. 북한당국이 결국 식량배급을 중단했던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방의 국경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동안 북한 내 곳곳에서 배급하는 식량의 품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나빠져 갔고 내용물에서도 쌀 대신 잡곡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외채를 갚지 않고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거나 무역상대국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당국의 신용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예전처럼 당국을 믿고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3) 제3단계 : 1990년대 이후의 변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990년 독일 통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북한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가 현실화되기 직전까지 북한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날마다 ‘발전하는 사회주의 형제나라들’과 ‘썩어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을 비교해 왔다. 그런데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난 뒤 한동안 북한당국은 그렇게 발전하던 형제나라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공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북한당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설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이 혹독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경지역을 통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해 온 중국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다는 소식이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일찍이 문화혁명 시기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잘 기억하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이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도 1990년대 초반 자강도와 양강도 등 북방의 국경지역에서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무렵에는 이런 일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당국에서 식량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예전과 달리 서로 앞다투어 장마당으로 달려나가 식량과 생필품을 거래했고 다른 사람의 거래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외부세계의 소식이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은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노동신문을 통해 “오사리가 터질 정도로 옥수수 농사가 만풍년”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던 북한당국도 마침내 국제사회와 남쪽을 향해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특히 북방의 국경지역에서 시작한 식량공급 중단이 평양의 중심부에서도 현실로 나타나자 북한당국도 심각한 위기의식에 빠져들었다. 국제사회와 남쪽은 북한당국의 호소를 받아들여 식량 및 인도적 지원물품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일부나마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공개한 지역은 제한적이었지만 분단 이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북한주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이 외부세계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외부인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었고 북한주민은 그들 나름대로 외부세계를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면서 “지금까지 당만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조직생활을 더욱 철저히 지도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욕구 분출을 통제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다. 소위 ‘비사회주의 그루뵀’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당국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유주의’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와 남쪽의 지원을 받아 식량배급체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면 곧 장마당 활동을 규제하여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내 생산 및 수송체계가 원천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식량을 공급하는 형편에서 당국이 배급체계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장마당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그 기간을 무작정 길게 끌고 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생활을 강하게 통제했다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오늘날에는 북한주민 중 상당수가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겉으로 공식적인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이 이미 무너진 배급제도를 다시 실시할 필요없이 각자 알아서 먹고 살도록 내버려두고 당국이 조직생활로 통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2절 ⅢⅢⅢ 일상화된 조직생활

오늘날 북한주민은 누구나 일생동안 '북한식 가치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소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하기 전부터 숨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일상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을 통해 북한식 가치관을 반복하여 학습해야 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그 특유의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생활이란 곧 자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홀하게 지나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조직생활에서 이탈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고,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스스로 그런 평가를 받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직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조직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조직생활에 열심히 참가하지 않으면 조직의 다른 구성원에게 집단적으로 '모서리'를 당하기 때문에 마치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진 채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하나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갈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조직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점에 따라 조직의 말단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활이라고 하면 싫어도 늘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 대열에서 빠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은 북한체제가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 붕괴설이 나도는 중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1. 조선소년단 입단과 청년동맹 가입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된다. 11년제 무료의무 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높은 반' 부터 누구나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인정하는 기본조직에 들어가 본격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하는데 입단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입단하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입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학교⁹⁾ 입학 이후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집안성분이 좋은 학생들이 먼저 추천을 받아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을 하면 입단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입단식을 하는 날은 대체로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과 4월 15일, 소년단 창건기념일인 6월



9) 북한당국은 2002년 9월 이후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2002년 9월을 전후하여 북한의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일제히 바꾼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6일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연히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학급 안에서 먼저 입단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같이 지내게 된다. 대체로 먼저 입단식을 한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늦게 입단하는 아이들은 친구를 시샘하여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의 경우 입단식 자체도 거창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시·군·구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 빨치산 운동이나 다른 일로 훈장을 많이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넥타이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불어넣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은 이제 자신은 사회의 기본 조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는 공부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 나중에 입단하는 아이들의 입단식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치르고 넘어간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급생활도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한 학급에서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간부는 분단 위원장과 조직담당 부위원장, 사상담당 부위원장 등이 있다.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이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 과외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 소년단위원을 통해 각 학급별로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또 토요일을 소년단의 날로 정해 놓고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도 진행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만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만 14세가 되면 누구나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약자로서 예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었는데 1996년에 그 명칭이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소년단 입단과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북한당국이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에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식인 붉은 넥타이를 벗고 청년동맹 가맹식을 거쳐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게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늘 허리에 차고 다닌다는 것이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 교사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시·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동당과 근로단체 조직

중학교 4학년이 되는 만 14세 이후 30세까지 해당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 18세 이후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다. 노동당에 입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한다. 후보당원 기간이 끝날 무렵,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1년 간 후보당원으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의 눈에 띄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화선입당(火線入黨)이라 하여 후보당원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당에 입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입당 보증인을 구하는 일이다. 이 때 보증을 선 사람은 나중에 피보증인이 당원생활을 하면서 과오를 범할 경우 문책을 당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노동당에서 쫓겨나는 출당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보증을 서는 사람은 몸을 사리게 마련이고 성분이 나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지 않으려 하게 된다. 결국 입당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꺼이 자신을 위해 보증을 서 줄 후견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화선입당을 하는 사람은 보증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북한사회의 관습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 하겠다.

18세 이후 노동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된 사람은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여자들은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은 채 전업주부가 되려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한편 30살이 넘도록 당원이 되지 못한 근로자와 농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으로 그 소속을 옮겨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각각 여맹, 직맹, 농근맹 등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당원은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 내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소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당원과 청년동맹 맹원이 아닌 사람들은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한편 생활총화는 대체로 1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데 한 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을 말한다. 생활총화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지침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이 지시하거나 지정한 '교시' 및 '말씀' 자료의 내용이다.

노동당과 청년동맹, 여맹, 직맹, 농근맹 중에서 사회적 위상이 가장 높은 단체가 노동당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노동당을 제외하면 다른 단체보다도 청년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청년동맹의 맹원들은 앞으로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맹이나 농근맹 맹원들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입당도 하지 못한 채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한다.

3. 인민반의 가두조직

북한주민은 소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한다. 연로보장이라고 하는 정년퇴직을 신청했거나 가두여성이라고 부르는 전업주부처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직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네의 인민반과 여맹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

로 조직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대체로 20~40세대가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한 동에 70세대가 살아도 이들이 전부 1개 인민반에 소속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반 구성원 중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세포를 만들어 당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나이든 당원이나 가두여성 중에서 드물게 입당한 여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당원이 아닌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들은 여맹의 지도를 따라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회에 참여하고 인민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동(리)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각종 사회생활을 지도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각 인민반별로 “뭉 바쳐라, 어디 동원 나가라”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과업은 대체로 전업 주부인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최근에는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런 과업을 부과할 때 수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1년에 한 번씩 식량공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할 때 반드시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한다.

4. 조직생활과 평정서 및 신원문건

북한주민이 조직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평정서' 라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반이 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는다고 한다.¹⁰⁾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적어 놓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주변상황과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을 때, 윗사람에게 대들었을 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부기관에서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평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당원이면 당 조직에서, 근로단체나 청년동맹 조직이면 해당조직에서 책임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과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정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낸다. 그 사람이 예전에 잘못된 일이 없고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상부기관에서 좀더 두고 보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출신성분과 평소의 행동을 감안하여 잡아가지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평정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언제나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살아간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조직을 옮겨 갈 때마다 그 사람의 평정서도 함께 따라다닌다.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 직장으로 옮겨 갈 때 청년동맹의 지도원이 평정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10) 출생 직후부터 평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반이 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

그러나 평정서의 내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일을 잘 하고 충성심을 표현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다만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사상체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한 내용이 평정서에 기록될 경우는 예외인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생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

평정서와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에서 보관하는 신원조회 문건도 중요하다. 신원조회 문건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때, 당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내각 산하의 간부로 등용될 때 반드시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간부를 등용할 때 평정서보다 신원조회 문건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소위 “토대가 나쁘거나 성분이 걸리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제3절 ⅢⅢⅢ

명절과 세시풍속의 변화

일상화된 조직생활과 함께 오늘날 북한주민들이 이른바 북한식 가치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의 명절 풍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해가 바뀌면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사설의 전문을 외우거나 그 내용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썰기대회를 하는 일로 분주하다. 곧 이어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로 대접하는 2월 16일과 4월 15일을 위해 김정일화와 김일성화 가꾸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북한정권을 창건한 9월 9일이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도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큰 행사를 조직해야 한다. 그 이외에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의 행적을 따라 각종 현지도와 담화 및 교시 발표 몇 돌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간을 보낸다. 이런 행사가 모두 직장과 학교 이외에 자신이 소속한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도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주도하여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온 결과 명절 쇠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남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이어받아 음력설과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긴다. 해마다 음력설과 추석이 되면 고향집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전국의 도로는 차량으로 뒤덮여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2월 16일과 4월 15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대접한다. 또한 북쪽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몇 십 년 동안 양력 1월 1일을 '기본 설 명절'로 지켜 왔으며 음력설은 명절로 대접하지도 않았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음력설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되살려 하루 휴식일로 지내다가 2003년 음력설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기본 설명절'로 지키게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오랫동안 음력설을 설날로 대접하지 않았던 기억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¹¹⁾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명절 풍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새해 첫 날을 전후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남쪽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는 북쪽의 인사말은 익숙하지 않게 들린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손님을 맞이하던 음식점도 음력설이나 추석날이 되면 모두 문을 닫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남쪽 사람에게 평소에는 문을 닫았던 음식점도 명절날이 되면 문을 열고 “명절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풍습도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당국이 다시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북한이 어느 날을 명절로 지키는지, 각각의 명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2월 16일과 4월 15일이 언제부터 이른바 “민족 최대의 명절”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명절 개념

북한에서 명절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만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1992년에 나온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명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1)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 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pp.13-25



명절 : ①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민족최대의 명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날인 9·9절,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된 날인 헌법절과 같은 명절이 있다. ②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6·6절, 교육절, 광부절 등이 있다. ③ 국제로동계급과 세계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전세계 로동계급의 전투적 단결을 시위하는 5·1절과 3·8국제부녀절 같은 것이다. ④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겨오는 날, 곧 설, 단오, 추석 같은 것¹²⁾

『조선말대사전』은 명절의 개념을 이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놓았지만 막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명절인지 질문해 보면 대체로 '4대 명절'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명절이라고 하면 2월 16일(김정일 생일)을 비롯하여 4월 15일(김일성 생일), 9월 9일(북한정권 창건일), 10월 10일(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를 계기로 추석날 가까운 곳에 조상의 묘소가 있는 사람은 성묘를 해도 좋다고 허용함으로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른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추석과 설날, 단오 등 전통적인 명절을 되살리기도 했다.

2003년 음력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때까지 기본 설 명절로 지켜 오던 신년 1월 1일을 대신하여 음력 1월 1일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설날 못지않게 중요한 명절



1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104

로 지키던 정월대보름에도 하루 휴식하고 단오와 추석에 예전의 명칭을 따라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라는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 북한당국이 '민족대단결'이나 '우리 민족끼리' 등 민족을 앞세우는 구호를 들고 나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조상들이 지켜 오던 전통명절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¹³⁾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생일인 12월 24일을 명절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이미 10년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으로 떠받들어 온 만큼 김정숙의 생일도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에 맞추어 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2년 12월 24일을 기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은 이 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2. 북한의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

2004년 1월 현재 북한당국이 정한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국가적 명절과 민속명절은 모두 15일이다. 그 밖에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행사를 갖거나 휴일로 지키는 각종 기념일은 34개 종류가 있다.

13) 북한당국은 이처럼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3·1절이나 개천절, 한글날 등 우리 민족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을 국가적 명절이나 기념일로 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pp.363-366;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 pp.99-108 참조

〈표 7-1〉 북한의 명절

명칭	구분		비고
	국가적 명절	민속명절	
양력설		양력 1월 1일	
음력설		음력 1월 1일	이틀 연휴(음력 1월 2일은 휴무)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틀 연휴(2월 17일은 휴무)
국제부녀절	3월 8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이틀 연휴(4월 16일은 휴무)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국제노동자절	5월 1일		
수리날(단오)		음력 5월 5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7월 27일		
해방기념일	8월 15일		
한가위(추석)		음력 8월 15일	이틀 연휴(음력 8월 16일은 휴무)
북한정권 창건일	9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헌법절	12월 27일		
계	10개	5개	총 15개, 19일 휴무

* 출처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364

그 중에서 음력설과 2월 16일, 4월 15일, 추석은 쉬는 날이 이틀씩 정해져 있다. 9월 9일과 10월 10일은 소위 10주년 단위로 '깎여지는 정주년'이 되는 해에 이틀을 쉬지만 다른 해에는 하루를 쉬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 연휴를 할 경우 두 번째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에 해당한다. 휴무일이란 그 날 하루를 쉬면 원래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일요일이나 다른 날 하루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휴무일은 공휴일과 다르다. 북한주민들은 휴무일을 대신 쉬는 날이라는 뜻의 '대휴(代休)'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당국이 정한 국가적 명절을 살펴보면 남쪽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같은 날을 기념하는 경우는 8월 15일 해방기념일 단 하루 밖에 없다는 점이 나타난다. 그밖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4월 25일과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인 7월 27일은 1996년에 이르러서야 법정 공휴일로 제정했다.

북한당국은 원래 분단 이후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던 날을 기념하여 2월 8일을 기념해 왔다. 그런데 1978년 2월 8일을 지내고 난 뒤 갑자기 일제 치하이던 1930년대에 어린 나이의 김일성이 군대를 이끌었는데, 그 때부터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12월 27일 헌법절의 경우에도 북한당국이 1948년 9월 8일 정권 창건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던 북한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며 '혁명의 영재'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토의"했던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김일성·김정일 생일 : '민족 최대의 명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은 단연코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다. 2월 16일과 4월 15일은 이른바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북한당국은 이 날을 기념하여 사탕·과자·돼지고기 등 특별배급품을 공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날이 특별배급품이 없는 '껍데기 명절'과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2월 16일과 4월 15일이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4월 15일 그의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정해서 명절의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

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공휴일로 지키지 않다가 56회 생일이 되는 1968년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그리고 60회 생일이 되는 1972년을 계기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특히 김일성 사후 만 3년이 되는 1997년 7월에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정하고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정일 생일의 경우에는 1975년 2월 16일 33회 생일을 최초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다음 해인 1976년에 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1986년부터 생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연장함으로써 김일성 생일과 같은 수준의 명절로 만들었고 1995년에는 이 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했다. 아버지에 이어 그 아들의 생일도 임시공휴일을 거쳐 '국가적 명절'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는 2월 16일과 4월 15일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매일 전하면서 온 세계가 함께 이 날을 축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민속명절과 세시풍속의 변화

우리 민족 4대 명절인 음력설,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5월 "봉건잔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 되살아나게 되었다. 북한당국이 민속명절의 의미를 되살리게 된 것은 이산가족찾기사업과 해외동포의 방문에 맞추어 남쪽 주민과 해외동포의 호응을 얻고자 한 측면도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쩍 '우리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선전적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다.

북한당국이 4대 민속명절 지키는 풍습을 공식적으로 다시 인정한 것은 1988년 추석을 휴무일로 지정한 이후의 일이다. 그 뒤 1989년 음력설과 단오, 한식 등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해당

명절을 앞두고 며칠 전에 내각에서 올해 음력설이나 추석은 휴무일로 정해서 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곧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내각에서 그 해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민속명절을 지키는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마다 북한에서 민속명절을 지키는 강도가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마침내 2003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음력설을 기본 설명절로 삼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월 대보름과 단오, 추석 등 다른 민속명절에 대한 대접도 크게 달라졌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북한의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음력설이 되면 좋은 옷차림으로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거나 시내 유원지를 찾아 산보하면서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한다. 또한 북한 전역의 ‘급양봉사망’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던 민속음식을 만들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봉사한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나 막상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민속명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자신은 한 번도 음력설을 명절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놀이를 유쾌하게 했던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별초하는 풍습은 여전히 지켜 왔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다. 다만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생활문화에 따라 설날에 세배를 하지 않고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 경우에도 먼저 집 안 벽면에 걸어 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앞에 인사를 올리고 난 뒤에 조상을 추모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제4절 ⅢⅢⅢ 의식주 생활과 배급제도의 변화

2002년 7월 1일, 북한당국은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텃밭과 돼기밭의 면적을 대폭 늘리고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물가와 임금·환율을 대폭 인상하면서 국가계획 권한의 일부를 하부 단위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은 북한당국이 그 동안 유지해 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당국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총체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고 배급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고수해 오던 계획경제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은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우선 노동자와 사무원을 비롯한 일반근로자는 월급이 평균 18배 올라 매달 2,000 원에 이르는가 하면 광산의 채탄공이나 기타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6,000 원을 받는 등 명목상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시행 1년 이상 지난 뒤 이

조치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안전원과 보위원 등 이른바 ‘정액제 노임’을 받는 집단 밖에 없다고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주장한다.

대다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생산 할당량을 달성해야 정해진 노임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원료가 없고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기계가 다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생산 할당량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수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생활에 따른 부담에 눌러 지내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주어진 수입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알아서 소비생활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어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영향을 행사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가 운영해 온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얼마 전까지 북한당국이 고수해 온 배급제도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 실태를 살펴 본 뒤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한 변화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다.

1.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사회주의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급제도의 기본 취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요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생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한 분량만큼 공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배급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국가는 주민들이 언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쓰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과정에서 미리 계획한 종류의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생산해야 하며 수송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

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물품 수송이 늦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과 수송·분배 과정에 차질을 빚는 일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처음 수요를 예측하던 시점과 나중에 물건이 공급되는 시점 사이에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요량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과 수송, 공급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전혀 없고 언제나 정해진 종류의 물건을 정해진 분량만큼 받아서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한 치의 불만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에 대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전제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당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품으로 정하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¹⁴⁾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공급품의 수를 줄이고 개별 품목에 대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생산과 수송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과 사람의 실수와 탐욕 등에 따라 오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북한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서 이와 같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물품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



14) '자유판매품'이란 명목상 배급표·배급카드에 구매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자유판매품이란 그 명칭에서부터 북한당국이 해당 품목의 생산과 수송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당국도 배급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가체제를 총동원하여 주요 공급품의 생산과 수송을 보장하는 정책을 고수하느라 자유판매품의 공급에는 그만큼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판매품으로 지정해 놓은 물품의 경우, 물건의 가격이 월급의 몇 십 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고 공급량이 많지 않아 일반주민이 국영상점을 통해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의국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령-당-인민이 일체감을 이루는 사회라고 강조하지만 수령과 당이 잘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대다수 북한의 주부들은 평소에 식량과 각종 물품을 조금씩 아껴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배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장마당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장·기업소 등에서 생산하는 국가 소유의 상품을 가져다 개인적으로 팔아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조달하는 행위를 '조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2. 배급제도 하의 의식주 생활

북한당국은 오랫동안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몇 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살펴보면 계층에 따라 공급품이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지만 막상 대다수 북한주민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크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간부’들이 ‘평민이나 평백성’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응이다. 그 정도 특해도 누리지 않으려면 누가 ‘간부’가 되려고 그렇게 ‘아글타글’ 애를 쓰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 이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배급

제도의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먼저 북한주민들이 기존의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의식주 생활을 영위해 왔는지 살펴 보겠다.

(1) 식생활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의식주로 불려왔던 관용적 어구를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의식주'로 표현해 왔다.¹⁵⁾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먹을 것을 조달하는 일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공급 등급을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 공급대상자로 세분해 놓고 쌀과 옥수수 등 주곡을 비롯하여 각종 생필품을 차별적으로 배급해 왔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적 요인도 생필품 공급 차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은 식량배급표에 따라 월 2회, 15일을 기준으로 생필품을 배급받아 왔다. 출장이나 여행을 갈 경우에는 미리 '양표'를 발부받아 식당에 가서 돈과 함께 그 표를 내면 식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식당에 가서 양표와 돈을 내도 식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래 북한당국이 운영해 오던 배급체계에 따르면 1일 식량공급량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5) 1982년 김일성 주석은 "쌀은 곧 공산주의"라고 선언함으로써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 일이 있다. 또한 오늘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통일부, 『2004 북한개요』, p.336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일 식량공급량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수	1일 식량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의 갱내외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로자, 투병중인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기타 부양자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대체로 배급표와 배급카드를 기준으로 식량배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5일에 한번씩 배급표를 받는다. 배급표의 모양은 <그림 7-1>과 같이 왼쪽에는 해당 노동자의 급수와 1일 식량공급량, 배급시기, 배급소의 위치 등을 적어 넣고 오른쪽에는 각각 하루 공급량을 적은 15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1일 배급량을 공제한다.

〈그림 7-1〉 배급표의 모양

3급 700g 11월 상순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도,시,군의〉 식량 량정과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 자료: 좋은 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2000, 정토출판, p.69

연로보장을 받은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받기 전의 자녀들, 전업주부로서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준다. 이 때 세대주가 직장이나 무단결근으로 1일 배급량 이상을 공제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식량배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가격을 적용해 왔다. 식량배급에 적용해 온 국정 소매가격은 유상이라고 하지만 쌀의 경우 kg당 8전, 잡곡은 kg당 6전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예를 들어 3급 700g을 공급받는 노동자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가정에 세대주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사는 아내, 소학생 딸 1명, 중학생 아들 1명, 연로보장을 받은 어머니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15일에 한 번 공급받을 식량의 양은 본인의 몫으로 700g×15, 어머니와 아내의 몫으로 300g×15×2, 딸의 몫으로 400g×15, 아들의 몫으로 500g×15를 전부 더 한 33kg이 된다. 만약 33kg을 전부 쌀로 공급받겠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이 배급소에 배급표와 함께 내야 할 돈은 2.48원에 불과하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근로자 한 사람의 월급이 대략 100원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달 식량구입에 드는 돈이 5원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배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북한주민들이 식량구입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세대주가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서 33kg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받아 오게 된다. 만약 무단결근을 1회, 지각을 3회 했으면 자신의 몫에서 이틀치를 제외한 13일분과 다른 식구들의 배급량을 탈 수 있는 배급표를 받게 된다. 이 배급표와 함께 배급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국정 가격으로 계산하여 배급소 출표창구에 낸다. 배급소에서는 배급표를 받고 그 세대의 배급카드를 찾아서 배급량이 33kg이라고 적은 배급카드를 내준다. 이렇게 배급량을 적어 넣은 배급카드를 가지고 공급창구에 가면 그 곳에서 해당 분량만큼 식량을 내준 뒤 배급카드를 다시 받아서 출표창구로 보내 다음 번 배급을 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일반노동자들은 15일에 한 번씩 식량배급을 타지만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배급을 준다. 농민이 받는 배급량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양이 국가계획의 몇 %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속한 작업반의 1년 생산량이 계획의 80%를 달성했으면 배급량도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특히 북쪽의 국경 근방에서는 몇 달씩 식량배급이 중단되기도 하여 일부의 지역·계층·연령 층에서는 심각한 기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당국은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예전과 달리 구황식품인 감자·고구마·도토리까지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에 포함시키고 장마당에서 식량거래를 묵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스스로 장사를 하여 번 돈을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생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특히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핵심계층을 제외한 다른 집단에 대해 배급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은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

송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중앙방송과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이 때”라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의생활

배급제도는 의생활 분야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의복의 공급은 사실상 식량공급보다 먼저 중단되었다. 따라서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오늘날 의복은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구해 입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학생복은 배급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학생복의 경우, 예전에는 2년에 한 벌씩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요즘에는 국정가격으로 유상 공급하는데 물량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정가격으로 학생복을 구입하면 장마당에서 살 때보다 훨씬 ‘눅은 값’으로 구할 수 있어 학생과 부모들이 선호한다. 그렇지만 원하는 사람은 모두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만성적인 물량부족을 겪어 온 북한에서는 학생복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복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몸에 맞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앙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 중앙공급 대상자는 최고급 모직물에서 시작하여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나쁜 옷감을 받았다. 또한 의류특별제를 실시하여 예술가와 기자, 교원 등 특수집단과 당과 내각의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히 좋은 옷감과 의복을 공급해 왔다.

반면 일반주민들은 의복보다 옷감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것도 차

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영상점이나 직매점보다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예 일상적인 의복 배급이 중단된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 의복 외에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판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농민시장과 장마당을 통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썼다.

북한주민의 의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구호 아래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북한당국은 특히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면서 여학생의 교복으로 흰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공급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블라우스와 점퍼 스커트 형태로 바꾸기도 했다.

1979년 4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린 후 외국인과 해외교포의 왕래가 많은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머리모양과 화장법에 까지 넓혀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당국이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전제아래 신체를 보호하는 의복의 1차적 기능만 강조하다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멋을 표현하는 2차적 기능도 인정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려든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주민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김일성 민족'다운 옷차림을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민족전통'의 구호를 강조하면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널리 칭송하는 보도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¹⁶⁾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한복이 일상복의 모습에서 일찌감치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그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유독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은 민족정신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소행'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3) 주생활

북한당국은 1990년 제정한 민법 제50조에서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주민들은 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신의 직위와 성분에 따라 이른바 ‘땅집’으로 부르는 독립가옥이나 일자형의 하모니카 아파트를 할당받아 사용해 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일반주민들의 주택보급률은 평균에 미치는 못하는 50~60%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주택을 배치받아 입주할 권리를 명시한 ‘입사증’을 받는 것은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¹⁷⁾ 그러나 일단 입사증을 받아 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주택임대료와 수도·전기료 등 비용부담이 낮아 집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당



16) 조선중앙텔레비전은 2003년 8월 27일 “민족의 자랑 조선옷 치마저고리 제1회”를 방영한 이후 11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선옷 전시회 방문기를 내보냈다. 방영일자는 다음과 같다: 제1회 8월 27일, 제2회 11월 2일, 제3회 11월 5일, 제4회 11월 8일, 제5회 11월 9일, 제6회 11월 11일

17) 최주환, 『북조선 입구』, 지식공작소, 2002, pp.115-118

국에서 주택임대료와 수도·전기료 등을 저렴한 수준에서 일괄 적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누구나 국가가 배치해 주는 주택을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0.3%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정도였으나 이 조치 이후 주택사용료와 수도·전기료 등이 많이 올라 주민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개인의 직위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국의 필요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배정받으려면 해당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사증을 받기까지 1~3년이 걸린다고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4~5년이 걸려야 주택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살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북한당국도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주라는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년) 동안에 23~30만호의 주택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5만세대 건설에 그쳤다.

주택의 형태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노동당의 시책에 따라 주민동원의 용이성, 노동력의 조직화·통제 등을 고려한 집단거주형태가 많다.

북한당국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음성적인 매매거래가 묵인되어 왔다고 한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써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당 간부는 아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에 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집을 교환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세간살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

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집안의 주부라면 누구나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나 녹음기·선풍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어 놓는 경우가 많고 새로 혼인을 하는 신혼부부도 그 정도 구비하면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 및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상 가구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3. 7 · 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에 따른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기초 생필품을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독점적인 배급을 하는 주체로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배급제도의 운영이란 당국이 운영하는 국영상점 이외에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국가체제에 반항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 생필품 구입의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배급제도는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당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로 작용해 왔다.

이와 같은 배급제도의 사회적 기능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사회의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위로부터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 순응의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양상이 변혁기에 들어섰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원칙이 그 가치를 잃어가는 반면 개인의 이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경

제'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래 아무리 완벽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라고 해도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경제'의 영역이 부차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텃밭·부업밭의 경작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바뀔 쓰는 것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소위 '사회주의 경제의 완성'을 선언했던 시절에도 공식적으로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농민시장'¹⁸⁾이라 하여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예 농민시장의 상설화 단계에 들어서 지역마다 장마당이 매일 열리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는 7~8%의 수수료를 내면 '가내방'(가내작업반 가판대)이라고 하는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도 묵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본래 북한당국은 장마당에서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배급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간헐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통제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은 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중국과 교역은 국가기관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 형태로 중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배급체제의 마비로 인해 북한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전역에는 그야말로 '전 주민의 상인화'

18) 농민시장은 1950년 북한당국이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1, 11, 21일에만 허용한 것으로, 협동농장 농민들이 생산한 돼지고기, 참깨,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자유판매가격에 의해 매매한다. 북한은 그 동안 경제사정에 따라 농민시장의 규제와 허용을 되풀이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상이 나타났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필품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 십 배에 이르고 있는데, 1997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 현상을 보여오다가 다시 안정화 추세를 보여 왔다.

2002년 7월 1일 북한당국은 임금과 물가를 대폭 인상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당국이 더 이상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생필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식량과 생필품의 국정가격을 장마당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평균 25배나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 올리고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기업과 소속 노동자에게 업적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여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임금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 소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북한당국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앞으로는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¹⁹⁾

한편 북한당국은 의무교육제도와 무상치료제·사회보험제 등 소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당국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차료를 인상하고 수도 및 전기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배급제도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감



19) 「조선신보」, 2002.7.26

수해 왔던 재정적자를 더 이상 당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혔다.

사실상 북한당국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쌀 1kg을 82전에 구매하여 8전에 공급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말하자면 쌀 1kg을 판매할 때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74전의 재정적자를 감수해 왔던 것이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1kg당 58전에 구매하여 6전에 공급했다. 그런데 7·1조치 이후 쌀 1kg의 구매가는 40원으로 책정한테 반하여 배급소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44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쌀 1kg을 판매하면 당국의 입장에서는 4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북한당국은 노동신문과 조선신보 등 주요 매체를 동원하여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성공하려면 북한당국이 생필품의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량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장기적인 투자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당국의 주도로 이와 같은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생필품 부족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1
-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 동아출판사, 1994
-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 최주환, 『북조선입구』, 지식공작소, 2000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3
-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 _____, 『1995 북한개요』, 1995
- 통일교육원, 『다가서는 남북, 준비하는 통일』, 2000
- _____, 『북한이해』, 2003
- _____, 『북한이해』, 2002
- _____,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 국정원, <http://www.nis.go.kr>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Andrei Lankov,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London Hurst & Company, 2002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 남대현, 『청춘송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 1987

북한 이해

인 쇄 일 2004년 2월 27일
발 행 일 2004년 3월 5일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2/팩스 02)901-7088
기 획 키트디자인 전화 02)548-1976
편집·인쇄 양동문화사 전화 02)2266-0892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